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나라경제

제 11 호
1 9 9 1
10

나라경제·1991년 10월 1일 발행·제2권 제10호·1990년 11월 14일 등록·등록번호 라-4869호 발행처/국민경제제도연구원 136-2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전화 (02)561-1400 1991년 8월 30일 제 3 종 우편물 (나급) 인가·월간·



특집 / 북방정책과 남·북한 경제협력

만남 / 언론인 류근일이 만난 김진현 과학기술처장관

경제정책해설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국산화 시책**
농지소유상한제도의 개혁

논단 / 미국의 통상정책과 대응방안

이달의 초점 / **금리자유화**

새로운 문물의 수용으로 實事求是의 학문을 追求



이수광(李晬光, 1563~1628)

李晬光은 조선 중기의 실학자로서 호는 芝峰, 자는 潤卿, 시호는 文簡이었으며, 본관은 全州이다. 1585년(선조 18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의 관리가 되었으며, 1590년(선조 23년)에는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바 있다. 뒤이은 임진왜란 때에는 경상우도 방어사 趙徽의 종사관으로 종군하기도 하였다.

광해군 때에 두차례에 걸쳐 주청사로 명나라의 연경에 왕래함으로써 서양제국의 발달한 문명에 대한 견문을 넓혔는데, 이때에 마테오리치의 『천주실의』 2권, 『교우론』 1권, 그리고 『속이담』 6권 등을 가지고 돌아와 최초로 서학을 도입하였다고 평가된다.

1614년(광해군 6년)에는 力著 『芝峰類說』을 저술하여, 서양의 사정과 천주교 지식을 국내외에 널리 소개하였다.

이수광은 광해군에 의한 인목대비 폐모사건으로 두문불출하다가 인조반정으로 재등용되어 도승지·대사간 등을 지냈는데, 1625년(인조 3년)에는 『萬言箚子』를 지어 時政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실학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수광의 저서로서는 『지봉유설』 외에도 『採薪雜錄』과 시문집인 『芝峰集』 등이 전해지고 있다.

國家發展의 근본은 士農工商이 각자 本業과 分수를 지키는 데 있음을 力說

『芝峰類說』은 芝峰 李晬光이 세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의 경험에서 얻은 폭넓은 見聞을 토대로 저술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전서로서 20권 10책이던 방대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李晬光은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 되도록 주관적인 견해는 피하되, 고서나 고문에서 典據를 널리 수집하거나 인용하는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 책에 인용된 문헌은 348종이었고, 인용된 인명도 무려 21,265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은 물론 중국·일본·안남(安南: 베트남)·유구(琉球: 오키나와)·섬라(暹羅: 타이)·자바·말레이시아 등 남양제국, 그리고 멀리는 프랑스·英國 같은 유럽의 일까지도 소개하여 우리 민족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대하고 새롭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봉유설』의 卷1에는 天文·時令·災異, 卷2에는 地理·諸國, 卷3에는 君道·兵政, 卷4에는 官職, 卷5에는 儒道·經書, 卷6~7에는 經書·文字, 卷8~14에는 文章, 卷15에는 人物·性行·身形, 卷16에는 言語, 卷17에는 人事·雜事, 卷18에는 技藝·外通, 卷19에는 宮室·服用, 卷20에는 植物·卉木·昆蟲 등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李晬光의 저술에서 나타나는 경제사상은 봉건적 社會體制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는 士農工商이 모두 本業과 分수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잘되게 하는 근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운위되는 各經濟主體들이 각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는 또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가운데 貿易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對外交易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음은 대단한 卓見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後世에 貿易立國을 주장한 朴齊家의 사상도 여기에서 그 淵源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그는 중국 등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염색, 나전세공 등 우리의 전통 手工業의 발전을 촉구하는 한편 상품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화폐유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으로써 商工業의 발전을 통한 民生安定을 추구하였다.

이수광은 또한 학문에 뜻이 있더라도 '실용할 수가 없어서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면 학문을 성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여, 학문의 현실성과 실천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학문적인 潮流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동안 야기된 정치·사회·문화 각분야의 혼란을 통하여 기존의 주자이념의 비현실성이 폭로되었으며, 또한 異端으로 배격해 오던 양명학 및 천주교가 유행됨으로써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실학이 배태되는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봉유설』에서 나타난 새로운 신학문의 潮流는 강한 계몽적 의의를 가지면서, 뒷날 磻鷄의 『隨錄』, 星湖의 『僊說』, 燕巖의 『熱河日記』, 楚亭의 『北學議』, 茶山の 『輿猶堂全書』 등 저명한 실학서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라 경제

1991.10. 제11호

권두칼럼

成長·福祉를 위한 정부의 역할 / 임종철·서울대교수 6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情報通信産業의 육성을 통해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
- 체신부 정보통신국 / 이백만·객원기자 8

경제수상

홍선대원군과 명치유신 / 김인호·경제기획원 54

환경보전은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요체 / 한상욱·환경처 57

레닌언덕에 서서 / 강만수·재무부 58

직업병 연구 유감 / 안영수·노동부 59

출입기자코너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야 / 방민준·한국일보 기자/상공부 118

철도의 是와 非를 말하자 / 임철·매일경제신문 기자/교통부 119

이달의 초점 · 금리자유화

금리자유화 보완대책이 선행되어야 / 남주하·한국경제연구원 60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 / 김종창·재무부 63

노영하 비독칼럼

소련의 비독熱 66

나라경제 화랑 72

나라경제 만평

글쎄, 고집꺾고 어서 함께 가자니까! / 이원복·덕성여대 교수 73

특집 북방정책과 남북한 경제협력

북방정책의 경제적 의의 / 김윤광·경제기획원 14

對北方交易의 현황과 전망 / 정태신·상공부 19

국내기업의 對北方投資 / 김창록·재무부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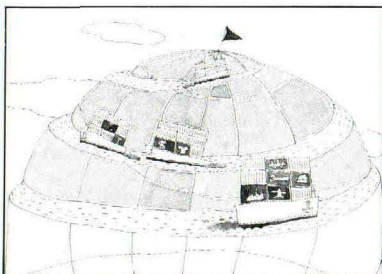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협력 / 조기봉·동력자원부 27

소련·동구와의 과학기술협력 / 정윤·과학기술처 32

남·북간 경제협력의 추진현황과 과제
/ 변재진·경제기획원 36

統獨 이후의 독일경제가 남·북한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 배진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40

북방 및 남북한 교통분야 협력전망 / 김규신·교통부 43



경제정책해설

개방·국제화에 따른 巨視經濟政策의 운용방향 /이근경·경제기획원	76
農地所有上限制度의 개혁 /안중운·농림수산부	79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국산화시책 /장기중·상공부	83
국내 가스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권태운·동력자원부	87
경제정의 확립을 위한 地價公示制度 /추규선·건설부	92
장애인의 再活과 사회참여를 위한 福祉施策 /김지영·보건사회부	97
社內勤勞福祉基金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박길상·노동부	100
철도공사의 설립 /최현호·철도청	103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 그 추진현황과 계획 /조영화·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6

만남 · 언론인 류근일이 만난 김진현 과학기술처장관 기술선진국 진입의 견인차	68
--	----

경제동향	
나라안 내수과열 속에 국제수지 · 물가 불안 재현 /김대기·경제기획원	111
나라밖 최근의 국제금리 및 환율동향과 전망 /안중조·산업연구원	115

해외통신	
일본의 생산성 원천 /강응선·경제기획원/일본경제기획청	46
EC 공동농업정책 개혁방향을 보며 /이관용·농림수산부 /주EC대표부	49
영국의 해운정책 /최낙정·해운항만청 /주영한국대사관	52

나라경제논단	
美國의 통상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이희범·상공부	120
경상수지적자 70억 달러, 크게 우려할 수준인가 /김영동·경제기획원	124
‘과학꿈나무’ 육성과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확보 /김남석·과학기술처	128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치가 및 관료의 관계 -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최형규·농림수산부	131

경제부처동정 정책일지 · 인사이동/편집실	135
-------------------------------	-----

나라경제 기사판/편집실	140
---------------------	-----

경제부처 발간자료안내 /편집실	141
-------------------------	-----

나라경제를 읽고	152
-----------------	-----



만남 / 김진현 과학기술처장관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체신부 정보통신국



成長 · 福祉를 위한 정부의 역할

林 鍾 哲

서울대 교수

‘작은 정부’를 바라는 목소리가 일더니 금년에는 팽창예산에 대한 反對論이 만만치 않다. 필자는 경제부처가 좀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작은 정부’가 좋다거나 가능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경제가 복잡해지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고 또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쾨바르트(W. Sombart)는 자본주의를 ‘지휘권을 가진 생산수단 소유자인 자본가와 無所有의 經濟客體인 노동자가 시장이란 機構를 매개로 협동하는 유통경제조직’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오늘날 國際實相은 자본가가 배타적으로 결정하고 시장이 모든 것을 조정해주는 단계를 훨씬 넘어섰고, 스미스(A. Smith)에 의해 司法 · 國防 · 公共事業에만 한정되었던 정부의 기능도 프리드먼(W. Friedman)에 의하면 配慮者 · 規制者 · 企業家 · 審判의 네 기능으로 확대되었다.

정부기능을 축소하기 어렵다면 더욱더 효율화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만 정부는 受任機構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필자가 생각할 때 정부에 대한 시대적 요청은 福祉 즉, 배려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란 따지고 보면 모든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당연히 중시되어야 한다. 스웨덴을 보면 복지지출이 중앙정부지출의 50.8%이고 여기에 교육 · 보건 등 廣義의 복지까지 합하면 60.9%가 된다('87년). 배려자기능을 옹기 수행하기 위하여 스웨덴정부는 稅收의 28.5%를 사회보장 釀出金으로 받아들이고 GNP에 대한 정부수입비율은 무려 44.2%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복지는 善意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대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선의보다는 물질적 기반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인당소득이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高速成長은 아직도 絶對命題인데 최근 정부와 일부 기관에서 低速成長論 또는 성장잠재력 하락론이 나오는 것은 첫째, 역사적 통찰이 옳지 못하고 둘째, 經濟運用에 대한 자신을 상실한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나는 우리 경제가 지금도 두자리수 성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보릿고개를 힘들여 넘던 '60년대를 포함하여 '62~'90년간의 연평균성장률은 8.7%였고, 성장률이 6%에도 못 미친 '62·'65·'72·'80·'81년의 예외적 저성장의 해를 빼면 9.9%란 성장률을 우리는 실현했었다. 지금의 우리와 실질적으로 비슷한 단계에 있던 '59~'74년간 日本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0.3%였는데, 비록 국제경제적 여건은 크게 나빠졌지만 축적된 자본과 기술이 있고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국민경제 관리능력이 '60~'70년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진 우리 경제가 더는 못 바라도 2000년까지지만이라도 두자리수 성장을 하여 先進國으로 진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패배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한다.

국민이 갖고 있는 성장에너지를 極大化하여 안정적 고도성장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 정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생산과 소비 양면에 있어 가장 큰 경제주체로서 그 비중은 매우 크다. 또



지금은 '60~'70년대처럼 시시콜콜 지시·간섭할 수도 없게 되었고 하여서도 안되지만 여전히 민간경제부문을 지도·규제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이 기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可謂 절대적이다.

이제 다시 루이스(A.Lewis)의 말을 빌려 경제성장에 관련된 정부기능을 음미해 보자.

그는 정부의 기능 중 첫째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들었다. 당장 成長隘路要因이 되고 있는 에너지·수송 등 狹義의 사회간접자본뿐 아니라 주택·교육 등 廣義의 사회간접자본도 정부책임 아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노동·근검절약·가족계획·외국인기업활동·이윤추구·갖가지 禁忌·새로운 기술 등에 대한 국민적 태도와 가치관을 성장에 유리하도록 바꾸고 마련해 가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소비·투기·긋은 일 힘든 일을 기피하는 태도·지나친 외제선호와 그 反對인 외국상품 거부 및 외국인 배척 등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여러 현상 역시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자원이용·소득분배·통화량 결정·경기변동 조절·완전고용·투자수준 결정 등도 국민경제가 순환하고 성장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 모두가 정부고유의 책임임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루이스는 정부역할을 말하기에 앞서 개발의 지 다음으로 機構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기구를 창설하는 것 역시 정부역할 중 하나라는 것이다. 물론 하이에크(F.A. Hayek)의 말대로 機構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더 좋지만, 石炭公社 등 4大公社만 남기고 모든 기업(귀족재산)을 불하한 것이 당시로서도 옳았는가(李承晩정부), 11개部處가 30개 投·出資機關과 수백의 子會社를 갖고 경제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지금

으로서는 옳은가 하는 것도 기구와 관련하여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公私 경제주체를 위해 공정한 行爲準則을 마련하는 審判機能 역시 중요하다. 準則은 공공부문·민간부문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준칙위반에 대한 制裁는 有效性을 가져야 한다. 假想的인 예로 지금 공급이 크게 모자라는 시멘트의 경우 會社當 평균 연간 1억포대를 판매한다고 할 때 포대당 1백원만 그 값을 인상해도 부당이익은 1백억원이 된다. 또 자동차회사가 소형 승용차 20만대를 국내에 팔았다고 할 때, 대당 10만원만 부당인상해도 폭리액은 2백억원이 된다. 法을 하는 사람들의 貨幣감각 탓인지 몰라도 벌칙은 유명무실하다. 不公正去來利益을 모두 몰수하고 다시 그만큼의 벌금을 과하지 않는 한 불공정행위를 할 유혹은 사라지지 않고 급하면 누구든지 그 길을 취할 것이다.

과소비·퇴폐산업 등 성장잠재력을 좀먹는 非理현상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간단히 없앨 수 있다고 본다. 접대비를 損費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치성 개인서비스를 받을 財源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에 대해 사치성 서비스산업 종업원수와 급여를 추정하여 소득세만 제대로 원천징수하면 결국 그 돈은 가격으로 전가될 것이다. 그 결과 수요는 줄고 공급가격은 상승하여 사치형 개인서비스산업이 흥청거리고 노동력이 물리는 일도 없어질 수 있다.

1인당소득이 1만5천달러 정도가 될 때까지는 高速成長은 절대명제이다. 그때까지는 국민과 더불어 정부도 성장의지를 잃지 말아야 하는데, 버려야 할 지배의지는 버리지 않고 지녀야 할 성장의지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가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오늘의 한국경제를 완전히 관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성장을 통한 복지·안정 실현으로 政策基調를 재조정하고 이를 위해 정부기능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본문

情報通信産業의 육성을 통해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指向

체신부 정보통신국



정보통신국은 정보화시대의 선봉으로
국가전체의 정보통신정책을
총괄지휘하고 있다.

객원기자 / 이백만(서울경제신문 기자)

체신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미지는 어떨까? '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체국과 집배원, 짜증나는 전화적체현상 등을 떠올렸을 것이다. 지금도 나이든 사람 가운데는 더러 이 같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체신부는 '과거의' 체신부와 확실히 다르다. 단지 기구가 커졌다거나, 속된 표현으로 꺾발이 세진 것이 아니라 업무의 질이 무척 고급스러워졌고 국가경제정책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다. 앞으로도 체신부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강화되



행정·공안·국방·교육연구·금융 등 5개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산망사업의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었다.

면 되었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체신부의 위상이 커진 결정적인 요인은 정보통신산업이 國家基幹産業으로 자리잡으면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신부 정보통신국이 각광을 받으면서 핵심적인 정책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정보통신산업.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비근한 예로 우리는 걸프전쟁에서 위성전화기로 기사와 화면을 보낸 CNN과 그렇지 못한 여타 언론사의 현격한 우열을 확실히 보았다. 일상 경제생활에서 이같이 극명한 비교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준 사건임에 틀림없다.

정보통신산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잘 알지만 이를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반도체·광섬유·컴퓨터 등 최첨단산업의 육성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체신부 정보통신국은 바로 이 같은 중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6共和國 초기에 발족된 행정개혁위원회가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며 각급 행정부처의 기구축소를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유독 체신부에 정보통신국의 신설을 주장한 것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정보통신국은 이러한 배경하에 체신부의 정보통신정책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기능을 흡수하여 지난 '90년 12월

31일에 발족하였다.

초대 국장은 정보통신행정의 베테랑인 鄭弘植씨(46). '71년 체신부 행정사무관으로 관계에 발을 들여 놓은 鄭국장은 '79년부터 '87년까지 약8년간 청와대 경제담당비서관으로 전자·통신·정보산업을 담당,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5공화국 경제정책의 가장 큰 치적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TDX(전자식 교환기) 개발·보급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전화 한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특권으로 여겨지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질곡이 TDX 개발

보급으로 말끔히 해소된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시골 어디에서도 세계 각국으로 시내전화하듯 전화를 걸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구닥다리 체신부를 오늘의 체신부로 격상시킨 吳明前체신부장관과 콤비를 이루어 정보통신정책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공로자로 평가받고 있다.

朴正熙대통령 시절 最長壽 비서실장과 재무·상공장관 등을 역임한 金正濂씨는 어느 私席에서 "吳장관을 한번도 만난 적은 없으나 그사람만큼 훌륭한



컴퓨터 대중화 시대. 이제는 회사나 가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한 일을 해낸 사람은 드물다”며 체신부의 정보통신정책을 극찬한 뒤, “정보통신산업에서 뒤지는 한 實物經濟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금융 등 서비스부문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통신국의 발족은 뒤늦은 감마저 있다. 정보통신국이 현재 추진하고있는 사업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내용을 훑어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다. '87년 5월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설치되었던 전산망조정위원회는 '89년 6월 체신부로 이관되어 지금은 정보통신국이 관장하고 있다. 행정·공안·국방·교육연구·금융 등 5개부문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는 국가전산망사업의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었다. 특정은행의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이 아무 은행에서나 예금을 인출할 수 있고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것도 금융전산망 덕분이다. 또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사항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인적사항이 파악된다. 가구별 주택소유 현황도 전산화되어 있어 부동산 투기 억제에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행정전산망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전산망의 활용가치는 이밖에도 무궁무진하다.

더 중요한 사업의 하나는 국산컴퓨터의 개발이다. 정보통신국은 '80년대의 TDX에 이어 '90년대에는 국산컴퓨터개발을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초까지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핵심 정보통신基盤技術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기반확충 및 산업화를 촉진키 위해 국산중형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전산기 I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행정전산망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전산기 I은 외국기술을 직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한 것이다. 대신 주전산기 II는 순수 국산기술에 의해 개발되었다. '타이컴'이라 명명된 주전산기 II는 개발이 끝나 시험가동에 성공했다. '타이컴' 개발에는 정부예산과 민간

자본을 합쳐 모두 2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투입인력만도 연 932명이 나 된다. 전자통신연구소와 금성사·대우통신·삼성전자·현대전자 등 국내 4대 민간 전자회사가 참여한 공동작품이다.

鄭국장은 타이컴 개발의 의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중형컴퓨터가 국내기술진에 의해 개발되어 외국 컴퓨터 회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컴퓨터 제조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품화에도 자신이 있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타이컴'은 금년말부터 국내전자회사에서 본격적인 量産體制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들 생산량의 대부분은 국가전산망에 투입될 것이지만 民需用으로도 공급될 전망이다. 연간 생산량은 약 200~30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체신부는 '타이컴' 개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첨단기술인 주전산기 III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전산기개발사업단을 구성, 상공부·과학기술처 등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주전산기 III의 개발비용은 약 3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정보통신국 관계자들은, 2000년대초가 되면 우리나라도 중형컴퓨터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형컴퓨터 개발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이만큼 크다는 얘기다.

체신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보사회종합대책도 정보통신국이 관장하고 있다. 정부는 21세기초에 선진복지국가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범부처차원에서 12개의

정보화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2000년까지 투입될 예산이 총 52조원(재정 5조원, 민자 47조원)이나 된다. 금년도 정부예산(일반회계)의 2배 가까이 되는 규모다. 체신부는 경제기획원이 주관하고 있는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이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연내에 국가사회정보화5개년계획('92~'96년)을 중기실행계획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정보사회종합대책이야말로 체신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중장기사업으로 이 정책의 成敗여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곳곳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주전산기개발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체신부는 정보사회종합대책을 국가사회의 정보화촉진·정보유통기반확충·정보산업육성·정보기술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정보화 적응능력제고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정보유통기반 확충의 경우 학교교육용 컴퓨터 3만4천대, 情報檢索端末機 4만5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는 정부행정기관이나 기업은 물론이고 어지간한 가정집에서도 개인용컴퓨터 1대씩은 보유하고 있다. '컴퓨터 文盲'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컴퓨터 대중화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국은 이런 추세에 부응, 정보화시대의 선봉으로 국가전체의 정보통신정책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산업육성에 우리나라만 열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일본·영국·독일 등의 선진국은 이미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달해 있다. 특히 이들 선진국은 정보통신산업을 자유화하고 경쟁체제를 도입

**체신부는 2000년대초까지
정보통신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핵심 정보통신 基盤技術을 확보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확충 및
산업화를 촉진키 위해
국산중형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추구하고 있다. 신흥공업국 역시 이에 뒤질세라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또한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다루는 GATT(관세 무역 일반협정)의 UR에서도 이 분야의 개방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개발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영락없이 통신식민지가 되어버릴 공산이 크다. 통신은 인체에서의 신경이나 마찬가지로, 외국이 우리나라의 통신부문을 장악해 버렸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피해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막대한 것이다.

韓·美間의 通商協商에서 VAN(부가가치 통신망) 시장 개방이 핫이슈가 된 것도 이해가 가는 일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이 유아단계에 있음을 의식, 시장을 독차지하기 위해 조기개방을 강력히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통신식민지화를 우려 끝까지 버텼다. 결국 외국합작사업에 한해 개방을 약속했고, '94년부터는 외국기업의 100% 단독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94년까지 국내기반을 쌓아놓지 않으면 국내 VAN시장이 외국기업에 지배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정보통신국을 신설하면서까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국책사업으

로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이 같은 외풍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는 우리가 힘을 기르지 않는 한 당하게 되어 있다. 정보통신국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보통신국에는 韓春求정보통신기획과장, 具永甫정보통신업무과장, 金源植정보통신기술과장, 朱賢正전산망과장 등이 포진해 있다. △ 기획과에서는 지역정보화촉진·정보문화화산·정보사회종합대책 추진관리를 △ 업무과에서는 정보통신산업 육성·통신단말기 보급·요금관리를 △ 기술과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진흥·소프트웨어 육성·형식승인 표준화 업무를 △ 전산망과에서는 전산망 개발보급·정보활용방안강구·전산망조정위원회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전산망조정위원회에는 教育部·한국은행·한국통신·데이터통신 등 9개기관에서 10명의 요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하드웨어만 개발한다고 하여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는 없다. 하드웨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중요하다.

鄭國장은 이에 대해, 체신부만으로는 방대한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관련부처 및 민간기업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범국가적 공조체제의 형성을 강조했다.

통신산업이 외국기업에 지배당한다는 것은 개인간의 사사로운 전화통화를 제3자가 도청한다는 것이나 같다. IBM의 횡포는 지금도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기업들은 이를 잘 알면서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진입의 한 요건인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은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느낌이다. **남원**

북방정책의 경제적 의의

지금 세계는 東·西 양대진영의 대립·균형이라는 기본구도가 흔들리는 변혁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세계의 정치·외교·군사·경제질서의 基底를 형성해 온 東西대립은 최근의 蘇聯事態를 비롯한 북방국가 변혁의 파급 영향으로 머지않아 각분야에 걸친 세계질서의 변모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시장경제화·分權化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혁은 西方世界와 동일한 경제사회체제로 전환될지, 아니면 과거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지향했던 목표들과 절충되어 또다른 사회주의를 탄생시키게 될지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경제질서의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북방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의미는 새로운 경제교류와 협력의 場으로서 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 속의 한국경제가 디딤돌로 삼아야 할 전략적 기초조건과 결부시켜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김윤광
경제기획원 북방경제1과장

나 中·蘇 兩大國家가 포함되어 있어 '89년을 기준으로 총인구 규모는 세계의 3분의 1(32.4%)을, 總國土面積은 세계의 4분의 1(26.2%)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경제규모는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세계 GNP의 14.3%와 9% 내외의 무역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방국가들의 개략적인 경제적 위상이 풍부한 노동력과 地下資源의 보유, 소득 및 무역의 잠재적 증가 가능성, 개발과정에서의 투자기회 및 소득증가에 따른 시장규모 증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북방경제의 구조적 측면을 보면, 대내적으로는 中央計劃經濟體制下에서 생산·유통·소비 등 모든 경제분야에 걸친 통제·관리방식에

의한 경제운용과 대외적으로는 코메콘 체제하에서 물물교환과 특별우대조건하의 폐쇄적 거래방식을 유지해옴에 따라 개방과 자유를 기조로 해온 西方經濟圈의 시장경제체제와 비교할 때 운용제도와 관행상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결국 西方과의 개별경제교류상 많은 시행착오와 장애요인으로 나타나 거래상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북방국가 자체의 순조로운 경제개혁을 저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보아 북방경제의 위상은 매우 유동적이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北方國家의 경제개혁작업은 개별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사회주의 색채를 완전히 탈피하는 국가도 예상되는 등 북방국가의 경제적 의의는 향후의 구체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겠다.

또하나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북방국가의 경제적 위상이 아시아와 유럽圈域에 있어 地理的 근접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즉, 북방국가의 개혁진전 양상과 속도는 물론 서방국가와의 향후 경제

北方國家의 경제적 位相

우리의 북방정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북방국가는 비록 14개에 불과하

**북방국가들의 경제적 位相은
개혁과정에서 많은 기복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방경제질서로의 수렴과정을 통해
공통된 하나의 경제질서를 지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세계경제의 상호 무역 및 투자 증대와
확대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협력관계에 있어 예컨대 동구국가의 경우 유럽과의 經濟統合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고, 소련의 경우에도 유럽 근접지역과 아시아 근접지역을 구분하여 파악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역시 유사한 개혁패턴과 對서방 경제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방국가들의 경제적 위상은 개별국가 이외 極東시베리아와 중국의 東北3省, 그리고 중·서부 유럽을 묶는 권역별 위상을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북방국가들의 경제적 位相은 개혁과정에서의 정치·사회적 갈등 및 분출과 관련하여 많은 기복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방경제질서로의 수렴과정을 통해 공통된 하나의 경제질서를 지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세계경제의 상호 무역 및 투자 증대와 확대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서방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배타적 地域主義 움직임이 순조롭게 극복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되어 세계경제는 순수경제력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개별국가 중심의 상호경쟁과 협력이 전개되면서 環境保護와 같은 범세계적 공동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북방국가들의 경제적 의의

광물자원을 비롯한 천연자원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天然資源과 勞動力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므로 북방국가와 한국경제와의 상호보완성문제가 가장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原資材도입이 메이저 등을 통한 간접도입방식이 대부분이고 原木·原油 등 극히 일부 자원만 직접 채굴·도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북방국가가 아직 추가개발이 가능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자원의 導入先을 다원화하고 직접도입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다.

상호보완성과 경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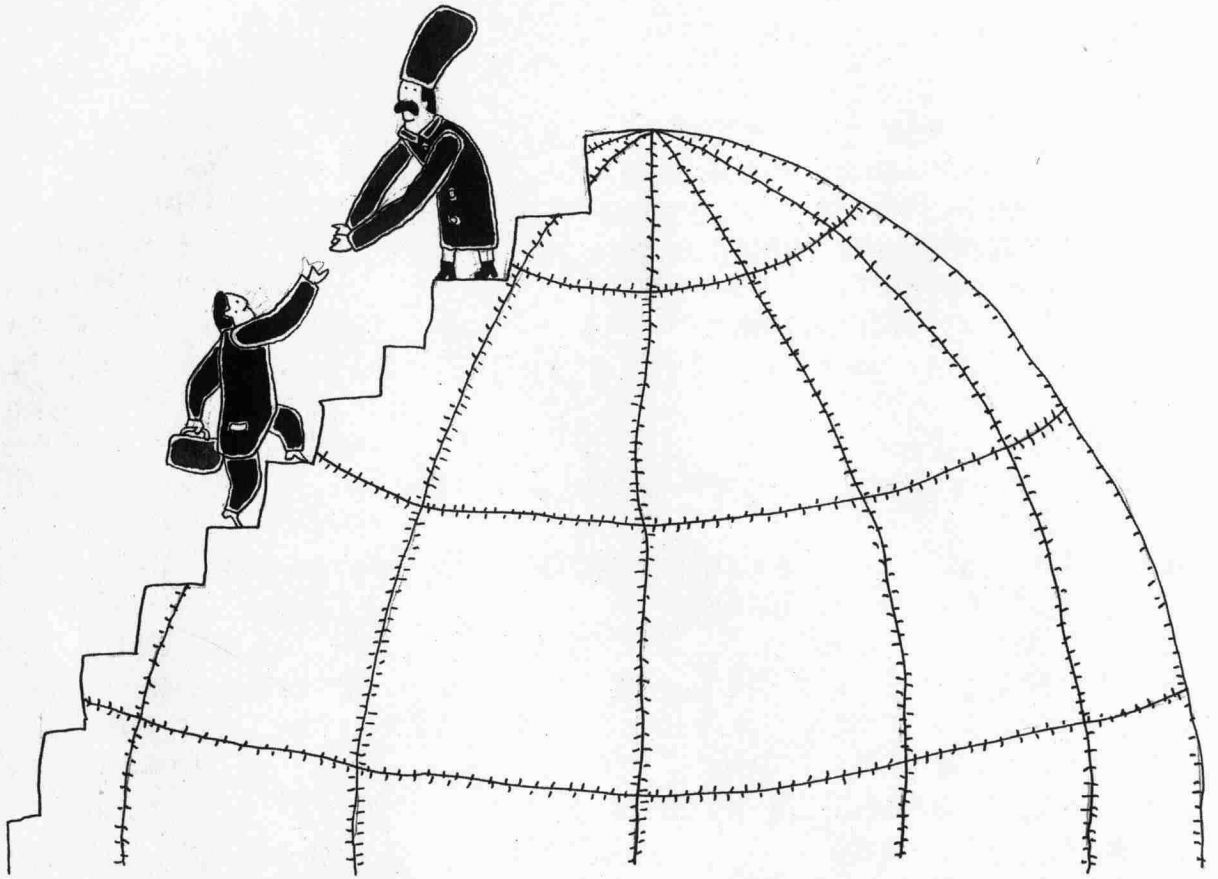
한편 북방국가들의 노동력 문제는 질적 수준이 낮은데다 勤勞倫理와 사회보장제도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산업에 따라 활용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對北方 투자의

60%를 상회하는 對中國 투자실적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低賃未熟鍊 勞動力이 필요한 노동집약업종 또는 생산공정상의 水平分業對象으로 매우 유효하다. 따라서 이 경우의 분업형태는 기본적으로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일반적인 후발개도국과 우리 경제간의 상호보완성과 일치하는 면도 있으나, 임금수준은 더 낮아 유리한 반면 사회간접자본시설 취약과 硬貨부족 등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상호보완성의 측면에서 또 다른 유형은 소련과 일부 동구국가의 경우로서 기초순수과학기술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어 우리의 생산·응용기술과의 기술적 상호보완성이 큰 경우이다. 이 경우는 오히려 垂直分業形態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으나 상품기획에서 최종 생산단계에 이르기까지 工程間 分業은 아직 곤란하다는 측면이 강해 신제품 생산에 응용하거나 공동으로 開發하는 등의 기술부문간 협력형태가 더 유용한 경우이며, 우리의 技術潛在力을 높이는 데도 유익한 생산계획단계에서의 수직분업형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엄밀한 意味에서의 相互補完關係라고는 할 수 없으나 북방국가들의 경제개혁이 추진되면서 종래의 계획경제하에서 영위되어 오던 부문중 자율화 과정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문이 있다. 유통부문과 음식·숙박·운송 등 서비스 분야가 그것인데 이들 분야는 우리의 경쟁력이 더 높은 분야에 해당되므로 다른 西方國家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進出可能性과 기회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 북방국가와의



경제교류가 진전되면서 위에서 언급한 生産要素間의 상호보완성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競合性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資源의 경우 벌써 일부 농산물은 국내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勞動集約業種 제품의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국가들과의 경쟁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 경제의 비교우위성이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경합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동북아지역 경제협력과의 관계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권역 중의 하나가 동북아지역의 공동개발과 협력

가능성이다. 북한을 비롯하여 蘇聯·中國·日本·몽골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과제는 아직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어 구체적인 협력범위와 방법 등에 있어 각양각색의 주장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원·노동력·기술·자본·시장의 잠재적인 상호보완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정치·군사적 민감성과 冷戰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 등 적지않은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빠른 속도로 협력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지역이 현재 우리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방된 自由經濟圈'을 지향하게 될 경우 비록 제한된 지역에서나마 북한의 개방과 함께 소련·중국·한반도간

의 국경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고 政治·軍事的 긴장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우리의 북방정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될 장기과제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 무역과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경우 蘇聯 內陸을 통한 유럽과 남·북한을 통한 太平洋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대륙과 바다, 東과 西를 잇는 지구의 兩大軸의 하나로서 기능하게 되며 韓半島의 地政學的 유리함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초조건은 必要條件에 불과하며 그 충분조건으로서 우리 경제가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는 중심

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산업과 기술 경쟁력이 계속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한 중계 또는 經由地 역할에 머물게 될 수도 있다.

환태평양 발전전망과의 관계

21세기는 흔히들 環太平洋의 세기라고 한다. 太平洋沿岸이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된다는 예측에서 나온 말이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움직임만 하더라도 오는 11월 중순 우리나라에서 제3차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가 개최되고, 일본의 對外政策基調가 미국·캐나다 및 한국·대만·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증진에 최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공식 입장이고 보면 이러한 전망은 주요서방국가의 政府政策에까지 반영되고 있을 정도로 분명해지고 있다. 태평양의 각국이 이러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협력을 증대시킬 때 그 전망이 현실로 바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太平洋沿岸의 범위가 광대하고 參與國家 또한 다수이므로 한국의 경제적 입지와 役割比重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으나 금번 APEC 회의에서 중국이 정식으로 가입할 예정이고, 그동안 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 태평양경제협력회의)에 업저버로 참석해 온 소련의 경우도 가까운 장래에 정식가입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고 보면 한국경제가 아시아권의 북방국가들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環太平洋經濟成長의 직·간접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광물자원을 비롯한
천연자원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북방국가와 한국경제와의
상호보완성문제가
가장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中·蘇를 포함한 APEC 회원국가들 중 우리는 국민소득·기술 및 산업발전수준면에서나 經濟運營體制 면에서 중간자의 위치에 서게 되고, 홍콩이 중국에 흡수되고 대만 역시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 우리의 중간매개 조정자적 위치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므로 하기에 따라서는 성장의 혜택과 대안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환태평양 협력 범위에 북방국가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와 북방경제간의 신뢰 구축과 협력관계 심화를 토대로 우리 경제에 보다 유리한 局面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C 진출강화와의 관계

북방국가 중 東歐 6개국의 경우 경제개혁진전 양상은 私有化·價格自律化·재정 및 금융개혁·외국인 투자 보호 등 매우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헝가리에서 알바니아까지 국가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년 4월 訪韓한 바 있는 벨라카다르 헝가리 對外經濟關係部長官에 따르면, 동구 국가 전체가 체제전환에 따르는 실업자증가·인플레이·재정적자 및 외채누증·무역규모의 감소 등 위기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헝가리와

폴란드 정도가 이 위기국면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을 뿐 기타 東歐國家의 경우 과거 權力機關의 기득권이 유지되고 있어 표면적인 혼란은 적으나 改革進展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유사한 위기국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東歐改革 전망을 보면, 헝가리·체코·폴란드 등은 순조로운 진전이 가능한 반면 불가리아·루마니아·알바니아 등은 불투명하며, 유고의 경우 민족적 갈등의 원만한 해결이 중요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동구국가의 개혁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먼저 빠른 개혁을 달성하게 될 국가들과 EC국가들과의 經濟統合 가능성이다. EC國家들이 동구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IBRD 등 국제금융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로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를 설립한 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동구국가의 개혁에 대한 EC국가들의 관심은 특별하며 개혁지원에 대한 정책의지도 매우 강해서 동구경제가 EC의 後方背後市場으로서 EC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동구국가들로서는 개혁이 순조롭게 달성될 경우 서·동부 유럽지역에 또 하나의 ANICS(Asian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國家群이 탄생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동구국가들의 경우 우리 경제의 對EC進出據點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競合의 側面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92년 이후 EC 경제통합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있음은 사실이나 이는 중급상품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가 比較優位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그리 많지 않다는 데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력이 아직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구국가들과의 협력증진을 통해 對EC進出의 우회 전략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진다. 거기에다 우리 경제의 원활한 産業構造調整努力이 뒷받침된다면 본격적인 EC 진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과의 관계

정부가 북방정책추진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북한의 개방추진과 평화적인 남북통일기반의 조성이다. 경제적으로는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중간목표로 하고 있음도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 北韓當局에 의해 공식화된 일부 豆滿江 이남지역의 自由經濟特區建設構想을 비롯하여 남·북한의 실질적인 직교역 추진, 시베리아개발에의 공동참여 가능성 등으로 정부의 이와 같은 당초 목표달성은 이미 可視圈에 들어서고 있다.

즉 북한이 정책기조를 '開放' 쪽으로 전환한 배경은 여러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으나 우리의 북방정책추진에 따른 직·간접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경제협력 대상국들이 아직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經濟特區建設도 부분적인 것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다 우리와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대폭 확대는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는 매우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방국가의 개혁과정에서 보듯이 개혁 그 자체는 정치적으로 또는 혁명의 형태로 가능하지만 개혁과정에서의 경제적 측면은 기능적이고 물리적인 經濟論理에 따라 進行되는 것이므로 북한의 개방이 일단 시작될 경우 이념적 영향 배제 등 인위적인 차단·견제 노력은 불가능한 것이며, 경제개혁과 社會主義 理念과의 조화도 환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對북한 관계개선 노력과 북방정책추진을 병렬적·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 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북방정책추진전략의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북방경제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東北亞地域 전체를 自由貿易經濟圈으로 유도하고 이들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원을 토대로 하여 남·북한의 지속적인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협력 증대 필요

한국경제에 있어 북방국가가 갖는 경제적 의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회와 가능성'이며 우리의 '도전과 관리능력'에 따라 실현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한국경제가 과거 1세대 동안 이룩한 경제발전성과가 세계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기적과 같다고 하는 말은 곧 북방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例證하는 것이다. 최근의 눈부신 통신혁명과 기술발전속도가 이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도 있겠지만 반면 북방국가들

의 경우 과거와는 정반대의 전면적인 體制改革을 지향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북방국가의 개혁과정에서도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경험한 바와 같은 만성적인 인플레이·社會間接資本施設 부족·국제수지적자와 외채누증·지역간 불균형·소득격차·정치사회적 불안정 등이 불가피하게 대두될 것이며, 또한 이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우리 민간 경제계에 대해 대북방 진출에 있어 過當競爭 없이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교류협력을 증대해 나가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계가 對中國 진출에 있어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개혁은 세기적 실험이라고 불릴 만큼 불가능에 가까운 社會主義 理念과 市場經濟와의 결합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나갈 소지가 큰 데다 경제개혁의 성과가 달성되면 될수록 중국은 그만큼 더 깊은 딜레마에 처할 수밖에 없고 또한 現執權勢力인 革命1世代의 사망 또는 완전 퇴진 이후의 전망은 불투명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競合關係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그 결합성은 더 증대될 전망이다. 출처

對北方 交易의 현황과 전망

北方 社會主義國家와의 교역은 소련·동구의 개혁속도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85년에 15억달러 정도였던 북방교역은 '90년에 무려 56억달러로 확대되었다. 즉, 최근 5년간 북방교역은 연평균 31%로 신장해 온 셈인데 이는 같은 기간중 우리나라 전체교역 伸張率 17%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금년 상반기중에도 북방교역은 36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하반기에 계속 이러한 속도로 증가한다면 금년도 연간 교역량은 90억달러 가까운 규모가 될 것이다. 북방교역이 이렇듯 빠른 속도로 신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교역 중 차지하는 비중도 금년 상반기중 4.9%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86년 2.4%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북방교역의 가장 큰 의의는 새로운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수출은 4월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상반기중 對美 輸出은 4%가 감소하고 對日 수출은 5.1% 증가에 머무르는 등 主力市場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對北方 수출은 작년 39%에 이어 금년 상반기중에도 44%



정태신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중남미국가 등과 함께 전통 主力市場에 대한 代替市場으로서의 위치를 점차 굳혀가고 있다.

북방교역은 國際收支 관리차원에서 중요하다. 금년들어 무역적자문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로 등장하면서 과연 연말까지 赤字幅을 얼마로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반

기중 2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북방교역, 그 중에서도 특히 작년에 7억달러, 금년 상반기중 이미 5억달러 가까운 적자(홍콩경유 간접수출 포함시)를 내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에耳目이 쏠리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北方交易의 특징과 전망

북방교역은 전체로 볼 때 몇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낸다. 그 하나는 수입상품구조에 있어서 원자재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수입을 용도별로 크게 原資材·資本財·消費財로 구분할 때 북방으로부터의 수입 중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이르고 있다. 美國 43%, 日本 35%, EC 38%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농산물 등 소비재 1次產品을 합치면 북방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표 1〉 북방교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86	'87	'88	'89	'90	'91(1~6)
교역규모	1,560	2,090	3,672	4,223	5,620	3,621
전년대비 증가율	5.7	34.0	75.7	15.0	33.1	53.8
전체교역 중 비중	2.4	2.4	3.3	3.4	4.2	4.9
무역수지	90	-36	329	-299	-158	-221

**主力市場의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비하여
對北方 수출은 작년 39%에 이어
금년 상반기중에 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중남미 등과 함께 전통 主力市場에 대한
代替市場으로서의 위치를
점차 굳혀가고 있다.**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하여 북방으로부터의 자본재와 耐久性 消費財의 수입비중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美國·日本·EC로부터의 수입 중 자본재 비중만 해도 각각 46%, 58%, 54%에 달하는 것과 크게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역 패턴은 북방국가들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방교역의 또 다른 특징은 전체 북방교역 중 蘇聯·東歐의 비중이 최근 수년간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의 교역이 북방교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년 84%에서 금년 상반기중 69%로 낮아진 반면, 蘇聯·東歐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28%로 높아졌다. 이는 근년에 이들 국가의 경제가 中國에 비하여 훨씬 力動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북방교역의 국별 비중
(단위 : %)

	'88	'89	'90	'91(1~6)
중국	84.1	74.4	68.0	69.3
소련	7.9	14.2	15.8	14.5
동구	5.9	9.2	13.4	13.6

중국, 제4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
중국과의 교역은 간접교역을 포함할 경우 작년 한해동안 약 38억달러로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북방 교역 중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은 美國·日本·獨逸에 이어 우리의 제4위 交易相對國으로 부상하였다. 작년에 독일과의 교역이 62억달러, 중국과의 교역이 38억달러이었던 데 비해 금년 상반기 중에는 독일이 36억달러, 중국이 25억달러로 그 차이가 좁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교역잠재력도 독일보다는 중국 쪽이 훨씬 클 것임을 고려하면 중국이 우리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수년간 中國과의 교역실적에서 그양 지나칠 수 없는 사항은 우리측의 무역적자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88년만 해도 우리가 오히려 3억1천만달러의 흑자를 냈었으나, 이후 적자로 反轉하여 '89년 2억7천만달러, '90년 7억2천만달러, 금년 상반기중 4억6천만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적자가 생기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88년말 이후 시행해온 中國政府의 강력한 긴축정책과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들 수 있다.

작년에 중국은 美國에 151억달러를

수출하고 48억달러를 수입하여 100억달러가 넘는 흑자를 냄으로써 미국의 朝野에서 강한 불만과 우려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우리의 경우 주종 수출품목인 전자·전기제품·철강제품 등의 수출이 중국의 緊縮政策에 영향을 받는데다 수입은 유연탄·시멘트·옥수수·금속제품·유기 화학품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적자를 빚고 있다. 특히 수입을 보면 금년 상반기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 중 차지하는 비중은 시멘트가 94%, 옥수수가 53%로서 이 두 품목의 수입 금액만도 무려 3억3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농수산물·鑛物性 生産品·기타 원자재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이 擴大均衡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출이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다행히 금년들어 對中國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중국의 긴축정책도 앞으로 차차 완화될 전망이므로 우리의 수출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민경제·사회발전 10개년 계획'에서 '90년대 연평균 6% 경제성장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 중국이 현재처럼 수출주도형 成長戰略을 통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원자재·부품의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수출기회도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8월말 북경에서 1차 협상이 개최된 바 있지만 '韓·中 貿易協定'이 체결되어 중국의 對韓國 差別關稅 문제가 해결되면 석유화학·철강제

품 등 그동안 가격경쟁력면에서 특히 불리했던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증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이 아직까지는 오히려 양국간 교역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民需轉換에 필요한 資本財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국내 생산활동의 위축과 코메콘(COMECON)의 해체로 인하여 공급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서방의 對蘇 금융지원이 확대되어 소련이 수입에 충당할 자금 사정이 좋아진다면 우리의 대소교역에도 그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對蘇 경험자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이는 더욱 직접적으로 韓·蘇 交易을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표 3〉 對中國 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86	'87	'88	'89	'90	'91(1~6)
교역규모	1,288	1,679	3,087	3,143	3,821	2,511
수출	668	813	1,700	1,438	1,553	1,027
수입	620	866	1,387	1,705	2,268	1,484
수지	48	-53	313	-267	-715	-457

對蘇聯 交易量 급속히 신장

소련과의 교역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는데, '86년 1억2천만달러에 불과하던 交易量이 작년에는 8억9천만달러로 신장했다. 5년간 연평균 교역증가율을 보더라도 북방전체의 31%보다 훨씬 높은 54%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작년에는 前年 對比 수출증가율이 150%, 수입증가율이 -6%였음에 비해 금년 상반기중에는 거꾸로 수출증가율은 7%에 불과한데 수입증가율은 86%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86년 이후 계속 우리측의 적자였던 무역수지가 작년에 모처럼 흑자로 돌아섰다가 금년들어 다시 적자로 되돌아가 상반기에 이미 1억달러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이처럼 對蘇 交易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對蘇 經協資金의 집행이 예정보다 늦어져 우리의 主力 商品인 전자·전기 및 섬유류의 수출이 격감한데다 알미늄·동·니켈 등 금속제품, 銑鐵 등 원자재와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의 경제개혁을 돕고 양국간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對蘇 경험자

앞으로 對蘇 交易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소련의 정치·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8월사태 이전까지는 비록 소련의 경제제도나 정책이 계속 변화하고 교역을 하는데도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교역을 늘려올 수 있었다. 이제 蘇聯邦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고, 모든 것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교역의 장래를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물론 이번 사태로 인하여 西方의 對蘇聯 원조가 확대되고 단기간내에 蘇聯政局이 안정을 회복한 가운데 개혁과 개방이 가속화된다면 오히려 교역이 한층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소련이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軍備縮小를 추진하면서 생필품을 비롯한 소비재는 물론 군수공장의

양국간 교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될 또 하나의 요소는 新聯邦條約이다. 신연방조약은 共和國에 보다 광범위한 경제권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資源 管轄權 내지 처분권을 공화국이 갖도록 하고 있어 우리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주요 자원을 공화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 양국간 교역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소련의 硬貨不足問題에 구애받지 않고 교역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전망은 소련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달려 있어 현재로서는 韓·蘇 交易에 관한 선부른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표 4〉 對蘇聯 交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86	'87	'88	'89	'90	'91(1~6)
교역규모	118	200	290	600	889	524
수출	50	67	112	208	519	214
수입	68	133	178	392	370	310
수지	-18	-66	-66	-184	149	-96



對東歐交易은 유고와 폴란드의 비중 높아

최근 5년간 한·소 교역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해 오고 있는 對東歐圈 교역의 특징은 우선 일부 국가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작년의 경우 유고 및 폴란드가 對東歐 交易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에 달했으며, 금년에는 폴란드의 비중만도 55%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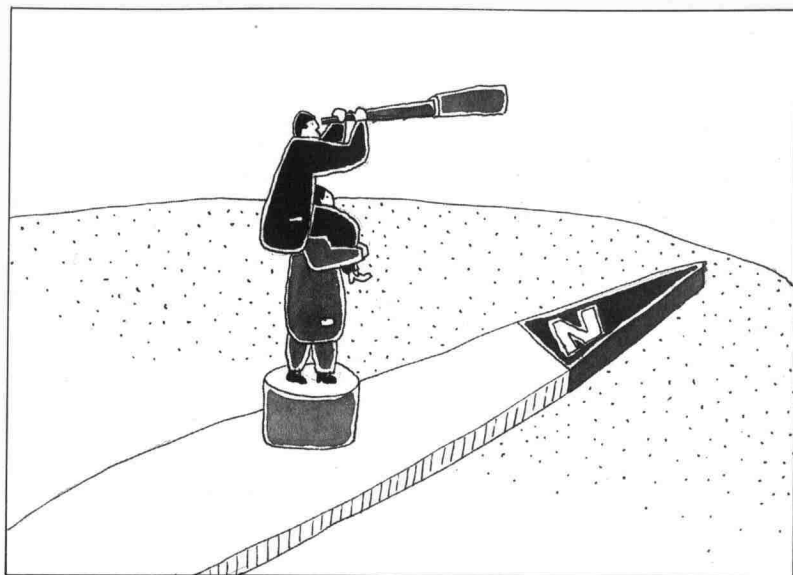
그런데 이들 두 나라와는 무역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유고의 경우 작년의 우리의 수출이 2억1,400만달러인 데 비해 수입은 4,200만달러에 불과하여 작년말 요비치 유고大統領이 訪韓했을

때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우리측의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년에도 유고내의 政情不安으로 교역량이 격감하기는 했지만 수출입간의 불균형은 여전한 상태다. 폴란드의 경우에도 금년 상반기중 우리의 수출은 2억1,400만달러인데 수입은 5,900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무역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로 일부품목의 폭발적 수출 때문이다. 주로 폴란드에는 칼러 TV·VTR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가, 또 유고에는 자동차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 금년 상반기중 對東歐 수출 중 이들 3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해 동구와의 교역은 國別은 물론 품목별로도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對東歐 交易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소련과 마찬가지로 동구제국의 외국상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매우 크며, 한국상품에 대한 選好度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높은 비율로 계속 교역이 늘어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의 對東歐 交易은 이미 증가세가 매년 낮아지고 있다. '89년에는 103%였던 것이 작년에는 95%, 금년에는 48%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거기다가 일부 국가에 1



~2개 품목을 소나기식으로 집중 수출함으로써 輸入規制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유고는 작년 9월부터 칼러TV에 대해, 금년 3월부터는 자동차에 대해 수출입링크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폴란드는 금년 8월부터 가전제품과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關稅率 인상조치를 취한 바 있다.

對베트남 교역은

상당부분 賃加工형태로 이루어져

끝으로 북방교역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로 베트남이 있다. 베트남과의 교역은 작년에 1억5천만달러, 금년 상반기에 8,900만달러로서 우리와는 未修交國이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經濟制裁措置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국가치고는 우리와의 교역이 이미 꽤 활발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식적인 짐작으로는 베트남과의 交易量이 헝가리나 체코와의 교역량보다 적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對베트남 수출은 작년 1억1,700만달러, 금년 상반기에 6,6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베트남과의 교역은 상당부분이 賃加工貿易 형태에 이루어지고 있다. 금년 상반기 對베트남 수출의 3분의 1에 가까운 2,100만달러가 섬유원료·섬유직물이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임가공 무역을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베트남은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로 특히 勞動集約的 산업부문에서 매우 유망한 投資對象地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經濟制裁가 풀리고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적극화되면 교역은 물론 해외투자면에서도 우리와의 관계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對北方 交易 중요도 커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역에서 북방국가에 차지하는 위치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美國·日本에의 수출이 저조한 상황에서 북방은 우리 수출의 새로운 활로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소련을 비롯한 北方諸國은 전통적 理念과 體制가 붕괴된 채 장래 나아가야 할 뚜렷한 방향과 대안도 없이 격심한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어 우리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커다란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 이들과의 경제교류를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逆說的으로는 이러한 북방의 탈바꿈과정 자체가 서방의 整備된 시장과는 다른 융통성과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도 하겠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방은 우리가 교역을 함에 있어서 서둘러서도 안되고 태만해서도 안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實利를 취하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되, 덤비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가꾸어 나가야 할 시장인 것이다. 나라경제

〈표 5〉 對東歐 교역현황

(단위 : 백만달러)

	'86	'87	'88	'89	'90	'91(1~6)
교역 규모	88	148	215	389	754	492
수출	68	102	126	271	541	389
수입	20	46	89	118	213	103
수지	48	56	37	153	328	286

국내기업의 對北方 投資

한 나라의 海外投資는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3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단계는 숙련된 노동력과 技術導入 등에 의하여 저임금에 기초한 價格優位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상품들이 수출의 주류를 이루는 과정에서 현지판매를 위한 무역업에 대한 투자와 資源確保를 위한 資源開發投資가 시도되는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는 企業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國際經營·마켓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여 단순한 가격우위보다는 價格差別化와 제품차별화로 수출 시장에 진출하는 단계이고, 세번째 단계는 要素資源의 賦存率이 비슷한 국가간의 해외투자이다.

해외투자 현황과 정책방향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자원개발과 무역업 위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86년 이후 국제수지흑자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통상마찰의 심화에 따른 해외수출기반 확립, 그리고 원貨切上과 국내임금상승 등에 따른 價格競爭力 저하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크게



김창록
재무부 해외투자과장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한 해외투자의 발전단계 중 제2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91년 6월말 현재 해외투자는 허가기준으로 2,313건 53억3,970만달러이며 실제투자기준으로는 1,789건 34억7,83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GNP에 대한 비율('89년 기준)은 0.7%로서 美國 7.2%, 日本 8.9%와 비교할 때 앞으로 기업의 해외투자는 크게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比較劣位産業의 해외이전, 기업경영규모확대에 따른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경영의 地球化, EC·北美地域에서의 경제통합, 北方國家와의 관계정상화에 따른 기업활동범위의 확대, 지속

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첨단산업 기술의 도입 등을 위해서도 기업의 海外投資 확대추세는 불가피하며 정책적으로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이 해외투자를 신속·정확히 결정할 수 있도록 허가절차의 간소화와 정보제공방법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특히 금융지원도 국내기업의 낮은 自己資本 축적정도를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업종에 있어서도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서비스 업종 등 多角的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91년 하반기부터 外換管理제도가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에서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전환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해외투자제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국내기업의 對北方 투자

우리나라와 북방국가와의 관계는 최근 몇년 사이에 급속히 개선되어

**국내기업의
對北方 투자대상은
주로 제조업과 무역업에 국한되어 있고
투자금액도 소규모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왔다. '89년 2월 헝가리와의 國交樹立을 필두로 東歐國家 및 소련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고, 국내기업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가 개시됨에 따라 해외투자 진출도 활기를 띠었으나

計劃經濟體制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과도기적 현상과 사회간접시설미비, 외환사정 등 투자환경의 미비로 인하여 對北方 투자는 당초의 전망보다 극히 저조하다.

〈표 1〉 주요 北方國家와의 경제협정 체결현황

	投資保障協定	二重課稅防止協定	貿易通商協定
소 련	◎	○	◎
헝 가 리	◎	◎	◎
폴 란 드	◎	○	◎
루마니아	○	-	◎
체 코	○	-	-
불가리아	△	○	-
유 고	△	-	-
中 國	△	-	△

註 ◎ : 효력발효 ○ : 미발효 △ : 협의 진행중

〈표 2〉 國家別 · 業種別 투자현황

(단위 : 건, 천달러)

국명	업종	제조업		광·임·수산업		건설업		운수보관업		무역업		기타업		부동산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 국	허가	83	91,534	2	700	-	-	1	500	1	100	3	623	-	-	90	93,457
	투자	51	33,494	2	422	-	-	1	500	1	100	2	473	-	-	57	34,989
소 련	허가	2	16,300	-	-	-	-	-	-	2	480	2	1,074	-	-	6	17,854
	투자	1	1,000	-	-	-	-	-	-	2	480	-	-	-	-	3	1,480
헝가리	허가	2	4,213	-	-	-	-	-	-	1	150	1	45,000	-	-	4	49,363
	투자	2	1,531	-	-	-	-	-	-	-	-	-	-	-	-	2	1,531
폴란드	허가	1	150	-	-	-	-	-	-	1	529	-	-	-	-	2	679
	투자	-	-	-	-	-	-	-	-	1	529	-	-	-	-	1	529
계	허가	88	112,197	2	700	-	-	1	500	5	1,259	6	46,697	-	-	102	161,353
	투자	54	36,025	2	422	-	-	1	500	4	1,109	2	473	-	-	63	38,529

투자현황

정부는 그동안 투자환경조성을 위하여 투자위험이 법적으로 최소화되도록 投資保障協定 등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하고 있다(〈표 1〉 참조). '91년 6월말 현재 총102건 1억6,100만달러(투자 기준 63건, 3,900만달러)가 허가되었고 국가별로는 中國(中國本土를 뜻함. 이하 같음) 90건, 소련 6건, 헝가리 4건, 폴란드 2건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표 2〉 참조). 투자대상은 주로 제조업과 무역업에 국한되어 있고 투자금액도 소규모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대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對北方 投資 전망

기업의 해외투자는 '이윤은 최대한으로, 위험은 최소한으로(profit maximization, risk minimization)'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기업으로서는 北方國家와의 관계정상화에 따라 영업 활동무대가 擴大되었고 이를 잘 활용



하면 국민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北方國家는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 과정에서 자본과 기업경영능력이 우수한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도 안정성장에 불가결한 자원 확보·기존 수출시장의 장벽에 따른 신규 내지 迂廻輸出市場의 확보·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등을 위해서도 이들 國家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요구하는 내용, 기업경영차원에서의 戰略, 投資誘致國의 투자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방국가에 대한 해외투자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정부로서는 투자위험을 최소화시키고 현지기업활동에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간 접촉을 강화하고, 戰略的 投資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도 선별적으로 확대하며, 적절한 시기에 투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여절차를 단축하는 등 기업 외부적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은 단순히 사업확장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기술개발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시장확보에 주력하고 막대한 자본의 투자 등 경제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투자위험이 수반되는 경우 자금조달 등에 있어서 기업의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北方國家가 市場經濟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정부나 기업의 이들 국가와의 거래관계가 짧은 것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소규모·수출위주(투자기업의 外換自給原則 때문임)의 투자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북방국가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어떠한 수준으로 세계경제에 接木하게 될 것인가를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I.I.E(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개혁에 필요한 충분한 財源이 조달되지 못하면 소련과 東歐 諸國은 中低價生産品을 생산수출하는

국가로서 세계경제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국내기업이 이들 국가와의 관계정립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확대될 對北方 투자는 우리나라와 북방국가와의 상호 경쟁적·보완적 관계를 고려하여 국내 산업구조의 조정방향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경험과 역사가 일천하다. 그러나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기업의 해외진출은 불가피하며 '國富의 海外擴張'을 위하여 정책적으로도 이를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의 對北方投資도 필연적으로 확대될 것이나 교류 초기단계에서는 양국 정부간·企業間 신뢰조성과 투자여건 파악에 중점을 두고 양국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되, 우리의 산업구조 조정방향의 테두리내에서 투자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재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협력

최근 국제정세는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東西和解 무드가 조성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국민적 여망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방외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지난 '88년 '7·7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北方國家와의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지난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여 헝가리·폴란드·소련 등 東歐諸國을 비롯, 몽골 등 북방국가와의 國交正常化를 이루는 한편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교류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여건변화 속에서 政府에서는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슬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간 직면하고 있는 경제의 상호보완구조를 감안, 북방국가를 우리의 상품수출시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북방국가들이 희망하고 있는 자원공동개발에 참여하여 소요자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입한다는 전략하에 對北方 자원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북방국가와 자원개발협력을 추진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소련과는



조기봉
동력자원부 해외자원과장

지난 '90년 8월과 '91년 1월 두차례에 걸친 政府代表團會議에서 자원교역 및 시베리아 자원개발을 논의해 왔으며, 지난 '90년 8월과 '91년 3월에는 우리의 民·官合同調査團이 소련을 방문하여 에너지 및 자원분야의 상호협력가능성을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석유·가스·석탄 등 12개 사업을 중심으로 자원개발협력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와 아울러 우리와 거리가 가깝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베트남·몽골 등에도 자원조사단을 파견, 관계개선 노력과 함께 에너지·자원분야의 협력증진을 위해 민간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하에 資源交易 및 자원개발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협력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對北方 자원개발 협력현황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협력 현황을 우선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자원교역의 경우 '88년을 기점으로 하여 유연탄·석유 등 에너지 및 자원을 중심으로 급격한 伸張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원공동개발은 북방권 국가내 개발여건의 미성숙으로 현재 개발타당성 검토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와 북방국가와의 꾸준한 협상노력과 경제구조의 상호보완 관계를 감안할 때 소규모사업에서부터 조만간 개발성과가 可視化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자원 교역

먼저 에너지·자원 交易 現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입규모가 '88년 약 3억3천만달러였던 것이 '89년 4억2천만달러, '90년 4억8천만달러 규모로 연평균 약 2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對北方 에너

**정부는 자원의 海外依存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자원개발협력의
다변화를 통한 자원의 장기적·안정적·경제적인 확보를
자원정책의 기본목표로 하여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 利點이 있는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자원 도입은 '90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총에너지·자원 도입액의 약 4.3%에 해당되며, 향후 북방국가에서의 도입 비중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방국가와의 자원교역의 특징은, 초기에는 홍콩 등을 통한 間接交易에서 이제는 直交易 형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교역대상품목은 석탄(유연탄 및 무연탄)·석유·농축우라늄 등 에너지·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북방국가와의 자원교역을 국가별로 보면, '90년을 기준으로 中國이 3억 5,400만달러(74%), 소련 1억1천만달러(23%), 베트남 1,200만달러(3%) 순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부터의 도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중국에 편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대북방 에너지·자원 도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품 목	'88		'89		'90		'91(1~6)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유연탄(천톤)	3,681	142	3,216	161	3,852	184	1,752	83.6
무연탄(천톤)	1,534	68	1,268	60	1,083	49	702	31.9
석 유(천배럴)	5,309	76	9,847	152	10,293	220	3,325	53.9
농축우라늄(톤)	-	-	-	-	40	23	-	-
기타 광물		44		51		N.A		N.A
계		330		424		476		169

〈표 2〉 북방국가별 에너지·자원 도입현황('90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중 국	소 련	베트남	계
금액 (비율)	354 (74%)	110 (23%)	12 (3%)	476 (100%)
주요자원	석탄(유·무연탄), 원유	석탄(유·무연탄), 석유제품, 농축 우라늄	무연탄	

자원공동개발

그동안 정부의 북방정책추진에 힘입어 우리 민간기업들의 북방 자원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 정치·경제체제의 혼란 등 개발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현재 에너지 및 광물자원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은 없으며, 다만 有望事業을 중심으로 개발 타당성 조사에 치중하고 있다.

북방국가와의 자원공동개발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소련과의 자원공동개발은 지난 제2차 한·소 정부대표단대화회에서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7개 사업과 민간기업 및 민·官 자원조사단이 발굴하여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5개 사업을 포함,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들 12개 사업은 석유·천연가스개발이 5개 사업, 유연탄개발이 2개 사업, 동·주석 등 일반광개발이 2개 사업, 그리고 정유공장新·增設事業이 3개 사업이며, 이들 사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콘소시엄 또는 외국 기업과 국제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프라보우르미 朱錫鑛과 사할린 陸上油田開發 등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한·소 자원개발협력을 조만간 可視化시켜 나간다는 방침 아래 우리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中國과의 자원공동개발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資源富國인 점을 감안, 장래 자원개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의 민간기업들이 활발히

중국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한국의 영풍광업(주)과 대한광업진흥공사가 中國吉林省 및 甘肅省 지역에 대해 광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영풍광업(주)이 이 지역내 2개의 鉛·亞鉛 광산에 대한 합작개발을 위해 探查契約를 체결, 금년 7월 북방권 국가로서는 최초로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8월부터 탐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90년 10월 석유개발과 관련 韓·中 양국은 中國上海에서 제1차 한·중 석유개발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서해 대륙붕개발에 대한 탐사 및 기술정보의 상호교환과 공동개발연구에 합의하는 등 한·중 자원개발협력이 점차 可視化되고 있다.

셋째, 풍부한 자원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베트남과의 자원개발은 그동안 서방제국의 對베트남 경제제재조치 등 외적 요인에 의해 자원개발협력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환경이 對베트남 진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對베트남 자원개발 진출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두산산업은 베트남 캄란灣지역 규사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개발공사와 국내 관련 7개기업은 콘소시엄을 구성, 베트남측이 제의한 빅베어(Big Bear) 광구의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 및 전략

정부는 자원의 海外依存度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자원개발협력의 다변화를 통한 자원의 장기

적·안정적·경제적인 확보를 자원정책의 기본목표로 하여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 利點이 있는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북방권 국가내 외환부족 및 자원개발여건의 미성숙을 고려하여 우선 단기적으로는 북방국가와의 자원교역을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북방국가내 투자위험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자원개발협력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자원 交易

에너지·자원 교역의 추진에 있어 먼저 북방국가와의 자원의교환활동을 강화하여 그간의 간접교역방식에 의한 자원도입을 가급적 줄여나가고, 차츰 直交易方式에 의해 도입물량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북방국가와의 자원교역이 석탄·석유·우라늄 등 에너지·자원에 편중되어 있는

<표 3> 북방국가와의 자원공동개발사업 현황

국 별	사 업 명	위 치	추진기업	추진현황
소 련	사할린 육상유전개발	사할린 동북 오하지역	동원단좌	합작기업 설립 추진중
	사할린 해상석유·가스 개발	사할린 동북해상	현대자원개발, 팜코	입찰참여중
	야쿠트 천연가스개발	야쿠츠크시 부근	현대자원개발	공동개발의향서 교환
	야쿠트 엘긴스크유연탄 개발	네룬그리시 부근	현대자원개발	공동개발의향서 교환
	치타주 우다칸 동광개발	치타주 북부	럭키금성	'91년 광산조사 실시 예정
	아진스크 정유공장증설	그라스노야르스크 지방	선경·럭키금성	협의중
	양가라스크 정유공장증설	이르쿠츠크주 중부	선경·럭키금성	협의중
	소루후트 정유공장건설	서부시베리아 소루후트 시	선경, 럭키금성	협의중
	칼믹 석유·가스개발	카스피해 북서쪽	현대자원개발	'91년 5월 합작투자 합의
	아제리 유전개발	아제르바이잔 바쿠시 부근	럭키금성	입찰참여 검토중
중 국	프라보우르미 주석광개발	하바로프스크주 술룩시 부근	현대자원개발·삼성·대우·동부산업 등	합작개발계약체결(사업 계획작성중)
	우르갈 유연탄광개발	하바로프스크주 체크드 민시 부근	현대자원개발·대우	사업타당성 검토 중
	방우구 연·아연광개발	길림성 이통현	영풍광업	'91년 5월 탐광시추 계약체결(탐광시추 착수중)
베트남	이가구 연·아연광개발	감숙성 성현	영풍광업	'91년 5월 탐광시추 계약체결(탐광시추 착수중)
	캄란灣 규사광 개발	캄란만 나트랑 부근	두산산업	합작개발 의향서 교환
베트남	빅베어 유전개발	사이공 남동해상	쌍용·대우·유개공 등 8개 기업	입찰참여 검토중

점을 감안, 도입조건이 유리한 에너지·자원의 도입물량을 계속 증대해 나가는 한편 연·아연·동·알루미늄 등 일반광물의 도입물량도 늘려나감으로써 도입 鑛種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우리 민간기업들이 북방국가의 기업들과 자원교역을 위한 合作企業을 설립토록 유도하는 한편, 구매사절단을 適期에 파견하여 去來先과 교역대상자원을 확보하여 직교역에 의한 자원도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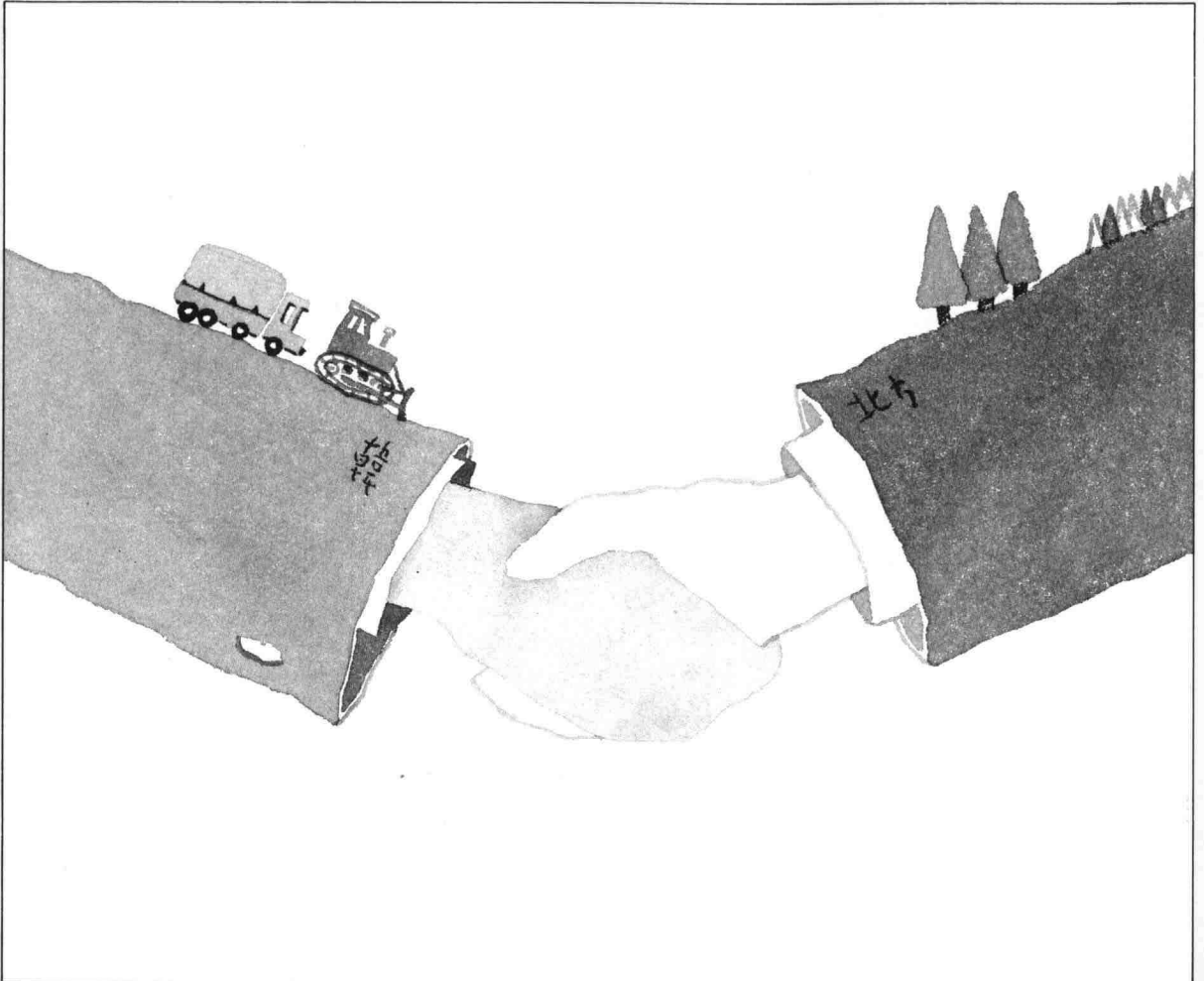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공동개발

북방국가와의 자원공동개발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북방국가 내 자원개발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점을 감안, 충분한 개발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내 자원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實利를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 추진전략 중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추진은 사업의 규모, 개발여건 등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단기간내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조만간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을 가시화시켜 나갈 것이다. 개발여건이 미성숙되어 투자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규모사업은 충분한 개발타당성 검토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되, 투자위험분산을 위해서 외국기업과의 공동



진출도 모색할 계획이다.

둘째, 북방국가에의 자원개발진출은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간 콘소시엄 형태의 진출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사업검토 초기단계부터 허가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내 민간기업간 콘소시엄 구성을 장려해 나가고, 우리 민간기업이 투자위험분산을 통한 합리적인 대북방 진출방안을 모색토록 할 계획이다.

셋째, 정부는 북방국가와의 자원개발 협력을 촉진하여 자원개발진출 지역을 多邊化한다는 방침으로 개발자금 지원책을 강구하고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석유사업기금을 활용한 지원규모도 늘려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석유개발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동력자원연구소 등 정부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진을 활용, 민간기업의 기술진과 공동으로 유망사업에 대해 전문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기술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북방권국가와의 자원의교환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련·중국·베트남 등 賦存資源이 풍부한 북방국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원조사단을 파견, 자원개발협력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추진중인 韓·蘇資源協力委員會'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는 한편, 중국·베트남 등과도 국교관계정상화 진전에 따라 '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효익있게 자원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 현재 북방국가 중 유일하게 소련에만 파견되어 있는 資源協力官을 점차적으로 타북방국가에도 파견하여 신속하게 자료정보를 입수, 適期에

**북방국가와의 자원공동개발은
현재 북방국가내 자원개발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점을 감안,
충분한 개발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내 자원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實利를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안사항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여 우리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북방권국가와의 에너지·자원협력 더욱 활발히 추진될 듯

소련·중국·베트남 등 北方圈 국가들은 경제개혁과정에 소요되는 자본을 조달키 위하여 풍부한 부존자원을 활용, 향후에도 자원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함과 아울러 자원공동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자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실정에 있어 우리나라와 북방권 국가와의 에너지·자원협력은 더욱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북방권국가와의 에너지·자원 협력은 먼저 자원교역부문이 증가하고, 자원공동개발의 성과는 그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자원공동개발에는 무엇보다도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對北方 자원개발에 따르는 투자위험성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원공동개발 또한 북방권 국가내 투자여건의 미성숙을 고려할 때, 우선 투자위험이 적은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석유·가스·유연

탄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은 향후 국제정세·투자여건의 변화추세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어 그 성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자원수급현황을 고려할 때 海外資源開發에 의한 자원의 장기적·안정적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그간의 폐쇄정책으로 선진국의 先占이 비교적 적은 북방권 국가들은 향후 우리의 해외자원개발대상 최적지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소련의 保守勢力에 의한 쿠데타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국가들은 대체로 정치·경제체제의 변혁기에 있을 뿐 아니라 기반시설의 미비 등 여전히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대규모의 자본과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자원개발 진출에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북방권 국가와의 자원공동개발은 북방국가내 개발여건을 충분히 고려함은 물론 국내 경제정책 및 자원수급계획도 고려, 장기적인 구도하에서 實利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소련·동구와의 과학기술협력

세계는 이제 理念과 힘의 경쟁시대를 지나 평화와 인간화를 지향하는 地球化(globalization)가 진행되고 있으나 첨단기술 상품의 상호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선진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첨단기술보호와 後發國에 대한 규제를 날로 강화하고 있다. 그 일례로 선진국들은 UR 협상을 통해서도 공산품·농산품·서비스의 시장은 국제적으로 개방하되, 오직 기술만은 知的所有權으로 묶어 이익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기술개발에 있어 정부의 직접지원 등을 규제하려고 하는 등 선진 각국의 技術保護主義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과학기술이 한 국가의 힘의 크기를 좌우하는 과학기술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한정된 인력·자원 및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결합·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美·日 등과의 기존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하고, 기술다변화 추구를 위해 소련·동구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全方位 과학기술협력'을



정 윤
과학기술처 기술협력3과장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련·동구 제국은, 군사적으로는 1955년 바르샤바條約에 따른 자체 방위체제 구축과 경제적으로는 '49년 2차대전 이후 서구의 경제부흥계획(마셜플랜)에 대응한 동구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를 중심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과학기술체제도 소련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체제를 형성, 소련의 거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민주화·개방화와 市場經濟로의 移行을 위해 자체 노력내의 협력보다는 서방의 시장경제·자유경쟁의 경험 습득과 자본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국의 기술을 개방하고 이를 판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우 과학기술개발이 국가관리체제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간 협력을 통한 기술에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고, 일부 첨단기술 및 기초 과학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이전, 우리의 생산기술에 接木하여 첨단제품생산에 적용한다면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협력의 기본방향

주요 과학기술협력 사업으로는 기술 도입·공동연구·合作投資事業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기술훈련·지도 및 인력교류·정보교류·세미나 개최·기자재활용 및 구입·현지 연구활동·特許導入 등의 형태로 양국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련·동구의 경우, 과학기술의 조직과 체계, 연구기관 및 관련기업의 과학기술인력 등에 대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점은 있으나, 우리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기술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조직적인 협력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다. 첫단계로는 문헌자료 등을 입수

소련과의 과학기술협력은
'한·소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90년 12월) 및
제1차 한·소 과학장관회의('91년 5월)에서 협력 사업을 합의하였으며,
科學技術處 次官 訪蘇('91년 8월)시 동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현재 기관간
협력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술평가·분석을 거쳐 기술현황 및 수준과 협력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의 실체를 분석하고 상대방과의 협의를 위해 관련 인력을 파견 또는 상대측 전문가를 초청,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차원의 협력추진을 위해 兩國政府間 이해와 합의를 기반으로 협력사업 지원 등을 합의하고, 이후 양국 추진기관간 협력사업을 합의·추진해 나가는 단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와 같은 조직적·단계별 협력과 아울러 소련과는 '90년 12월에 체결된 '韓·蘇 科學技術協力協定'에 따라 상호보완성에 입각한 實利的 협력, 소련이 보유한 첨단기술의 실질 이전 및 기업화,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구권 국가와는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체결된('89년 3월) 헝가리 및 양국 협력기반을 구축 중인 체코·폴란드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국별 特化技術·산업에 따라 협력을 전개해 나가되, 기술 수준이 우수한 체코·헝가리를 중심으로 인력 교류 및 기관간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소련·동구권 국가들이 개방

화·민주화를 위한 계획이 진행중에 있어 자체자본이 부족하고, 관련기관의 개편이 추진중인 점 등 유동적 상황이 있으나 이는 협력사업 및 교류의 진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과학기술협력의 현황

소련과의 과학기술협력은 '한·소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90년 12월) 및 제1차 한·소 과학장관회의('91년 5월)에서 협력사업을 합의하였으며, 科學技術處 次官 訪蘇('91년 8월)시 동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현재 기관간 협력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동구권과는 '한·헝가리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89년 3월)과 東歐技術調査協議團('91년 8월)의 체코·폴란드 방문으로 정부간 과학기술협력 확대 추진을 합의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협의중에 있다.

소련과는 광범위한 협력사업 추진중
 한·소간 과학기술협력은 '90년 4월 소련국가과학기술위원회, 라이센싱 도르그社 및 테크노 인베스트社로부터 800여종의 협력 희망기술목록을

제시받아 政府出捐研究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여 협력 가능한 기술협력분야를 확인·도출함으로써 최초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에는 각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최초의 對蘇協力協議團을 소련에 파견하여 소련의 현장기술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기관간 협력 추진 및 협정체결 추진을 협의하였다. 지난 12월 모스크바 頂上會談時에는 '한·소 과학협력협정'의 체결 및 '한·소 과학기술협력양해각서', '한·소 원자력협력議定書'에 서명, 교환함으로써 양국 정부차원의 협력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소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소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는 한·소 첨단기술 企業化課題, 한·소 과학기술협력센터의 상호설치, 고급과학기술자 상호교류, 소련 첨단기술전시회의 서울 개최, 과학기술연구원·기계연구소·생산기술연구원의 모스크바사무소 설치, 협력효율화 조사사업 등 양국간 실질적 협력사업의 추진에 합의했다.

이 중 첨단기술 기업화 48개 과제는 연구소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91년부터 착수중인 과제로서, 고성능 필터 개발 등 즉시 企業化가 가능한 9개 과제는 양국 추진기관간 합의 및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고, 세라믹 광전재료 개발 등 13개 과제는 '91년 하반기부터 착수할 계획이며, 나머지 26개 과제는 '91년 하반기 중 소련측과 협의후 '92년부터 단계적으로 착수·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소간 인력·정보 교류 및 대소협력창구 역할을 담당토록 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자로 한국과학

〈표〉 첨단기술기업화 과제 중 추진중인 과제

課題名	추진기관	
	우리측	소련측
고성능 필터 개발	科技研 / 신정산업	금속 폴리메르(研)
다이아몬드 합성과 응용기술 개발	科技研 / 일진다이아몬드	초경질(研)
정밀자이로스코프 개발	科技研 / 대우중공업	기계문제(研)
S.H.S 공정에 의한 가공기술 개발	機械研 / 진양·유유	Macrokinatics
분말법에 의한 특수용도 소재 개발	機械研 / 창성	Bardin(研)
천연가스 검출 엔진공급장치 개발	機械研 / 창원기화기	NAMI(研)
ESR법을 이용한 Rotor Steel 개발	機械研 / 한국중공업	Bardin(研)
산업용 이온주입기술 개발	原子力研 / 미래상공	Kruchatov(研)
항공기용 복합소재해석 및 응용기술개발	航空宇宙研 / 삼성항공 등	TsAGI(研)

기술연구원(KIST)내에 한·소 협력센터를 발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동 센터를 중심으로 소련과의 자동차·기계·소재분야 콘소시움 형성이 진행중이다. 제1차 한·소 장관회의시의 합의에 따라 금년 하반기중 소련 과학아카데미내에도 동 센터를 발족하고 상호주재 대표를 교환할 계획이다.

한·소 과학기술자 교류는 소련의 強點分野 저명과학자를 국내 연구소·대학·산업계 등에 유치, 활용할 계획으로 과학자 교류 합의 議定書를 지난 과학장관회의시 서명을 하였으며, 현재 과학기술연구원 한·소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수요를 조사중에 있다. 금년말까지 蘇측과 상호 협의가 완료되면 '92년부터 연간 50명 범위내에서 상호교류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련 첨단기술을 국내산업계와 연구소에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소련 첨단기술전시회를 소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과학기술처가 공동주관하여 '92년 3월중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나, 지난 8월 과기처 차관의 소련 방문을 통하여 기본계획이 합의되었으며, 9~11월중 양국의

실무협의단 교환 및 협의를 통하여 '91년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처 차관의 소련 방문시 소련 産·學 聯盟과 양국 민간차원의 과학기술직접교류를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현재 과학기술연구원 한·소 센터가 민간기업과 협의, 민간협력·교류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바, 동 계획이 蘇측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92년부터 직접 민간교류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차원의 과학기술협력 추진과는 별도로 민간 단위의 협력사업도 삼성·럭키금성·대우·현대 등 주로 그룹 차원에서 소련기관과 관련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産·學 聯盟과의 협력의 진척 정도에 따라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협력사업의 추진 점검을 위해 産·學·研 정례회의를 수시로 개최, 협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소련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내년 6월 제2차 양국 과학장관회의시 결과를 검토하고 협력사업들을 협의·조정, 추진해 나갈 것이다.

東歐圈은 헝가리·체코를 중심으로 협력 추진

동구권과의 과학기술협력은 '89년 3월 헝가리와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 것이 그 효시로서 정보·인력 교류·공동연구 추진 등을 합의하였으며, 양국간 과학장관회의를 定例化하기로 하여 '90년 12월 제1차 한·헝가리 과학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간 광학·레이저計測機器 개발 등 6개 우선 추진 공동연구과제 및 '한·헝가리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등을 합의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6개 우선추진과제 중 한국과학기술원과 헝가리의 자동화 연구소(Computer and Automation Research Center) 간에 'FMS(유연 생산시스템,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專用 시스템' 과제를 추진중에 있다. 부다페스트工大내의 한·헝가리 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을 통한 정보·인력교류 사업은 현재 양국간 부담, 파견방안, 주요 협력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92년도 제2차 양국 장관회의 개최시 開所를 목표로 하여 협의중이다.

또한 그간 東歐圈 국가들의 과학기술 관련 정보, 각국의 경제·사회 안정성, 과학기술체제 및 특화산업기술 등 가능한 자료를 평가 분석하였으며, 양국간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동구권 국가의 강력한 협력요청에 부응키 위해 지난 7월 과학기술처차관을 團長으로 한 '과학기술조사협의단'이 체코·폴란드의 연방 전략계획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방문하였다. 이 協議團은 양국간 협력 추진의 필요성 및 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하고 協力覺書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양국기관

간 협력 진전에 따라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조속 체결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관련 연구기관·대학·과학아카데미 등을 방문하여 과학기술현황을 조사하였는데, 체코의 경우 기타 동구권 나라에 비해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지리적으로도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기술적 측면에서도 재료·기계·정밀화학·제약 등의 분야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헝가리와 함께 동구권 과학기술협력의 거점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폴란드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와 섬유·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交易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건설·서비스업 등에 한국의 투자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전자·재료 등의 기술을 중심으로 경제개혁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정도와 진전에 따라 우리의 참여폭은 매우 넓어질 전망이다.

헝가리·체코·폴란드·유고·불가리아·루마니아 등 모든 東歐圈國家와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측에 과다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헝가리·체코를 중심으로 관련사업을 협의 추진해 나가고, 기타 국가는 경제협력과 병행하여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 인력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각국 특화기술에 따른 저명 과학기술자를 유치, 국내 대학·연구기관·산업계 등에서 기술지원·공동연구·강의 등을 수행토록 하는 것도 첨단기술 移轉에 매우 효과적이며,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검토·수립중에 있다.

**美·日 등과의
기존 협력관계를 유지하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하고
소련·동구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全方位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협력의 추진방향

협력사업은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를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의 소련사태와 관련해서도 과학기술 협력추진을 위해서는 소련 政策基調의 변화, 상대기관의 인사관계, 聯邦과 공화국의 관계 정책·人選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관련 조직·기능의 변화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기존의 협력관계를 점검 신속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동구권과의 협력 가능성은 이들 국가들이 市場經濟로의 개혁 추진을 위해 경제·과학기술면에서 서방국가와의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그간 국가관리체제로 과학기술정책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정부간 협력으로 기술에의 접근이 용이하며, 일부 기술 분야는 세계적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이들 나라가 개혁과정중에 있어 사회·경제의 기반이 불안하다는 점, 자기자본이 부족한 점, 관련 자료가 기관위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한 점, 또한 西方國家와의 협력 경험의 부족과 상호통신 등이 원활하지 못한 점 등 어려운 점도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先行되

어야 할 점은 양국 인력의 상호교류이다. 인력교류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협력 가능성 및 관련사업을 협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력교류는 반드시 어떤 사업에 연계된 교류뿐 아니라, 기술다변화와 전문가 육성 차원에서 연수 세미나 참석·훈련·유학·과학기술자 유치 등을 폭넓게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련의 경우, 양국간 협력 사업을 협의하고 우호적·호혜적 분위기에서 과학기술협력사업이 매우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는 소련의 개혁 추진에 따라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과학기술협력이 그 성격상 상품교역과 달리 구체적·가시적으로 신속히 분석되기 힘든 점은 있으나, 기존협력사업을 토대로 양국 협력기관이 기술이전·협력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면, 소련과의 협력사업에 의한 첨단기술제품생산도 곧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동구권 국가와는 헝가리·체코·폴란드의 정부간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일부사업을 협의·추진중에 있는바, 우선적으로 인력교류를 통한 협력관계를 진전시키되,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과 각국의 기술특성·정치·사회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헝가리·체코를 거점으로 과학기술협력을 선별적·실리적으로 전개해 가고자 한다.

세계적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면서 이들 소련·東歐圈 국가의 특성을 분석하여 과학기술협력을 실리적·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선진국의 기술편중·보호주의를 극복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강화에 커다란 전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

南·北간 경제협력의 추진현황과 과제

'80년대에 걸쳐 세계경제 질서는 몇가지 뚜렷한 변화추세를 보여왔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 太平洋經濟圈의 浮上 및 지역경제권의 대두일 것이다. 즉 소련과 동구국가들의 개혁·개방, 독일의 통일, EC통합 및 북미경제권 형성 등 地域經濟圈의 등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美·日·中·蘇 등 주요국의 對韓半島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여 '90년대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최근 들어 제3국을 경유한 남북한 교역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 '91년 7월에는 최초로 쌀 5천t을 직교역한 바 있어 UN 동시 가입을 계기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변재진
경제기획원 협력정책과장

이후 3차에 걸친 고위급회담을 통해 재개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정치·군사 문제에 대한 쌍방 異見으로 큰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88년 10월 우리측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對北 물자교역허용조치에 따라 남·북한 경제교류는 제3국의 중개상을 경유한 간접교역형태 및 북한물자 반입위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우리측의 쌀과 북한물자를 直交易한 바 있

다. '90년말까지 부진하던 홍콩·일본 등지의 제3국 仲介商을 경유한 간접교역은 금년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8월말 현재 총교역실적은 1억 2,400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이는 금년도 북한의 총교역량의 5%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의 주요 반입품목은 아연괴(3,642만9천달러)·수산물(1,902만7천달러)·철강재(1,159만3천달러)·시멘트(1,155만달러)·금괴(901만달러) 등이며, 주요반출품목은 고밀도 폴리에틸렌(625만달러)·쌀(175만달러)·농업용비닐(128만3천달러)·직물류(118만달러) 등으로 종래 농수산물·광산물 등 1次產品 반입위주에서 中間財 반입 및 생활용품 반출로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금년 들어 남·북 경제교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북한측이

추진현황과 가능성

분단 이래 단절되었던 남·북한 경제교류는 '84년 9월 북한이 제공한 水害義捐品을 우리측에서 인수한 것을 계기로 '84년 11월~'85년 1월중의 5차에 걸친 남북경제회담, '90년 9월

〈표 1〉 남북 물자교역 현황(승인기준)

(단위 : 천달러)

구분	'88	'89	'90	'91.8월말	계
반입	1,037	22,235	20,354	111,472	155,098
반출	-	69	4,731	12,570	17,370
계	1,037	22,304	25,085	124,042	172,468

**북한입장을 감안하여
迂廻進出을 통한 경제교류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현단계에서는 우리 商標가
부착된 상품의 북한내 유통과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진출이 용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
第3國法人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심각한 外換不足狀態를 타개하기 위하여 硬貨 획득을 목적으로 우리와의 간접교역에 다소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우리측 수요증가로 냉동명태 등 수산물과 아연과 · 공업용 金의 반입이 늘었기 때문에 분석된다. 이와 같이 남 · 북한간의 교역이 비교적 활기를 띠고 있는 것과는 달리 투자 진출 등 경제협력사업은 우리측에서 해외자원 공동개발, 설악산 · 금강산 공동개발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경제 외적인 이유로 추진은 안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 UNDP를 통한 두만강 유역 經濟貿易地區 개발사업 참여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다. 민간기업들도 海外現地法人을 활용한 투자진출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중이나 현재까지 성사된 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간접교역 위주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남 · 북한의 경제구조로 볼 때 經濟外的인 장애요인만 제거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 · 북한 무역구조를 보면 북한의 경우 完製品의 수출비중이 25%에 불과한 데 비해 우리는 수출의 95%

이상이 가공품(완제품 68%)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호 垂直의 分業 잠재력이 매우 크며, 북한에 매장량이 풍부한 철광석 · 마그네사이트 · 유연탄 등의 광석을 우리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輸入先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우리의 기술 및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합작투자는 우리에게도 低賃의 노동력 확보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북한측으로서도 북한경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본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남 · 북한 경제 모두에게 새로운 活路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북한경제 사정과 대외경제정책 동향

남 · 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 촉진방향을 모색을 위해서는 최근의 북한 경제 사정과 대외경제정책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이다. 북한경제는 전형적인 自力更生原則에 의한 스탈린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서 자본의 부족, 기술의 낙후로 인한 경제침체로 자력갱생원칙 고수와 대외개방 확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경제는 지난 '80년대에 걸쳐 연평균 3% 수준의 성장을 보여 인구 증가를 감안시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온 결과 '90년의 GNP는 235억달러, 1인당 GNP는 1,095달러로 GNP는 우리의 10분의 1, 1인당 GNP는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90년대에는 2~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다 소련 ·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거래에 적용되던 우대 가격이 폐지되고 국제가격에 의한 硬貨決濟가 적용됨에 따라 심각한 물자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 2〉 남북한 경제력 비교

	남 한(A)	북 한(B)	A / B(배)
인 구(만 명)	4,279	2,141	2.0
(인구증가율)(%)	0.98	1.83	0.54
국민총생산(GNP)(억달러)	2,379	235	10.1
경제성장률(%)	9.0	-2~ -4	-
1인당 GNP(달러)	5,569	1,095	5.1
군사비(억달러)	97.3	50.0	1.96
재정규모(억달러)	487	168	2.93
무역규모(억달러)	1,349	46.4	29
수출(억달러)	650.2	20.2	32.2
수입(억달러)	698.4	26.2	26.7
총외채(억달러)	317	78	4.6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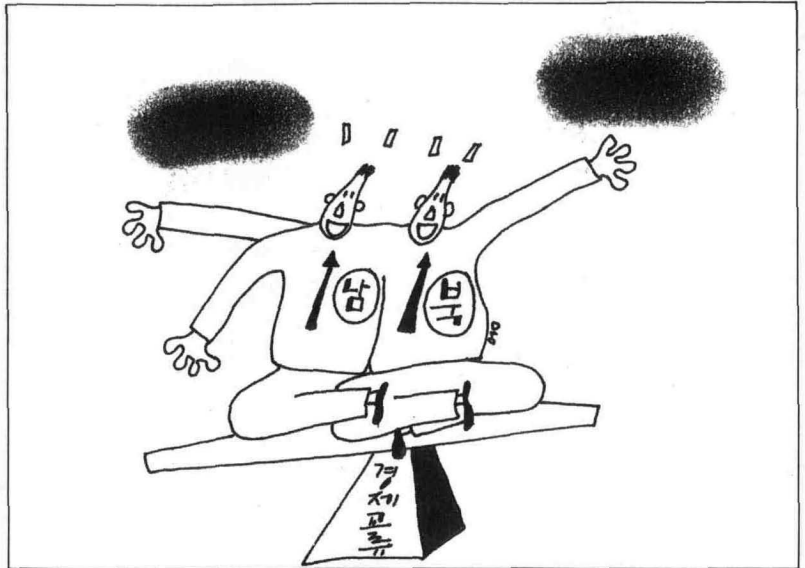
식량사정이 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최근의 대외경제정책면에서 몇가지 특기할 만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북한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력을 日本을 포함한 동남아제국과의 경제협력력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련측이 硬貨決濟를 이미 요구하였고, 최근의 蘇聯事態로 양국 경제관계 위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북한무역액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측도 '92년도부터 경화결제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여서 경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이들 양국과의 무역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中·蘇로부터 구입하던 물자를 일본 및 동남아제국으로부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과의 경제협대는 수교교섭과 관련하여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며, 東南亞諸國과의 경협도 경제구조상 당분간은 큰 진전을 기대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둘째, 당면한 經濟難 타개를 위해 개방정책은 불가피하게 추진하되 체제위협과 관련, 전국적인 개방이 아니라 부분적인 개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북한측이 중국식의 特區를 구상하고 있는 두만강유역(나진·선봉·새별)은 인구희소지역이고 북한의 最北端에 위치하고 있어 개방효과의 대내파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방전략에 있어서는 개방지역에 합작형태의 외국자본을 적극 도입



하되 외국기업이 생산수입해 가는 개발수입(product buy back)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자(대외경제사업부 임태덕 일본과장)가 “일본은 최근 해외에 투자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일본이 습괄 등의 방식으로 조선에 투자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한다면 쌍방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일본 교토통신과의 회견에서 밝힌 것이 좋은 예이다.

넷째, 북한경제의 회복에 필수적인 외국자본 유치와 사회기간시설 부족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 社會間接資本(SOC) 투자를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점이다. SOC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인 바 국제금융기관(ADB, IBRD)등 자금의 적극 유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ADB 가입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촉진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간에는 풍부한 경제협력 잠재력이 있고 최근의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와의 경제협력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경제교류협력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외적인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한편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신축적인 대응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하겠다.

첫째로, 경제교류협력을 전체적인 統一政策의 테두리내에서 추진하되 經濟論理에 입각하여 가급적 정치·군사문제와 분리추진하여 경제교류협력의 조기실현과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북한측의 先政治·軍事問題 해결주장이 경제교류협력 추진의 최대장애 요인이었지만 우리측에서도 남·북경제교류협력이 경제적 실리추구는 물론 신뢰기반 구축을 통하여 통일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일 논의에서는 경제 교류를 정치·군사문제의 下位概念으로 인식해 왔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對北 경제교류협력 논의는 가급적 정치·군사문제와 분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의 대내업무 추진체계도 각 經濟部處가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전문성을 살려 추진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입장을 감안하여 迂迴進出을 통한 경제교류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현단계에서는 우리 商標가 부착된 상품의 북한내 유통과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진출이 용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 第3國法人(해외동포기업 또는 우리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합작투자진출 지역은 가급적 제3국 또는 지역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개방효과가 적게 미치는 지역에 우선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UNDP의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을 통한 북한의 經濟貿易地區(나진·선봉·새별) 진출과 비무장지대의 일정 지역을 경제활동 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남북한 UN동시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多者間 협력사업'의 성사가능성이 높은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UNDP·UNIDO 등 UN의 산하기관을 통한 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경제교류협력을 전체적인
統一政策의 테두리내에서 추진하되
經濟論理에 입각하여 가급적
정치·군사문제와 분리추진하여
경제교류협력의 조기실현과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있고, ADB·IBRD 등 국제금융기관에 의 북한가입과 이들 금융기관을 통한 북한지원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이 해운·원양어업·자원개발·건설 등의 분야에서 合作會社를 설립하여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통행·통신·통상 및 경제협력의 3通協定을 체결하도록 노력하되 3通協定 체결 이전 단계에서는 민간단체 주도의 경제교류협상창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독은 統獨前 상공회의소 산하에 '상공신탁관리소'를 설치 운영하여 양독간 경험을 주도하였으며, 대만은 '양안간상무협조회'를 설치하여 對中國 경제교류 협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북한의 경우 未修交國과는 민간단체인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상대국의 민간단체와 민간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직교역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태세

최근의 소련사태에 따른 사회주의

몰락의 가속화 등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이제는 본격적인 남·북경제교류와 통일을 현실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家計·企業·政府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국민경제의 각 주체는 國際收支 정착과 내실있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경제의 통일여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민족의 宿願인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자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통한 경제적인 實利追求와 신뢰회복이 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의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정립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對北 및 對內 지원체제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북한의 장단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체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민간기업은 제도의 '틀' 내에서 실제 경제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實利를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단기적인 실리보다는 미래의 시장을 개척한다는 좀더 장기적인 실리추구와 함께 민족통일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남북경제교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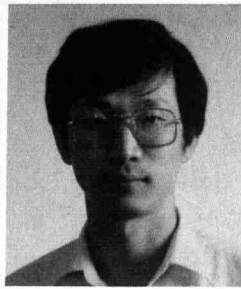
아울러 일본에서는 정부차원의 북한·일본 修交交渉과는 별도로 북한시장 先占과 한국 견제를 위해 민간차원의 經協論議를 매우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본문]

統獨 이후의 독일경제가 남·북한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東·西獨은 '90년 7월 1일 경제통합으로 單一經濟圈이 되었고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형태로 경제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통합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東獨은 산업생산의 급격한 하락과 높은 失業率로, 그리고 西獨은 貿易收支의 惡化와 물가상승으로 經濟的 고통을 겪고 있다. 아래에서는 경제통합후 전개되고 있는 동·서독경제를 살펴보고 남·北韓 經濟統合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동독경제 : 산업생산 급격한 下落勢

舊東獨의 價格體系는 사치품 소비재는 商品賊課金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하였고 生必需品는 價格支援金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하였다. 구동독민의 消費構造를 보면 생계비에서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치품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통합으로 商品賊課金과 價格支援金이 撤廢되면 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90년 12월말 東獨의 消費者物價는 전년도 대비 오히려 0.9% 감소하였다. '91년에 들어 소비자물가가 비록 상승추세에 있으나 그 상승폭은 동구권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미미하다.



배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예상과는 달리 소비자물가가 안정된 것은 需要側面에서 임금에 대해 1:1의 통화교환 비율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失業의 急增으로 총임금소득이 감소하여 購買力이 減少하였거나 停滯되었기 때문이며, 供給側面에서는 동독의 공급부족 물자를 제때에 공급해줄 수 있는 西獨이 존재하여 다른 동구권 국가들처럼 供給不足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가안정과는 달리 産業生産은 급격히 하락하여 '91년 2월의 산업생산은 '89년 12월 수준의 30%에 불과한데, 이것은 예상을 훨씬 넘는 것이다. 동독경제가 이처럼 악화된 것은 社會主義 경제체제하에서 형성된 동독의 취약한 경제구조에 근본적으로 기인하지만 경제통합 과정에서 급격한 賃金上昇에

의한 경쟁력 약화와 제반 제도적 요인으로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급격한 賃金上昇은 통독후 서독의 생활수준을 요구하는 동독주민의 지나친 요구에도 원인이 있지만 1:1의 通貨交換比率에 의한 경제통합에 근본적으로 기인한다. 경제통합 이전 동서독간 상업거래시 적용되던 통화교환비율 1:4.4에서도 동독제품은 國際競爭力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1:1의 等價交換으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뒤의 동독 제품은 국제경쟁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어 많은 기업이 倒産하게 되었고 산업생산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투자부진을 가져온 제도적 미비점과 모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國家條約의 '返還을 원칙으로 하고 賠償을 예외적인 것으로 하는' 국가소유의 재산 및 부동산 처리조항이다. 이 조항은 사유재산 보장의 法理的인 차원에서만 고려된 것으로 經濟的인 측면에서는 이 조항이 구동독의 투자를 저해하는 가장 독소적인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經濟部의 學術諮問團은 현재 이 조항을 修正하여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반환은 예외적으로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간접교역 위주의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남·북한의 경제구조로 볼 때
經濟外的인 장애요인만 제거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 정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제도적 요소로 지나친 사회보장적 요소의 강조를 지적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각종 노동자의 보호규정은 동독에 투자하고자 하는 서방기업들의 投資心理를 위축시켜 동독 경제의 재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려는 이들의 資質 向上 노력도 저해하고 있다. 사회보장적 요소의 지나친 강조는 독일의 財政的 負擔을 크게 압박하여 동독 경제재건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축시키는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91년 동독지역의 재정지원액은 약 1천억 DM이 되는데 그 중 3분의 1이 失業手當으로 支援될 展望이다.

동독 경제의 약화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언급되어야 할 것은 현재의 동독 경제상황이 점진적인 체제전환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체제전환 전략을 선택한 데서 기인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는 구동독의 경제체제가 결국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시장경제질서 도입이 점진적 도입보다 바람직함을 말해준다.

첫째,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新自由主義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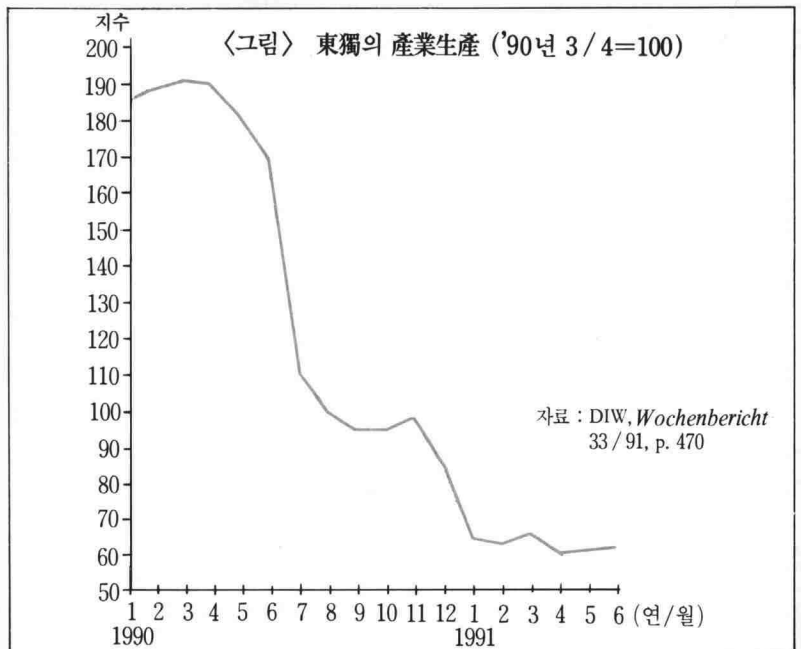
의 견해에 의하면,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질서를 도입할 경우 급격한 경제악화는 없을지 몰라도 相異한 경제체제가 상당기간 동안 서로 並存함으로써 생기는 혼란과 시행착오 등으로 경제체제는 더욱 不安定해지고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즉시 전부분에 걸친 시장경제질서의 도입은 단기적으로 동독 경제를 급속히 악화시킬지라도 체제전환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에 의한

자원의 낭비를 極小化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인 체제전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둘째, 독일의 역사적 경험('30년대의 시장경제체제에서 國家社會主義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40년대말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재전환)이나 東歐圈의 체제경험도 극에서 극으로 경제체제를 전환할 경우 즉시 全部門에 걸친 體制轉換이 보다 바람직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특히 최근 동독의 경제상황을 보면 조만간에 경제가 回復勢로 들어갈 것이라는 여러 징후가 보이고 있다. 악화일로에 있던 산업생산은 '91년 1월 이후 주춤하여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으며(〈그림〉 참조) '91년 2/4분기 동독의 국내총생산도 1/4분기에 비해 3.7%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동독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악화의 最低點을 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經濟統合 1년간의 고통후 경제가 점차 회복세로 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體制轉換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을 말해준다. 오히려 많은 경제학자는 예상을 넘는 오늘날의 동독 경제악화를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제반정책결정 즉, 경제적 측면을 도외시한 通貨交換比率의 결정, 재산 및 부동산 소유권 문제에서 경제적인 측면보다 法理的인 측면만의 강조, 그리고 市場經濟질서를 교란하는 지나친 사회보장적 요소에서 찾고 있다.

西獨 經濟: 經常收支 惡化와 소비자물가 상승

동독 경제와는 달리 경제통합후 서독 경제는 東獨特需로 인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특히 식료품 및 嗜好品, 기타 消費財部門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식료품 및 기호품부문은 경제통합후 매분기 16.3%~1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소비재도 5.4%~7.8%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 西獨의 국내총생산은 '90년 3/4분기 전년 동기대비 5.7%, 4/4분기 5.1%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고용도 경제통합후 매분기 거의 3.5% 이상의 신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經濟統合으로 서독에 나타난 否定的인 경제현상으로는 經常收支 악화와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지적할 수 있다. '90년 독일은 643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경상수지가 44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경제통합후 점차 경상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하다 '91년에 들어오면서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貿易收支도 '91년 4월에 8억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무역수지의 악화는 통독수요로 인한 수출의 감소와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다. '91년 서독지역의 수출 증가율은 東獨 地域을 포함할 때는 약 9% 증가할 것으로 짐작되나 동독 지역을 제외할 경우 단지 1%만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貿易收支의 적자와 함께 지적되어야 할 것은 서독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이다. '91년 3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계속 상승하여 7월에는 4.5%를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82년 이후 가장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이는 통독특수로 인한 수요급증에 기인하지만 동독 경제 재건을 위한 재원마련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增稅措置에도 크게 기인한다.

남·북한 경제교류에 주는 시사점

남·북한 경제가 통합되어 북한에 市場經濟秩序가 즉시 全部門에 도입될 경우 현재의 북한경제로는 거의 붕괴 상태에 놓일 것이며 이에 따라 남한 정부의 부담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이 요망된다.

경제통합을 이룩하기 前 북한의 경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 경제통합 이후 북한 경제의 붕괴 정도가 크게 악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남한정부의 統一費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 經濟交流에 임하는 남한 정부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는 가능하다면 향후의 경제통합후를 대비하여 상호보완적인 경제교류로 발전시켜야 한다. 西獨政府는 동서독간 경제교류를 인도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발전시켜 온 데 비해 동독정부는 경제적인 목적에서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兩獨 간의 경제교류는 통일을 대비한 상호보완적인 경제교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독간의 경제교류는 경제통합후의 동독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남한 정부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에서 단순히 북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경제통합 이후를 염두에 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제통합시 결정되어야 할 남·북한간 通貨交換比率에는 남·북한간의 경제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경제통합후 북한지역에 새로이 적용될 모든 제도는 투자를 활성화시켜 북한 경제가 신속히 회생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통합후 예상되는 북한지역에서의 需要急増을 국내생산이나 수입으로 즉시 충당할 수 있는 南韓의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북한 지역의 소비자물가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 정부는 이를 예상하여 경제통합 때까지 경제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요급증과 북한경제 재건 지원 등으로 남한에서도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무역수지도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國際收支를 철저히 관리하고 經濟가 安定的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문

북방 및 南·北韓 교통분야 협력전망

東歐圈의 大變革과 蘇聯공산당의 몰락 등 세계는 바야흐로 革命的인 變革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를 東西로 갈라놓아 대결과 경쟁으로 치닫해 왔던 戰後의 冷戰體制가 붕괴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혁의 흐름속에서 北方國家들과의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의 國際輸送網도 계속 확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남북관계도 진전되어 斷絶과 閉鎖의 빗장이 풀려 半世紀 이상 단절되었던 南·北交通網이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北方 및 南·北間 交流協力增大에 대비한 교통분야 대책 및 전망을 鐵道·海運·航空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鐵道部門

南·北間 鐵道の 連結

분단과 함께 단절된 南北鐵道網으로는 京義線·京元線·金剛山線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京義線의 단절구간은 문산-봉동間 20km이며 남측지역인 문산-장단間 12.1km를



김규선
교통부 국제협력과장

復舊하는 데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실시설계와 임진강 교량의 下部補強工事を 완료하고 현재 용지를 買收中이다.

京元線 단절구간은 신탄리-평강間 31km이며, 남측지역인 신탄리-월정間 16.2km를 복구하는 데는 최소 1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實施設計를 하고 있다.

金剛山線 단절구간은 철원-내금강(거리 미상)이며 남측지역인 철원-금곡間 24.5km를 복구하는 데는 최소 1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현지조사 및 實施測量을 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철도가 효과적으로 연결

되기 위해서는 路線復舊에 대한 남북 쌍방간의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鐵道路線復舊는 여타 交通網 연결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복구대상노선은 南·北 交流時 많이 이용하게 될 경의선·경원선·금강산선順으로 해야 할 것이며, 동해북부선은 위의 노선에 비해 투자비가 과다소요되고 동해노선은 도로망을 이용하는 것이 더 效率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 계획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南·北間 철도연결은 장래에 중국·소련 등의 국제철도망과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北方國家들과의 鐵道協力

시베리아橫斷鐵道(TSR : Trans Siberian Railroad)는 소련의 極東港口인 보스토치니에서 모스크바를 경유 유럽각지로 연결되는 길이가 1만2천km에 이르는 철도이다. 시베리아횡단철도는 '71년부터 극동지역과 유럽·中東間 貨物輸送路로 對外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73년부터 유럽·中東지역 수출입화물수송에 이 철도를

**北方國家들과의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우리의 국제수송망도
계속 확충되고 있으며, 冷戰體制의 붕괴에 따른
南·北韓間 화해분위기에 힘입어
半世紀 이상 단절되어온
교통망의 南·北 연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해왔으며, 北方國家와의 交易增大로 점차 物動量이 급증하고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가 한국의 對 소련 및 동구권에 대한 주요 수송로가 되어가고 있는 이유는 東歐圈 대부분 국가들이 內陸國인데다가 西方유럽 국가와 다른 연계수송체계가 없어 현재로서는 화물수송에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수송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에즈운하를 통한 海上輸送路보다 運費이 30~40%나 저렴하고 수송기간도 약 20여일 정도 단축되는 등 많은 利點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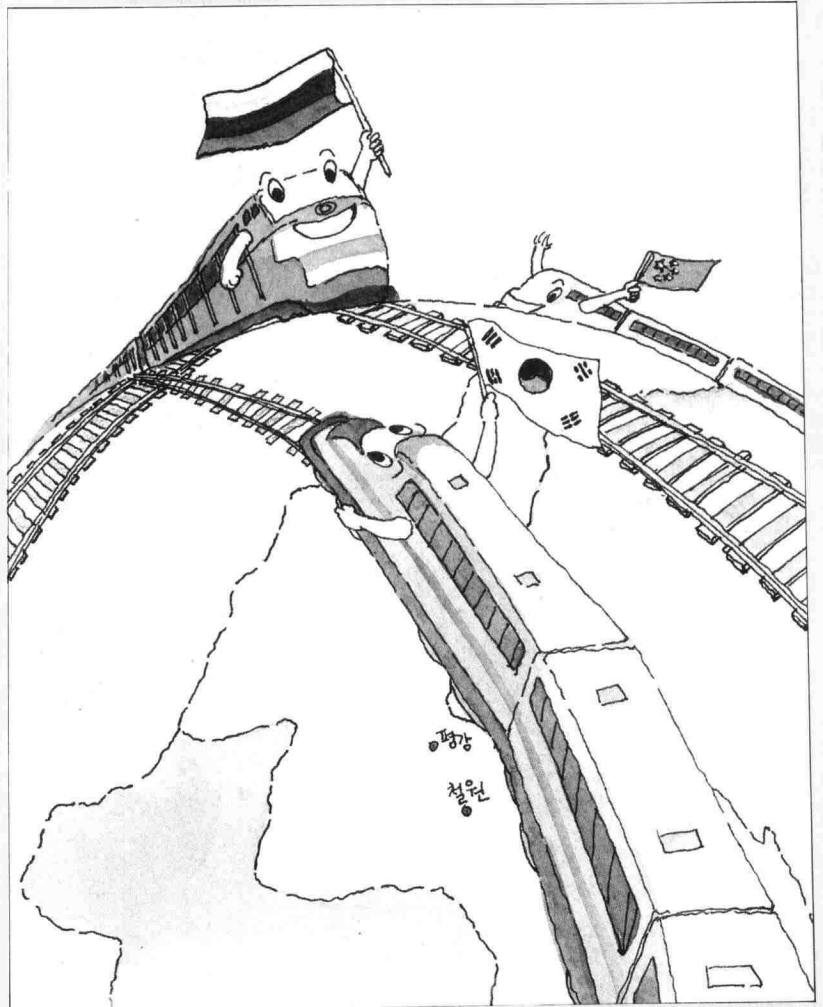
그러나 소련의 自國貨物優先輸送으로 인해 외국화물의 수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화물유통시스템이 낙후되어 蘇聯內陸輸送中 貨物追跡이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있어, 앞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련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시베리아횡단철도 외에도 주요 國際鐵道網으로는 中國橫斷鐵道(TCR : Trans China Railroad)가 있는데, 이는 中國 東岸의 연운항에서 시작하여 란저우·우루무치를 경유, 中·蘇接境地域인 알라산쿠에 이르는 길이가 4,431km에 이르는 철도이다. 중국횡단철도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계되면

알라산쿠-노브시비르스크-모스크바-유럽각지로 연결이 가능한데, 이를 유라시아철도(Eurasia Railroad)라고

한다.

中國은 중국횡단철도를 작년에 개통하였는데, 내년부터 대외화물수송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중국횡단철도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시베리아횡단철도만을 이용할 때보다 극동과 유럽 수송거리가 약 2천km 단축되는 등 많은 利點도 있으나, 중국의 화물수송체제의 낙후, 국경통과에 따른 多國間協定締結, 궤도폭의 차이(중국횡단철도는 1,435mm, 시베리아횡단철도는 1,520mm)로 인한 수송도중 貨物換積 등 문제점도 많다.



**우리 國籍機가
중국·몽골·소련 영공을 통과하여
유럽의 주요 도시에 운항하게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될 경우 거리와 시간이
최대han으로 단축되어 국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횡단철도는 유라시아大陸을 잇는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중국 등과 路線利用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 복합운송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가 연결되면 부산항에 입항한 화물이 歐洲로 연계수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海運部門

南·北 海路連結

北韓은 현재 항만시설의 不備, 화물선의 부족 등으로 海運分野가 부진한 실정이다. 주요항구는 남포·청진·홍남·원산·나진 등이며, 남포·홍남·청진은 外港으로서 외국과의 對外貿易의 창구가 되고있다.

南·北韓 海路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합의하에 一定港口(예를 들어 인천·부산·동해·남포·해주·원산·홍남 등)를 개방하여 定期旅客船·貨物船·航路를 개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절차를 제시하면, 우선 南北 海運協定 체결전이라도 直交易을 위해 不定期 航路를 개설하고 차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海運협정을 체결하여

定期航路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南·北海運協力事業으로서 海運合資會社를 설립하여 遠洋海運사업에 공동진출하는 방안과 북한의 港灣施設擴充工事に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北方國家와의 海運協力

소련과는 부산-보스토티니間 정기 컨테이너선 直航路가 지난 7월 10일부터 개설되었다.

중국과는 인천-위해間 정기카페리 旅客船이 작년 9월부터 운항중이며, 앞으로 인천-천진, 인천-대련間 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인천과 상해·청도·대련·천진間 정기컨테이너선 直航路가 '89년부터 개설되어 운항되고 있다.

이들 국가와 海運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당국 國籍船에 의한 운항·제3국간 貨物輸送에 공동 참여·시베리아횡단철도 및 중국횡단 철도와의 복합운송체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航空部門

南·北韓 航空路의 연결

北韓의 민간항공노선을 보면, 순안-

선덕-청진間을 1日 1回 정기운항하고 있으며, 그외에 순안空港을 중심으로 혜산·개천·삼지연·어랑·회문 등지에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국제선은 평양과 모스크바·북경·소피아간을 정기운항하고 있는데, 北韓의 민간항공은 노선·운항횟수 면에서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南·北韓 航空路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과 평양간 직항로를 개설하고 점차 김해·제주공항 등의 남한 측 공항과 북한측의 주요 공항을 잇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航路開設원칙이 합의되고 航空交通管制協定·航空運輸協定 등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北方國家와의 航空協力

'80년대 후반들어 나타난 냉전체제 종식과 정부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에 힘입어 소련·헝가리·폴란드·체코·유고·루마니아 등과 항공협정을 체결했으며, '90년 3월부터 서울-모스크바간 정기항공편이 주2회 운항되고 있다.

앞으로 中國과 항공관계가 개선될 전망이며 이미 몽골은 우리 항공기의 自國領空통과를 허용할 뜻을 표명한 점을 고려할 때, 극동에서 출발한 우리 國籍機가 중국·몽골·소련 영공을 통과하여 유럽의 주요 도시에 운항하게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될 경우 거리와 시간이 최대han으로 단축되어 국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또한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로 극동의 항공 중심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문]

우리는 어느 기업의 생산성이 어떻고, 어느 나라의 생산성(이 경우에는 國際競爭力이라고도 한다)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문제의 파악과 해결책을 구하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개 可視的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通貨量의 부족과 높은 金利수준 때문에 代替施設投資가 되지 않아 제품의 質이 좋지 않다느니..., 정부의 기술개발에 관한 R&D 투자가 시원치 않아 최신기술에의 접근은 엄두도 못내기 때문이라느니... 하는 등등의 얘기를 들을 紙上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 온 바이다. 필자도 이제껏

(前 『이코노미스트』誌 동경지국장)는 불과 몇 달도 못가서 와다나베 쇼이치가 쓴 『태양은 계속 떠오른다』는 책 한권의 반격에 동양사회를 보는 서양인의 典型的인 관찰력 부족의 오류를 인정하고 말았다. 그는 일본경제의 表面만 보았지 수면하의 숨은 강점, 즉 '85년 9월 G5회의(일명 plaza 협정)이후로 목을 졸리우기 시작한 日本經濟가 4~5년에 걸쳐 무서운 열정과 속도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엔高'라고 대표되는 그때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세계경제의 一等走者로 부상하게 된 저력을 간과한 것이었다.

기술개발의 저력은 이토록 엄청난 것이어서 日本은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경제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G7, G5가 아닌 G3(일본·미국·유럽)만 모여서 얘기하자고 나올 정도로 자신만만한데, 이는 역시 새로운 生産要素인 기술개발에 성공한 데서 오는 힘 때문이 아닐까?

WBC헤비급챔피언을 쟁취한 권투선수가 언젠가는 3대(WBA·WBC·IBF)통합챔피언이 되는 것을 꿈꾸듯이 이렇게 지역챔피언(G3 중의 하나)에 登極한 일본이 머지않아 통합챔피언(G1)까지 노리게 될 것은 자명한데, 이렇게 야무진 꿈을 꾸게 되는 힘의 源泉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기술개발외에 새로운 생산요소인 시간과 정보의 관리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각자 하루 24시간이라는 제약된 자원하에서 쏟아지는 新知識을 전부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듣고 받는 정보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볼 수 있으므로 시간과 정보는 생산요소로서 相互補完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음.)

그러면 일본인이 얼마나 시간과 정보를 잘 관리(활용)하는가를 몇 가지 實例를 들어 보기로 한다. 기차나 비행기·시외버스·선박이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것은 세계의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만 일본에서 각 정류장마다 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시간표가 붙어있는 것을 보면 일본인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지키려고 노력하는가를 단적으로

일본의 생산성 원천

강응선 경제기획원 서기관 / 일본경제기획청 파견

그러한 접근방식이 타당한 것이라고 여겨왔었는데, 요즘은 일본의 경제·사회현상들을 자세히 보노라면 무언가 다른 측면에서도 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生産性的의 정도를 좌우하는 요인들, 즉 生産要素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종래 학창시절에 보았던 經濟原論冊에서는 '노동·자본·토지'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70년대에는 技術(technology)이, '80년대에는 시간(time)이 생산요소로서 추가되고 있으며, 或者은 이제 정보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는 정도에까지 와 있는 실정이다.

'90년초 『太陽(日本)은 다시 가라앉는다』라는 책을 써서 일본의 국민·기업들을 놀라게 했던 영국 『이코노미스트』誌의 빌 에머트씨

로 알 수 있다. 물론 地上交通이니만큼 통근 러시아워나 사고발생시 변동이 생기기 는 하지만 대개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이는 버스업자(주로 地自團體)가 자신의 시간이 중요한만큼 이용자인 일반시민의 시간도 그만큼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몇분 간격으로 오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게 될 때 각 개인이 입는 시간적 손해와 이를 전국적으로 合算해 볼 때 그 시간의 사회적 손해는 어느 정도일까?

필자도 경험한 바이지만, 서울을 다녀온 일본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때에 연락을 할 수 있는 공중전화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약속이 늦어지거나, 移動中の 업무 연락을 위해서 등 바쁜 현대생활에 집·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의 통신수단에 대한 요구는 증대하기 마련인데 서울에서는 큰거리·번화가·가게(물론 인심좋은 가게) 등에서나 공중전화를 접할 수가 있다. 큰거리·가게 앞은 물론 뒷골목 곳곳에 고개만 한바퀴 돌리면 공중전화가 금방 눈에 떨 정도의 東京거리에서는 전화를 찾느라, 전화 앞에서 줄을 서느라 보내는 시간을 쉽게 절약할 수 있다(인구 천명당 日本全國이 7대, 東京은 30대 수준으로 공중전화가 보급돼 있다). ‘싸우며 건설하는’ 것이 開發年代(‘60~’70년대)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일본인의 모습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걸으면서 일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기에 휴대용 전화기까지 발명해 내지 않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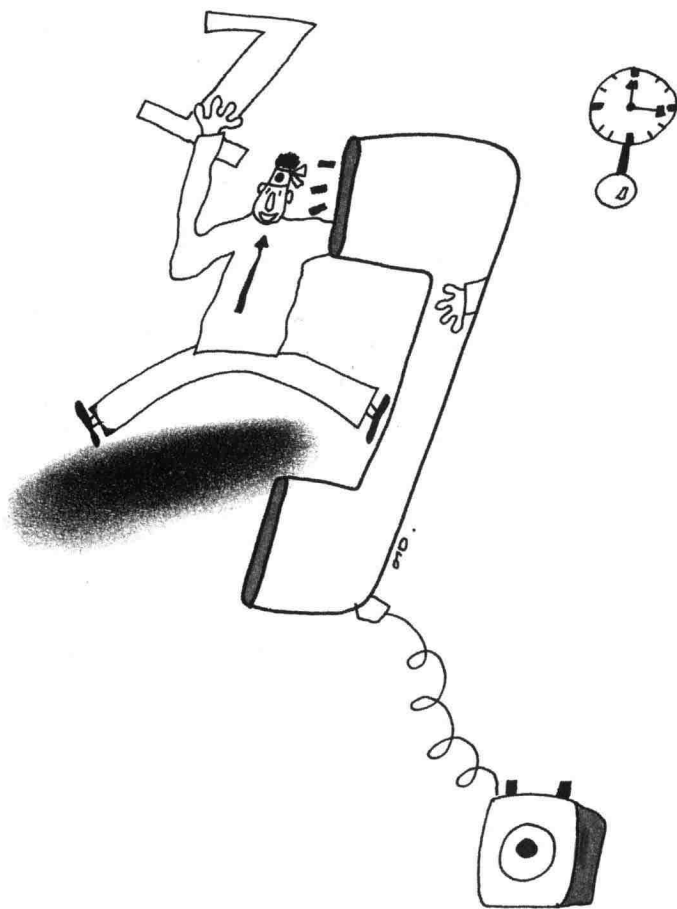
금년 여름 국내항공회사들이 즐거운 비명속에 진짜 비명을 울었다고 한다. 國內·外路線 대부분 예약이 넘쳐 어떻게 처리할까 애를 먹었는데 막상 비행기가 출발할 시간에는 의외로 좌석이 비는 경우가 許多하였다고 한다. 일본 시내버스의 例가 供給者가 소비자(일반 이용자)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비행기·호텔 등의 예약이야말로 소비자가 공급자의 ‘時間’이라는 機會費用을 소중히 아껴주어야 하는 예라고 본다. 美國·日本 등에서는 當日취소(연락이 없는 것은 물론)

는 100%, 하루 전에는 50%, 이틀 전에는 30%정도를 대개 벌금(?)으로 받고 있는데 그들은 너무 가혹하거나, 아니면 문명국이 아니어서 그런 것일까?

서울 거리에는 세종로大路, 강남대로 등 큰 길이 많고 차량도 100만대 수준에 불과한 데도 늘 길이 막혀 있고, 東京에는 500만대 이상의 차량이 별로 넓지도 않은 길들을 잘 흘러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或者는 東京의 지하철이 잘 발달되어서 평일의 차량이용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東京에서는 모든 뒷골목이, 신체내의 血管처럼 차량소통을 원활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그 넓은 뒷골목도 밤에는 물론, 대낮에도 함부로 들어가기가 무섭다. 잘못 들어가면 불법정차 차량 때문에 進退兩難의 곤경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나 한 사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명의 귀중한 시간을 앗아가는 대표적인 社會的 損失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땅값이 비싼 나라여서 골목길 疏通을 위해 곳곳에 빈 땅을 확보하고 그곳에 주차장을 짓는가 하면, 각자가 아끼던 자기집의 정원마저 없애는 개인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美國에 살고 있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보면 결코 한국인이 뒤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 일본의 研究界와 한국의 연구계, 나아가 일본과 한국을 全般的으로 비교할 때 왜 우리가 뒤지고 있는 것일까? 이는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競爭度가 낮은 관계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有限性和 따라서 시간의 生産性에 관심을 덜 갖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국제경제전문가가 있다고 하자, 한국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경제, 나아가 일본·EC 경제 정도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경제에 연결시켜 늘 立場을 정리하고 있으면 될 것이다. 일본에서 동일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는 미국·EC는 물론 中東·蘇聯·東歐·南美·아프리카 등 세계



향상요인으로서, 그 대표적인 예가 공동연구에 의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개발, '제5세대 컴퓨터'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공동연구, 집단연구는 기술분야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기업·학계뿐만 아니라 官廳 등 모든 組織體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앞에서 열거한 자신과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함께 오늘날 일본의 생산성을 저변에서부터 뒷받침해 주는 요인이 아닌가 한다. '90년 3월 미국에서 出刊되어 화제가 되었던 MIT 대학의 「美·歐·日 산업생산성 비교보고서」에서도 바로 일본의 공동연구, 즉 정보의 수직·수평적 교류의 원활함을 強點으로 지적하였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서양인의 사고와 체질로써는 參考學習이 어렵겠지만, 類似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의식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못 해낼 일은 아니라고 본다.

흔히 행복의 원천은 멀리서 구하는 게 아니고 생활주변의 日常事에서 찾아야 한다고들 한다. 이자율·R&D투자 등 거시적인 變數의 고려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좀더 '나와 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기탄없이 주고 받는 간단한 일에서부터 生産性向上의 계기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하루 몇사람을 만나야 할 것인가를 時間帶別로 적고 회사를 나와 일이 끝날 때마다 즉시 휴대용 전화기나 공중전화에서 회사와 연락을 취하며 일을 보는 일본의 영업사원과, 오늘 교통사정에 따라 몇사람을 만나게 될지 불확실한, 대강의 스케줄을 가지고 회사를 나와 일을 보기 시작하면서 회사와 전화연락을 취하느라 불편과 짜증까지 겪어 가면서 일을 보아야 하는 한국의 영업사원과의 차이가 일본과 한국의 생산성의 차이를 얘기해 준다고 하면 너무 극단적인 비유가 될 것인가? '시간'과 '정보'의 효율적 이용, 이것이야말로 바로 오늘날의 일본을 앞서 가게 하고 내일에 自信을 갖게 하는 일본의 강점이다. 나라경제

구석구석과 그 지역의 經濟外的 要因, 특히 정치와 군사면까지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전문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한국과 일본전문가 모두, 하루는 24시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일본전문가는 한국의 전문가보다 몇배의 넓이와 깊이를 소화할 수 있다는 말인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일본의 전문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有限性을 알고 미리 국제경제 중에서도 특정지역, 특정분야에 전문화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정보)을 隣近전문가와와의 활발한 交流를 통하여 시간의 생산성을 몇배 올려감으로써 전문가 역할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련전문가끼리의 활발한 교류에 의한 時間制約의 극복은 일본의 독특한 생산성

1957년에 체결된 EEC조약(로마)에 의거 시행되어온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 공동농업정책)은 관세 및 대외통상정책 · 운수정책 · 경쟁촉진정책과 더불어 EC의 공동정책이다.

동조약 체결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세부시행 지침 및 장치 등은 '62년 3월 EAGGF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완료되었다.

EC 공동농업정책이란

CAP의 기본제도를 간략히 소개하면, 첫째 공동가격 · 공동대외통상정책 · 역내국가간 농산물 유통장벽 제거 등을 골자로 하는 單一市場 構成原則이며, 둘째 가격지지(2중가격제), 역외농산물의 搬入방지(가변부과금제) 및 해외판매촉진(수출보조금) 등 EC產 농산물의 販路保護原則이며, 셋째 공동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財政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인데, 이에 따라 마련된 것이 바로 EAGGF이다.

즉, CAP는 충분한 재정적 보조를 바탕으로 하여 농산물의 價格支持, 저렴한 해외 농산물의 반입으로 인한 생산기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수입부과금과 잉여농산물의 해외판매촉진을 위한 輸出還拂金, 즉 域內농산물 가격과 세계시장 농산물가격 차액을 수출업자에게 보조하는 등 완벽한 農業保護裝置를 마련,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장치에 힘입어 CAP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당초 목표였던 식량안보는 '70년대 초반에 이미 달성하는 한편, '70년대 후반부터는 오히려 과잉생산에 따른 재정부담 뿐 아니라, EC 농산물이 세계농산물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미국 ·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들과의 무역마찰(수출보조금 전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GATT 체제에서 거의 예외로 취급되었던 농산물 분야를 GATT체제로 흡수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세계 여론에 따라 '86년부터 시작된 UR 협상의 成敗가 농산물 협상 타결여부에 달린 상황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EC의 농업구조는 미국 · 캐나다 · 호주 등에 비해 영세(호당 규모 13ha 수준)할 뿐 아니라, '80년대 중반 이후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지가격을 계속 인하해 온 결과, 농업생산성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 자체가 감소하여 都 · 農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들이 露呈되고 있다.

EC 공동농업정책 개혁방향을 보며

이관용 농림수산부 서기관 / 주 EC 대표부 농무관

CAP 改革

EC는 이러한 CAP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8년초 제1차 CAP 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 '85년에 착수하여 3년여 동안 회원국간의 협상결과 합의된 사항은, 농업재정부담을 감소 또는 일정수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 가격지지, 예 산증가를 한도설정 및 생산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곡물분야의 價格保障限度量을 연간생산 1억6천만 M/T(meter ton : 미터 톤)으로 한정하고 우유생산 쿼터제 · 휴경보상제 · 농민조기연금제 실시 등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1차 개혁은 CAP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CAP 시행결과 표출된 부작용을 치유해 보자는 일시 미봉책

이었으며, 다행히도 '88~'89년중에는 미국 등 수출국과 소련 등 수입국의 흉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갔으나, '90년에 들어 세계 농산물 수급상황이 정상화되자, EC의 주요 농산물 재고는 다시 격증하였다. '91년 5월말 현재 곡물(쌀 제외) 재고는 2천만 M/T 수준이며, 연말까지 3천만 M/T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쇠고기는 80만 M/T, 분유 및 버터도 70만 M/T 그리고 돼지 및 양고기·설탕·올리브유·포도주 등 대부분의 농산물 재고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생산억제를 위한 시책도 우유생산 쿼터제 이외에 休耕補償制·早期年金制度 등은 이행 실적이 거의 없어 효과적인 시책이 되지 못해, 과잉생산 해소에 보탬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91년 2월 EC 집행위는 CAP 개혁 기본방향을 다시 제시, 제2차 CAP 개혁 논의를 가졌는데, '91년 7월 11일 EC 집행위는 개혁 구체안을 농업이사회에 제출하였다. 금번 개혁의 필요성, 즉 문제점 인식은 제1차 개혁 당시와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으나, 개혁의 시급성이나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많은데, 개혁방향 요지와 접근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生産者 保障價格을 대폭 인하(품목별로 10~35% 정도)하여 순수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 노력을 조성하는 한편, 국제 가격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가격지지에 의한 식량안보 확보라는 CAP기본 목표의 큰 변혁일 뿐 아니라, 輸出補助金減縮이라는 부수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둘째, 영세농에 대한 直接所得補助制度가 대폭 보장될 것이다. 직접소득보조 시행형태는 품목에 따라 생산과 분리한 소득보조 또는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缺損補助制를 채택한다는 案으로 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생산감축과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데 있다.

셋째, 생산감축을 위한 생산쿼터제·휴경보상제·농민연금제 등의 효과거양을 위한 시책이 강구될 것이며, 이는 所得補助와 연계되어

실시될 것이다.

넷째, 농업이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농업시책, 즉 휴경농지의 산림복구 등 長期休耕補償制·단위당 가축사육두수 제한 등과 더불어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줄이는 방안들이 강구될 것이다.

다섯째, 농촌지역개발과 농촌사회보전을 위한 지역의 균등한 개발정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개혁방향을 분석해보면, 이제까지 CAP는 순수농업정책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여 왔으나, 이번 개혁에는 농업정책과 함께 농촌개발·환경보전 등 사회정책적 조치를 함께 고려한다는 내용인바, 제1차 CAP 개혁 당시보다도 회원국간 의견차이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CAP 개혁추진을 보며

EC가 CAP 개혁을 서두르게 된 근본이유는 CAP 추진의 대표적인 목표, 즉 식량안보라는 목표를 이미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농업보호시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인식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간 자원배분의 불균형, 높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 가축방목·화학비료·농약의 과다사용 등이 가져오는 환경오염, 농산물 교역마찰이 타산업에 주는 피해 등을 개혁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EC의 CAP 개혁은 EC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EC 농업을 세계시장에 적응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EC 내부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개혁 작업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점은 다양하다.

첫째, 최근 미국의 CNN 등 세계적인 언론 매체는 쿠르드 난민·수단·알제리아·소말리아 등 식량기근지역의 참상을 보도하는 사례가 늘었다. 그러나 美·EC간 농산물 전쟁과 EC의 CAP 개혁은 식량이 남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한편에서는 식량부족으로 연 수백만명이 餓死하고

있는데, 다른 편에서는 식량생산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보며, 과연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汎世界食糧安保(global good security)라는 개념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둘째, EC 농업과 우리 농업은 다같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즉, EC 농업개혁은 CAP를 뒷받침해 온 시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자 제2단계의 도약을 모색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한다면, 우리 농업에 대한 개방압력은 취약한 기반으로 말미암아 농업 자체의 생존에 위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C농업에 대한 UR 협상으로부터의 압박은 CAP 개혁추진을 용이하게 만들어 EC 産業構造間 調整効果を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이번 CAP 개혁의 목표로 제시된 농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과 같은 선진농업 기틀 마련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점은 부럽기만 하다.

셋째, EC가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로써 그 기반을 다진 후, 농촌지역의 균형개발과 영세농에 대한 소득보조제도의 도입과 같은 사회정책적 측면의 보완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농업의 장래에 대해 모두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아마도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우리의 농업과 농촌문제를 포괄하는 효과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일일 것이다. **남원**

『나라경제』 9월호 주요목차

■ 권두칼럼

低管理國家와 誤管理國家 / 김동기 · 고려대 교수

■ 특별기고

‘우리도’가 아닌 ‘우리만’의 創造이어야 한다 / 김진현 · 과학기술처 장관

■ 만남 · 언론인 신광식이 만난 송언종 체신부장관 정보사회 건설의 기수

■ 특집 자본시장 개방,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식시장개방 추진방안 / 박진규 · 재무부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통화신용정책 / 김종창 · 재무부

주식시장 개방과 외환정책 / 연원영 · 재무부

주식시장 개방과 증권산업 경쟁력 강화 / 강성진 · 대한증권업협회
외국의 자본시장 개방사례와 시사점 / 안문택 · 증권감독원

한국주식시장 개방에 거는 기대 / 필립 스마일리 · 자르딘 플레밍
서울사무소

■ 경제정책해설

한 · 미통상마찰과 정책방향 / 권오규 · 경제기획원

농어촌구조개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김정호 · 농림수산부

국제석유시장의 전망과 석유비축정책 / 이승웅 · 동력자원부

토지거래 허가 · 신고제 / 김상윤 · 건설부

의약품산업의 특성과 발전방향 / 엄영진 · 보건사회부

장애인 고용, 어떻게 추진되나 / 옥치현 · 노동부

소화물 一貫輸送制度의 도입 / 윤연선 · 교통부

기술인력 양성과 社內技術大學의 육성 / 송봉현 · 과학기술처
海洋環境의 보전 / 유철상 · 환경처

■ 나라경제논단

일천수출의 길 - 自己商標輸出擴大 / 이석영 · 상공부

한국재정의 당면 정책과제 / 최 광 · 한국외국어대

農産物의 消費者性向 변화와 대응방안 / 이내수 · 농협중앙회

* 지난호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 · 문의처 / 국민경제제도연구원 편집발간실

전화 : 561-1400

영국은 자유경쟁질서에 의해 海運이 스스로 규율되도록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국제해운협력·안전문제 등에만 주력하고 있다. 선박도입 허가, 해운 및 관련 기업에 대한 면허·등록·신고 등 일체의 규제가 없으며 누구나 자유로이 해운 및 해운 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

단지 船舶을 영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가 정한 안전규정에 적합한 선박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규정 적합여부는 船齡 등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선박별로 영국정부의 檢査員이 개별적인 검사를 거쳐 결정한다.

造船所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 가격·건조 시기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조선소와 건조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국해운기업의 경우, 선박확보방법 및 시기 등에 있어 완전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선박을 확보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선박을 투입하거나 또는 철수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또한 정부의 해운사업 면허·운항구역 지정·항로에 따른 질서유지 차원에서의 영업적 간섭이 일절 없기 때문에 해운기업은 정부의 안전규정에 적합한 선박만 확보하는 경우 어느 구역, 항로에서나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국 해운기업의 경우, 市況 등 해운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영업활동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선박건조 또는 중고선 확보시 영국 해운기업은 전세계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자금을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간섭 없이 달러·파운드貨·독일 마르크貨·일본 엔貨 등 각종 통화로 조달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선박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시장 및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영국 해운기업은 조세·선원문제 기타 여러 가지 국제 해운환경을 고려, 선박의 등록지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영국본토·屬領·自治領 또는 便宜置籍國 등에 자유로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영국 본토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영국정부가 제정한 각종 안전규정에 적합한 선박이어야 한다. 또한 기존 영국 등록선박도 市況 또는 선원문제 등 각종 국제 해운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록지를 자유로이 편의치적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영국해운기업은 조세제도가 가장 유리한 곳에 자유로이 子會社를 설치하여, 편의치적국에 선박을 등록한 후 船員人件費가 가장 저렴한 국가의 선원을 고용, 運航費를 최대한 절감하여 이윤극대

英國의 海運政策

최낙정 해운항만청 서기관 / 주영국 한국대사관 해무관

또한 외국적 선박의 영국 입항시 港灣國統制(Port State Control)를 통하여 기준치 이하 선박(Sub-Standard Vessel)의 入港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EC 국가들과 파리협정을 통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운 및 관련 산업정책의 완전자율화 정책기조에 따라 영국 해운기업은 현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강점이 있다.

해운기업에 있어서는 선박 확보방법(新造船이나, 中古船이나)과 그 시기가 중요하다. 영국 해운기업의 경우 선박확보에 있어서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자유로이 선박을 투입하거나 철수할 수 있다. 또한 新造船建造시 해외발주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전세계

화를 기할 수 있다.

영국 특히 런던市는 명실공히 세계 해운의 전통적인 중심지로 해운에 대한 각종 정보가 집결되고 있으며, 영국 해운회사는 수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 고도의 경영기법을 갖추으로써 영업 노하우 축적 측면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해운 브로커·해상법률·해상보험·선박관리·선원관리·화물집화 등 각 분야별로 분업화·전문화되어 있어 활용이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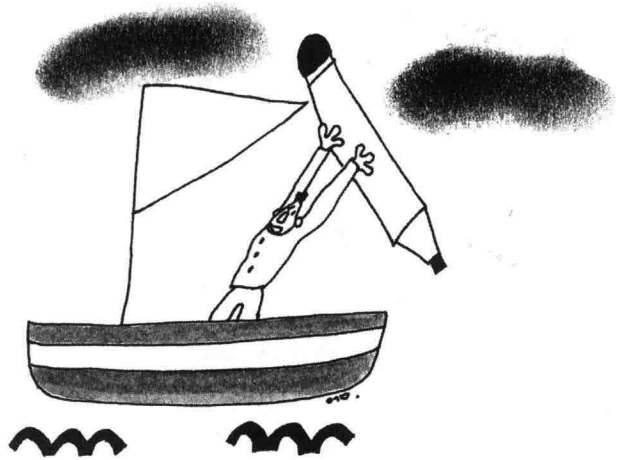
영국정부는 비록 영국 해운기업이 비교우위에 있는 점이 많으나 英國登錄商船隊가 감소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해운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은 외국회사의 해운영업 행위에 대해 일체의 제한이 없으나 안전규정에 미달되는 외국선박의 입항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해운기업의 시장 접근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국가에 대해 EC 차원에서 공동 대처하고 있다. EC 이외의 船社가 부당한 운임경쟁을 할 경우, EC에서 배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외국선주가 EC내 또는 EC를 寄終點으로 하는 航路上에서 보편적 운임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와 △외국선주가 정부로부터 비상업적 이익(non-commercial advantage)을 받아 낮은 운임을 적용(국가보조금·화물유보·ILO 및 IMO협약 기준미달 등)할 경우에 △EC 선주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입증(영업권 상실, 이윤감소 등)하면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영국의 연안수송은 EC 국가 또는 제3국에게 완전 개방되어 있다. EC내 연안수송 개방을 영국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93년부터 점차적으로 EC의 연안수송은 회원국간에 개방될 전망이다.

해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해운산업의 경우, 自由償却制度로 부활 추진되고 있으며, '84년 법인세의 인하(52%→35%)후 폐지하



였다.

그리고 영국 선박등록 조건을 완화하였는데 현재 영국인이 외국선박을 빌려서 영업했을 경우 영국적에 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등록법을 개정하여 영국인이 외국선박을 빌려서 영업할 경우 영국적에 등록하고 반대의 경우에도 전시 동원이 가능토록 안전장치를 두어 영국등록 변경을 허용토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국 선박등록 조건이 법률로 되어 있어 개정의 경직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선박등록조건 기준을 시행령으로 옮겨 국제해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국적 선박의 경우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는 영국 또는 英聯邦의 국적을 소유하여야 한다. 기타 海技士 및 보통선원의 국적기준은 없으나 해기사의 경우, 영국 또는 영연방 국가, 노르웨이 등 영국정부가 인정한 국가의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영국 국적 선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국적요건 완전폐지·船長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방안 등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중에 있다.

또한 면허제도도 STCW(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s: 선원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국제조약) 협약을 수용한 국가면허를 영국보다 현저히 낮은 기준이 아닐 경우, 적절한 행정 절차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남원

興宣大院君과 明治維新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하늘은 이름없는 宗親의 힘을 시험하심에, 문득 그의 아드님으로써 이 나라의 임금을 삼았다. 아직껏 市井 무뢰한들의 술친구이던 그는 일약 國太公이라 하는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다. 마침내 그의 힘을 시험할 때가 이르렀다. 조선의 王家法으로써 아직 금하여 오던 太公攝政이라는 것을 어느덧 그는 잡았다.’(김동인, 『젊은 그들』)

興宣大院君은 안동김씨의 세도정치 밑에서 보신하기 위해 응지를 숨기고 과락호로서 불우한 세월을 보내다 1863년 이렇게 이조말기의 실권자로 등장한다. 그는 외척 세력을 숙청하는 한편 당색을 초월하고 南·北人 각파와 신분·계급을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六典條例』·『大典會通』 등의 간행을 통해 법률제도를 확립하고 세계 개혁으로 양반·상인의 차별없이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부흥에 힘썼다. 외교적으로는 서양 오랑캐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라문을 걸어 잠겼다.

後世의 史家들은 內治面에서 대원군의 탁월한 업적을 인정하면서도(경복궁 중건은 논란의 대상이 되나) 대동강에서 제너럴셔먼號를 소각시키고, 프랑스·미국과의 마찰로 각각 丙寅洋擾·辛未洋擾를 일으킨 소위 쇄국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크게 비판하고 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대하여 후세의 역사가들은 대체로 대원군이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안목이 전연 없고 그 특유의 고집스러운 성격에서 이러한 정책을 택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소설가 김동인씨는 그의 대원군에 관한 소설 『젊은 그들』에서 보통 역사가들과는 달리 특이한 해석을 하고 있어 필자가 중학생 시절, 이 소설을 흥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다. 즉 대원군은 그 당시 국제정세에 결코 어두웠던 것이 아니고 이를 충분히 꿰뚫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

이 너무나 국력이 약하므로 일단 문을 걸어잠근 채 내적으로 힘을 충분히 길러서 시간을 갖고 외국에 개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김동인씨의 진정한 大院君觀인지 아니면 소설을 위한 허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대원군에 대한 특이한 해석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설사 김동인의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쇄국정책이 그 당시 백성들의 감정은 부합되는 바 있어 나라를 지키는 上策인 것같이 보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에 있다.

이로 인해 근대화의 기회를 놓쳐 나라발전을 더디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열강의 개방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궁극에는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 내주게 되는 운명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만약 대원군이 초기에 각국의 개방요구를 적절히 수용해 나가면서 이와 병행하여 우리의 내부제도를 정비하고 국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썼더라면 우리의 近代史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상상을 해본다.

반면 1854년 미국의 동인도 함대사령관 페리提督이 黑船을 이끌고 東京灣에 나타나 개국을 요구하고 영국·프랑스·네덜란드·미국 연합함대가 결성되었을 때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당시 강력한 지방세력이던 薩摩藩과 長州藩은 각기 서양국가와 一戰을 치렀으나 완패하고는 서양문명의 위력을 통감, 開國을 서둘렀다. 이들은 신식무기 등의 도입을 통해, 세력을 키우고 德川幕府를 눌러 明治政府를 탄생시켰다. 이들이 수립한 명치정부는 서구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일본의 근대화·부국강병을 이루었고 장주변의 伊藤博文은 선진 독일제도에 심취, 이를 일본에 도입하여 명치시대의 후반기를 이끄는 인물이

되었다.

이후에도 일본은 外部壓力이 밀려올 때마다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內的 動因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개혁을 성공시킴으로써 오늘의 일본, 일본경제를 이루어왔다. 2차세계대전 후 맥아더 占領政府下에서 재벌해체, 시장경제체제의 본격적 도입 등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졌고, 1·2차 석유파동을 거치는 동안 산업전반의 省에너지화를 이룩하였다. 플라자합의 이후 2년 동안 엔화는 거의 2배로 平價切上이 되어 일본의 수출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일본기업과 정부는 오히려 이를 일본상품의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았다.

최근 미국과 맺은 구조조정협약(SII)도 일견 일본경제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적 성격으로 보이나 이것이 나아가 일본경제 내부의 마지막 남은 제도적 문제점(유통·공정거래·토지관련제도 등)을 제거하여 일본경제를 보다 효율적인 구조로 전환시켜 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많은 일본의 경제학자들도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소련체제의 대변혁,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시장경제체제로의 編入 등 세계질서의 대변화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開放) 없이 페레스트로이카(改革)만을 달성하기를 원했는지 모르나 개방 없이 개혁이 불가능함을 파악하고 두가지를 병행 추진코자 하였던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같이 개혁과 개방은 그것이 並行推進될 때에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개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를 통해 경제구조조정·경쟁력 제고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개방은 초기에 단기적으로 국내산업의 위축, 輸入增加에 의한 국제수지의 악화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방에 따른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는 완만히 나타나는 반면 이에 따르

는 고통은 눈앞에 즉시 드러나 보이는 법이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부의 개혁·자율화를 충분히 이루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후 이 바탕 위에 대외개방을 확대해가는 방법인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대외개방을 통한 선진기술의 도입, 외국상품과의 끊임없는 경쟁없이 국내적 動因만에 의해서 경쟁력 제고 즉 구조조정 등 사실상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가능하냐는 데에 있다. 기존의 구조에 의해 이익을 보고 있는 이익집단의 심각한 저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내부개혁 노력이 좌절되고 마는 동서고금의 예를 볼 때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다.

우리나라는 對外指向의 경제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고 '86년 이후 4년간 국제수지 흑자를 시현해 국민들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에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또 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화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수지가 좋을 때나 市場開放이 가능하지 지금같은 상황에서 시장개방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외국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시장개방을 해야 한다면 제도적으로 개방을 해주되 실질적으로 외국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세계경제질서는 바야흐로 개방과 개혁의 시대에 있다. 社會主義 국가들이 체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되고 交通·通信의 발달로 기업의 범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자유무역의 대상범위 및 각국 시장의 개방정도를 확대함으로써 세계 교역을 증대시킬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의 경제규모·무역규모가 확대되어 세계 10위권 경제로 進入함에 따라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받고 있다. 무역대국인 우리의 輸入抑制政策으로의 후퇴는 즉각적인 통상마찰을 유발하고 우리의 수출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제수지

의 개선, 산업구조의 조정 등 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과제를 추구하는 방향과 역행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代案이 될 것이다.

'78~'86년중 수입자유화 效果分析 보고서(1988년 産業研究院)는 수입자유화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입자유화 추진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의 國內需要 중 輸入比重(市場浸透比率)은 일반적으로 하락하였고, 수입자유화에 따라 자본의 고용이 늘어나 資本集約度가 심화되며 노동생산성이 제고되었고, 수출산업은 수입자유화에 따라 수출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內需産業의 경우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특화도가 제고되거나 수입대체를 이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장개방으로 표현되는 국제화의 추진(국제화는 이보다 훨씬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은 사실 외국의 압력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경제규모의 확대와 최근의 고임금 추세는 勞動節約的·技術集約的 산업구조로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 내부의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필요한바, 이는 적절한 시장개방을 통한 외부경쟁의 유입과 연계될 때만이 달성 가능하리라고 본다. 오늘날 국제수지의 어려움이 우리 산업 내지 제품의 전반적 경쟁력 저하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대외경쟁의 도입만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향상시켜 준다고 필자는 믿는다. 물가안정·노사화합·통상마찰 완화 등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도 국제화 추진이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물가문제가 구조적으로 볼 때 경쟁력이 없거나 취약한 부문(농수산부문·서비스부문)이 선도하고 이를

흡수해 오던 공산품 부문의 가격 경쟁력이 한계에 달한 데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취약 부문도 적정한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물가안정의 근원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치열한 대내외경쟁을 통해서만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풍토 즉, 쉽게 돈을 벌 수 없는 경제사회구조가 정착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사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에 필자는 동의하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한다면 노사관계의 근원적 안정을 위해서도 적절한 국제화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은 우리 경제구조 전반의 자율화·국제화를 요구하는 양상으로 소위 구조조정 협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사황이 걸려 있는 우리의 해외시장의 적절한 관리, 이를 위한 통상마찰의 완화노력이 우리 경제의 전반적 국제화의 추진 없이 단순히 통상기술적 차원에서 해결되어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 결국 국제화의 원만한 달성만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병약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자 할 때, 완전히 건강해질 때까지는 계속 바깥바람을 쏘이지 않고 포대기로 싸서 집안에서만 키우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으나 진정 현명한 부모라면 감기가 걸리더라도 적절히 바깥바람을 쏘이며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면서 자라도록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이의 체질과 성향에 대해 부모의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적절한 외부 자극과 시련에 견디고 이를 극복하면서 발전해 왔고 앞으로의 시련에도 이길 수 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근래 30년의 우리 경제 발전사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김리

環境保全은 지속적인 國家發展의 요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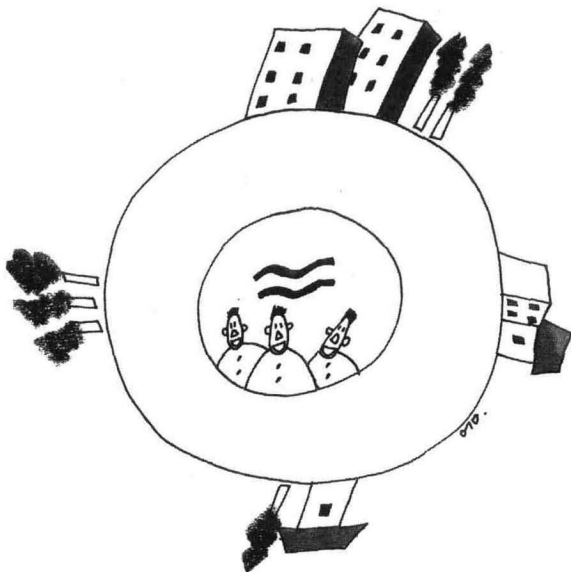


한상욱
환경처 조정평가실장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工業爲主의 成長과 수출드라이브 정책 등 강력한 經濟政策을 推進해 왔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초창기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대외 의존적 경제체제에서 資本輸出國으로 탈바꿈할 만큼 工業國으로서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국가발전의 기반은 어느 정도 構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目標만을 향해서 앞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온 결과, 物質的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 요건인 空氣와 물, 그리고 土壤이 오염되어 國民健康의 危害는 물론 생산의 要素인 自然資源의 毀損과 破壞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持續的인 成長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발전의 目標을 再定立할 단계에 와 있다.



'Sustainable Development' 또는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용어는 지속적인 개발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으로 或者들간에 표현되고 있으나 이 개념은 발전을 지속화하기 위한 方法(How)의 문제가 아니라 無分別한 개발로 인해 순환할 수 있는 資源을 消盡하지 않는 개발, 즉 生態學的으로 健全한 개발, 環境保全을 염두에 둔 開發이라는 目標지향적(goal-oriented) 개념이기 때문에 '생태학적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가 될 것이다.

지난해 3월 캐나다에서 개최되었던 '環境과 開發에 관한 世界委員會'의 報告書에서도 'Sustainable Development'란 '모든 사람의 기본적 欲求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삶에의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회와 확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개발행위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마클럽과 같은 극단론자들과는 달리 環境保全과 經濟開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理念的 배경을 깔고 있으며 保全과 開發은 동전의 兩面과 같아서 어느 한면에서 보면 서로 相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또한 保全의 開發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자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지금 세대는 차세대 後孫들에게 바로 그런 환경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을 暗示하고 있다.

우리의 環境을 잘 다스림으로써 온국민이 쾌적한 環境속에서 持續的인 國家發展을 이룩할 수 있다면, 내일 우리는 경제선진국뿐만 아니라 環境先進國으로 일층 도약하는 지혜로운 祖上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남원

레닌언덕에 서서



강만수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자 작나무숲이 우거진 레닌언덕(Leninskie Gory)에서 내려다 본 모스크바는 아름다웠다.

발 아래는 모스크바강이 유유히 굽이 흐르고 강 건너에는 제23회 올림픽이 열렸던 레닌경기장이 있었다. 오른쪽으로 멀리 크레믈린궁이 보이고 뒤로는 스탈린이 설계하였다는 고딕양식을 본딴 좌우대칭형의 웅장한 모스크바綜合大學 건물이 자리잡은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수도는 내가 본 어느 나라 수도보다 아름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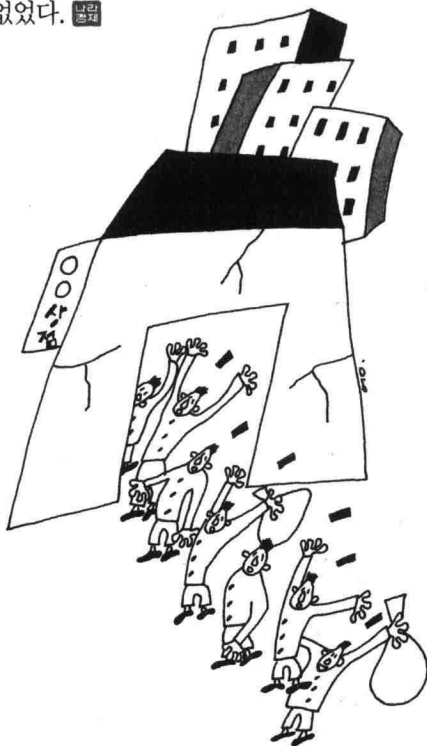
그러나 크레믈린궁 가까이 여기저기에 일그러진 채 퇴락한 건물들, 오랜동안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 우중충한 아파트들, 곳곳이 패여서 돌맹이가 나뒹구는 도로들, 흙먼지를 덮어 쓴 낡은 자동차들, 소련 최대 곱백화점의 행방그렁한 진열장들... 가까이서 본 모스크바의 어둡고 퇴락한 모습에 나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꼈다.

지금 소련의 빵값은 1943년에 결정된 그대로이고 밀의 가격은 그 때부터 6배나 올라 밀로써 빵을 만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소련경제의 고민을 어느 최고위급관리로부터 들었을 때, 나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에 빠지게 되었다. 보통 아파트의 월세가 미국돈으로 1달러 정도이지만 100달러를 주어도 집을 구할 수 없고 저금통장에 돈이 아무리 쌓여도 물건이 없어 칼라TV를 못 사는 나라. 미국담배 붉은 '말보로' 한갑이면 몇달 집세를 낼 수 있고 스카치위스키 '시바스리걸' 한병이면 몇달 월급이 되는 이상한經濟學의 나라. 그러면서 우주선을 쏘아올리고 超強大國노릇을 하는 社會主義宗主國.

이상한 걸음걸이를 하는 의장대를 따라가 만난 레닌墓와 그 앞의 수많은 참배객들을 보고 나는 다시 한번 레닌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의 조국 러시아를 가난과 고통에서 구하기 위하여 그는 10月革命을 일으켰다. 그래서 탄생한

맑스레닌주의라는 사상은 열병처럼 세계로 번져나가 '동무'의 이름으로 친구를 몰아내고, 형제의 이름으로 형제를 죽이고, 平等의 이름으로 새로운 不平等을 여러 곳에서 만들어 나갔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도 형제끼리 싸워 피흘렸고 강산은 폐허가 되었다.

오늘의 모스크바는 레닌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약속한 도시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의 사상 맑스레닌주의가 그의 뜻과는 반대로 소리없고 보이지 않는 폭탄이 되어 그의 조국을 황량하게 파괴하고, 형제들에게 더 크고 무거운 고통의 굴레를 씌워버린 결과에 대하여 레닌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남원



직업병 연구 유감



안영수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경 제 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수십만원이 드는 종합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신청한 지 수개월이 지나서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얼마전에는 해외 보신 관광과 살아있는 꿈의 쓸개즙 추출이 큰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6·29선언 이후 산업현장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작업장의 유해요인·작업환경 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사회전반에 걸쳐 건강에 대한 관심이 팽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산업조직의 구성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기를 원하며 그러한 환경의 창조 없이는 근로자에게 '일하는 보람'을 부여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근로생활의 質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들의 인식변화와 최근의 원진레이온 직업병사건을 계기로 노동부에서도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얼마전에는 職業病豫防綜合對策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부는 사업장 유해물질 관리·유해작업환경의 개선·기타 근로자건강관리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와 직업병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직업병 근절은 사업자와 근로자, 나아가 사회전체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다양화되어 각종 설비와 공사가 증가하였고

중화학공업의 발달로 중금속 및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하여 각종 직업병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勞·使의 인식 부족, 예방기술의 낙후로 노동력의 손실은 물론 귀중한 人的·物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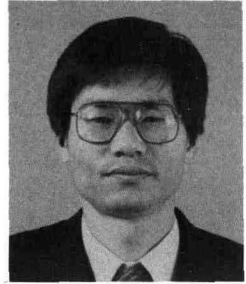
이러한 직업병예방이나 치료 및 관리는 고도의 의학적·기술적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産業醫學이나 産業衛生學 등 관련 학계의 연구와 뒷받침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職業病豫防專門研究機關과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정부연구기관이 2개소 있으나 인력·시설부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립대학 중심의 민간 직업병연구소가 4개가 있으나 그나마 예산계약으로 활동이 미미하다. 일본의 경우 산업의학종합연구소에서 만도 100명의 연구원을 두고 있고, 그 중 30명의 박사가 노동보건·직업병·산업보건·노동환경·인간환경공학연구 등을 하고 있다.

직업병예방 관련 연구인력은 어떠한가? 국내 30개 대학에 산업보건 유사학과 36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과과목의 相異(대기·수질 등 공해중심)와 본인의 취업기피 등으로 산업계 수요에는 못 미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예방의학을 전공한 378명 중에서 98명만이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전국의 국립의과대학 내에 산업의학전문의 양성과정이나 산업의학연구소가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 일본의 경우 산업의학대내의 4개과정에서 의사를 비롯 205명의 인력을 매년 배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의 최고급 두뇌가 집결되어 있는 집단인 대학이 직업병연구에 있어서만은 이렇게 철저히 외면하고 등한 시해도 되는 것일까.

이제는 각 대학도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병예방연구에 무언가 기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金利自由化 보완대책이 선행되어야



남주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압력과 국내경제의 물가불안,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악조건 속에서 최근에 발표한 정부의 '금리자유화' 조치는 금리의 상승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방안이어서 일단은 환영할 만하다.

향후 6년간, 4단계에 걸쳐 여신금리 자유화 이후 수신금리의 자유화 추진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없고 금리의 급등에 의한 기업의 금융비용 상승 등을 우려해 금리자유화의 경제적 효용성을 상당한 부분 포기한 대신 금리상승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는데 역점을 둔 것 같다.

이러한 정책적인 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의 과열로 인한 물가불안과 무역수지의 적자폭 확대, 그리고 통화목표치에 너무 얽매인 통화정책 등으로 인해 금리는 제1단계부터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여·수신 금융상품 내역에 따른 단계적인 나열에 그치고, 금리의 가격기능 회복을 위한 금리·통화정책의 제시가 없으며, 단계별 실시 전제조건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금리 자유화의 제1단계 추진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정책의公表에 따른 금리의 상승이 우려되고, 정부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금리자유화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어 금융비용상승에 의한 실물부문에 미치는 부작용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가격(금리)규제와 양적규제 동시에 철폐해야

현재 추진중인 금리자유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금리(가격)의 규제는 철폐하는 방향이나 量的 規制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금리자유화의 목적은 금리의 규제를 철폐하여 금리의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부의 금리자유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금리의 가격기능 회복에 의한 경제의 효율성제고는 고사하고 금리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금리자유화는 가격규제와 양적 규제가 동시에 철폐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금리자유화는 가격(금리)규제는 철폐하나 양적 규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곡선인 S_L 과 수요곡선인 D_L 이 만나는 점E에서 균형이 형성되어 규제된 금리 r 는 균형금리인 r^* 로 상승하고 자금의 양은 L 에서 L^* 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실경제를 살펴보면, 자금의 공급곡선이 S_L 처럼 右上向하는 것이 아니라 굴절된(Kinked) 곡선인 S_L' 이 된다. 이것은 저축이 금리에 대해 매우 비탄력적이고, 정부의 통화정책이 통화량의 공급수치에 너무 얽매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양적 규제가 있는 상황하에서는 금리자유화가 추진되어도 균형이 점E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점B에서 성립된다.

그러므로 금리자유화로 나타나는 결과는 금리가 균형수준인 r^*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r 로 상승하고 자금의 양은 여전히 자유화 이전 수준인 L 에 머무르게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리자유화의 기본목적인 경제의 효율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효율적인 금리자유화가 추진된다면 사회전체의 dead weight loss인 $\triangle ABE$ 가 없어지나, 양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금리만 균형수준보다 높게

상승한다.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정부의 금리자유화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금리자유화가 진행된다면 금리의 수준은 조금 올라가나 ($\bar{r} \rightarrow r^*$), 투자에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이 \bar{L} 에서 L^* 로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추진 방안은 금리는 급등할 소지가 있고 쓸 수 있는 可用資金은 자유화 이전과 같기 때문에 실물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대출 등이 해당되고, 그 기간은 '91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92년 상반기에 추진토록 되어 있다.

제1단계의 여신자유화가 진행되면 은행권에서 당좌대출을 포함한 약6조 원, 단자사 등 제2금융권에서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할인 약23조원 등 총30조에 가까운 대출잔액이 자유화될 전망이다. 대출을 위한 강제예금인 꺾기 또는 兩建預金에 드는 비용만큼만 금리가 인상되고, 대신에 꺾기가 없어진다면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금융부담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당좌대출금리의 상승이 다른 여신금리의 상승을 급속도로 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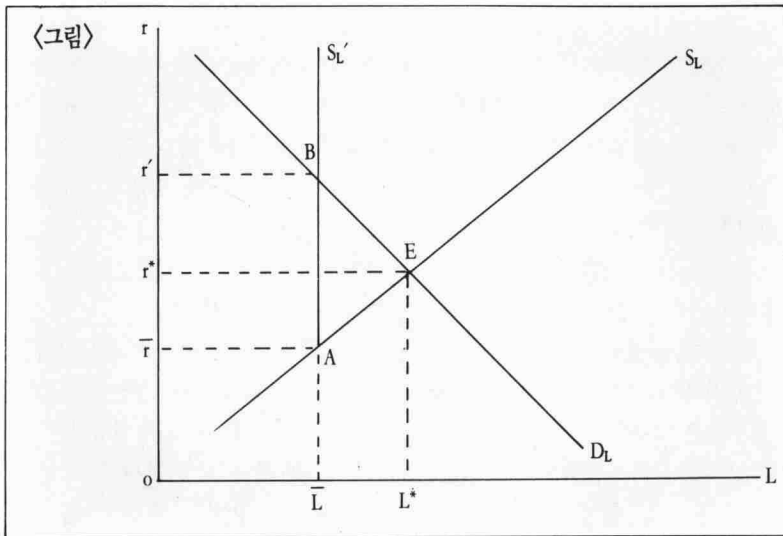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금리상승에 의한 금융비용의 추가부담·금리자유화의 가속화·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을 고려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금리위주의 통화정책지표로의 전환필요

금리자유화의 목적이 가격기능 회복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있다면, 금리의 적정수준을 목표로 하는 금리안정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금리의 심한 변동을 예방하고 경기조절기능의 회복을 위해 금리중심의 통화정책지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금리의 적정수준을 계산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자본의 限界效率과 제조업의 실질성장률에 근거하여 금리의 균형가격을 설정하고, 이러한 균형 내지는 적정수준을 목표로 하는 금리정책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제조업의 최근 2년간('89~'90)의 실질평균성장률은 6%이고 GNP 디플레이터는 약8%이므로 적정명목금리는 14% 정도이고, 자본의 한계효율을 근거로 한 실질이자율을 4~5%로 계산한다면 적정금리는 12~13%에 가깝다.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면서 금리의 변동이 예상되고, 금리의 현실화로 인해 시장실세금리가 20% 가까운 수준으로 급등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리자유화의 추진단계에 따라 시장금리도 제1단계에는 약15%정도로 안정시키고 제2단계와 제3단계 기간중에는 적정금리수준인 약13%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금리의 현실화에 의한 금융비용 상승 고려해야

금융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금리자유화의 추진과정에서 실효금리가 1% 오를 경우 제조업의 금융비용은 연간 4,400억원이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92년까지의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 인상은 1% 상승 정도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제1단계 여신금리 자유화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은행당좌대출(일시대 및 타입대 포함), 한은 새할적격어음 외의 은행 상업어음할인, 단자회사 등의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할인 그리고 연체

그러나 꺾기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거나, 꺾기가 없어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의 금리인상이 1~2% 상승했을 때,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금융비용은 3천억원에서 6천억원이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여신금리가 2~3% 인상될 것으로 전망할 때에, 이러한 인상의 일부분은 꺾기의 축소 혹은 철폐에 의해 추가금융비용이 상쇄되겠지만, 단기적으로('91년 하반기~'92년 상반기) 기업들은 상당부분 추가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금융비용부담은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고금리·자금난에 더욱 악영향을 주어 제품의

금리정책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금리의 안정 없이 시장실세금리수준으로 규제된 금리가 현실화되는 것은 무의미하며, 금리수준을 규제금리와 시장실세금리와의 중간정도로 접근시키는 금리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금리규제가 철폐되면 금리는 매우 심하게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금리의 변동은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巨變數들과의 관계가 매우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의 변동을 예방하고 거시경제의 경기조절을 위해서는 금리위주의 통화·금융정책이 절실하다.

장기 수신금리의 자유화는 최소한 3년 이후로

장기수신금리의 자유화가 제2단계에 속해 있는데, 장기에금금리의 자유화는 신중히 그리고 자유화의 맨 나중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년이상 장기수신금리의 조기('92년 하반기~'93년)자유화는 자금의 장기화 유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수신금리의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의 상승압력에 예견되므로 금리자유화의 최종단계에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웃 나라 일본은 '75년 일부 대출금리의 자유화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도 요구불예금의 자유화를 단행치 않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수신금리의 추진방안은 너무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특히, 수신금리의 성급한 자유화는 금융기관의 예금유치경쟁으로 인해 예금금리인상에 따른 경영수지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회사채의 금리 자유화는 장·단기 구분없이 조기(제1단계)에 단행되어도 실물경제에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 축소와 금융자유화가 전제되어야

금리자유화가 10월부터 추진될 예정인데, 과연 정책당국이 실시시기를 예상하고 나름대로 사전준비를 다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다. 물가불안과 무역수지의 문제를 떠나서 정책금융 축소문제와 금융자유화에 대해서 언급해 본다.

정책금융은 금리자유화의 목적과 근본적으로 相馳되며, 정책금융의 대폭적인 축소에 의해 금융기관의 상업금융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5월말 정책자금 공급은 작년동기 대비 약6%가 오히려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정책자금이 옹들어 지원된 은행대출금의 60%에 달해 작년동기의 약50%에서 오히려 증가되어 금융기관의 상업금융기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책자금의 內譯도 농사자금은 증가했으나 수출산업설비자금은 오히려 작년동기에 대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금리자유화·금융자유화를 위해 정책금융을 축소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일반대출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자금의 대폭적인 축소 없이는 금융기관의 상업금융기능은 제한되고 금융자유화도 확대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위해 각종 금융규제를 철폐 또는 축소하고, 인사권의 간섭배제 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금융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리자유화 보완책 마련해야

금리자유화의 시행은 불가피하며 다만 앞으로 금리자유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물가안정·국제수지흑자 정착 등 거시적인 전제조건 실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거시틀 밖에서의 금리자유화는 무의미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의식전환이 매우 시급하다.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금리자유화에 맞는 자율의식과 節度있고 합리적인 경제행위가 요구된다.

특히, 정부는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미리 예상을 하고 사전에 여건조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도 최근의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거시경제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도는 매우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고, 금리자유화의 제1단계 기간중에도 事前整地作業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금리상승으로 인한 실물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거시정책의 기초는 안정성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제조업 위주가 아닌 건설업 위주의 외형성장을 부추기는 정책의 이중성에서 탈피하여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만이 기업과 소비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것이다.

3~4년 후의 지킬 수 없는 정책까지 공표할 필요는 없으며, 자유화의 추진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될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

끝으로 금융정책에 있어서도 금리중심의 통화정책으로 전환하여 금리의 변동을 적절히 안정시키는 금리정책이 병행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축증대에 의한 금리의 하향유도가 바람직하다. 다만, 수신금리 인상에 의한 저축유도는 우리나라의 현실 경제에 타당성이 적으며,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늘리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빛]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



김종창

재무부 금융정책과장

金利는 돈을 쓰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에 의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금융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을수록 좋고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금리수준이나 결정방식에 대한 세간의 많은 관심과 함께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간 金利自由化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금리자유화의 폭이나 일정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에서는 금리자유화를 보다 빠르게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느리게 부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前者가 금리의 가격기능을 하루 빨리 제고하여 금융을 비롯한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後者는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 상승이나 금융기관의 경영악화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금리자유화를 보는 이와 같은 두가지 시각간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자유화에 따른 이점과 부작용 중 어느 한쪽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킨 데 지나지 않는다 하겠다. 그러나 경제문제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이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인만큼 어느 한쪽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금리자유화도 그 利點은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금리자유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巨視經濟의 안정과 함께 통화관리의 개선·정책금융축소·금융자율화의 진전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금리자유화와 더불어 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금리자유화의 필요성

그동안에는 한정된 자금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낮은 금리로 공급하기 위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규제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으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도 복잡해짐에 따라 점차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금리를 비롯한 금융의 市場機能을 제고함으로써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금융시장의 개방화·국제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金利自由化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리가 자유화되면 자금수급사정에 따른 금리의 탄력적인 변화로 투자나 소비 등이 자동적으로 조절되어 금리의 경기조절기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금리자유화·규제상의 차이에서 오는 제1·2金融圈間, 국내은행·外國銀行 지점간의 불균형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국내주식시장이 개방되는 등 자본자유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資本流出入이 자유로워지면 국내금리만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금리규제를 지속할 경우 자본이동에 따른 조정이 전적으로 換率變動으로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더욱이 금리의 자금조절기능은 간접 규제 通貨管理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금리자유화를 통해 이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금리자유화의 제약요인

이처럼 금리자유화의 필요성이 큰 반면 금리자유화를 제약하는 요인들도 많으므로 금리자유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하나씩 풀어내야 하겠다.

먼저 금리규제와 함께 企業財務構造의 취약, 부동산 등 代替資産의 높은 기대수익률 등으로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자유화하면 금리의 일시적인 상승으로 기업의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금리자유화후에도 公開市場操作, 재할인정책 등의 수단을 통하여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금리를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위한 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데다가 신속적인 통화관리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한편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나 과도한 금리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가 요구되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不實債權과 같은 구조적인 제약요인을 고려할 때 이를 단시일내에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實物經濟 여건도 물가상승압력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금리자유화로 금리의 景氣調節機能이 제고되면 소비·투자 등 국내수요와 수입수요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자유화시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반면 부작용은 단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하기 위한 기업·가계·금융기관 등 각 經濟主體들의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금리를 비롯한 금융의 시장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金利自由化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우리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이러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도 금리자유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금리자유화의 추진방향

그동안 금리자유화를 제약해온 우리 경제 및 금융의 構造的인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금리자유화를 급격히 추진할 경우 금리의 일시적인 상승이나 금융기관의 경영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金利自由化에 따른 이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물경제여건이나 금융시장상황 및 經濟主體의 대응능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금리자유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금리자유화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자유화 과정에서 금융기관 경영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與·受信間, 금융상품간, 금융권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자유화에 따라 예상되는 일시적인 금리상승 등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점진적·단계적으로 金利自由化 추진
여신금리는 자금의 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 등 總需要의 조절을 통한 경기조절 효과가 큰만큼 受信金利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화에 따라 與信金利가 상승할 경우,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자유화폭 및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신금리를 업종별·기업규모별·기간별 등의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경우 規制金利 유지의 필요성이 큰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위축시키거나 대출을 과도하게 단기화 또는 장기화하여 대출기간의 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신금리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이 적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가급적 한꺼번에 자유화를 추진하되 일시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신금리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신금리의 자유화는 금리경쟁을 본격화시킴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수신금리의 상승으로 여신금리의 추가상승압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의 예에서와 같이 보다 신중히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만 수신금리의 경우에도 금리규제가 지속될 경우 저축의욕을 저해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금리자유화 추진 속도 결정에 있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신금리의 단계적 자유화는 수신상품간 급격한 資金移動을 방지하는 한편 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수신상품 취급비용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장기·거액→ 단

기·소액' 順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한편, 유통시장의 존재로 규제 의 실익이 적은 회사채·CD·기업어음 등 市場性商品의 경우에는 금리수준보다는 자금조달의 원활화가 주목적인 상품들만큼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유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예상되는 부작용 및 보완대책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금리자유화는 금리의 시장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실물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금융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나 금리자유화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금리를 자유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금리의 價格機能의 활성화로 자금배분과 금융의 중개기능이 효율화되어 시장금리가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금리의 일시적 상승으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증가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금리자유화로 금리경쟁이 촉진되면 수신금리의 상승과 여신금리의 하락을 가져와 예금자나 대출자에게는 유리하게 되나 금융기관 경영은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며, 금융권간·상품간의 급격한 자금이동이나 금융시장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

자금흐름을 기업으로 유도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와 규제금리의 격차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시장금리수준은 단기적으로는 자금수급상

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나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성장·국제수지·기대수익률 등 경제의 보다 구조적인 변수들에 의해 그 基調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금리자유화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적정성장유지 등 경제의 安定基調를 견지하는 한편 부동산투기억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금흐름을 기업으로 유도하고 期待收益率을 낮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도 투자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시장금리 수준에 따라 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금리자유화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직접규제 통화관리방식 지양

금리자유화후에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뿐만 아니라 금리수준에 따라 통화를 신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통화목표 범위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대출창구를 직접 규제하는 식의 通貨管理方式을 지양하고 간접규제 통화관리방식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政府는 공개시장 조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작대상증권의 확대 및 實勢發行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정책금융에 대한 자동재할인제도를 개선하여 재할인정책의 탄력성을 높이는 한편 再割引金利의 기준금리로서의 기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금융자유화가 진전되고 자본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國內外 금융시장·자본시장·外換市場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움직일 것이므로 통화량·금리·환율의 관계를 감안하여 대내·외 균형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통화신용정

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 경영합리화 필요

금리자유화는 商業性에 입각한 금융기관 경영을 촉진하고 자금조달·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기관 경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과도한 금리경쟁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부실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과감한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日本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경영합리화로 경영악화요인을 흡수해 나갔으나 美國의 경우 그렇지 못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이 不實化됨으로써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리자유화에 따라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고 수익성만을 지나치게 고려한 금융기관의 불건전한 資金運用 등의 가능성이 있는만큼 금리자유화와 함께 금융의 안정성과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예금자보호를 위한 施策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금리자유화를 원활히 추진하고 금리자유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 각부문의 자율화 시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하겠다. 금리자유화와 함께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政策金融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해 나가는 한편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財政機能을 확충하거나 政策金融機關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자본 및 외환자유화의 추진속도도 금리자유화와 보조를 맞추어 나감으로써 제반 자유화시책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



기술선진국 진입의 견인차

글 · 류근일 / 조선일보 논설주간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

“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현실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날카로운 비판력으로 무장된
 김장관의 경륜이
 '10년후 기술선진 7개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



때 '91년 8월 28일
 곳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영빈관

아직 무더위가 가지지 않은 8월 28일, 홍릉에 있는 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영빈관에서 金鎭炫 장관을 만났다.

언론계에서 명경제칼럼으로 필명을 드높여온 김진현 장관이 과학기술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68년. 그는 당시 李漢彬 박사·崔禎鎬 연세대 교수·權泰竣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한국미래학회를 창립하고, 과학기술이 인간의 미래를 좌우하는 변수임을 알리는 글을 통해 꾸준히 과학의 중요성을 일깨워 왔다.

이러한 관심이 본격화된 것은 잠시 언론계를 떠났던 '84년,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영국에서 열린 '기술변화의 경제학'이란 국제워크숍에 참여하여 세계각국의 학자들과 진지한 토론을 벌이면서부터이다.

『한국경제정책 20년사』,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경제학의 모색』 등 주로 경제관련 저서들을 집필해온 김 장관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바로 경제적 접근에서 비롯된 것.

金鎭炫 장관은 지난해 11월 안면도 사태 이후 제13대 과학기술처장관으로 전직 임명되어 과학기술행정의 책임자로 일해온 지 이제 만 9개월을 넘기고 있다.

10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21세기가 본격적인 과학기술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장관에게 현재 우리의 位相부터 물었다.

• 지금 우리나라가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있다고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교육·과학기술·산업·무

역·보건·위생 등 전반적인 면에서 중진국에 이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內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중진국 성공 증후군(syndrome)으로, 중진국에 이르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방법을 연장하면 선진국으로 당연히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진국에 이르는 데는 더 큰 도전과 질적·양적으로 전혀 다른 도전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질서를 지배했던 냉전구조, 우리로 봐서는 미국 주도시대(Pax Americana)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새 질서가 형성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일본·중국·소련 등 세계 4대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으로서는 이들을 극복하고 살아남아야 하며, 특히 세계 초일류 民生技術國家로 변모된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고 수용해 나갈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냉엄한 국제정세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선진국으로 가야 될 당위성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金 장관은, 우리의 위상은 중진국에 이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중진국 진입 성공 신드롬 때문에 미래를 너무 낙관하고 심지어는 선진국에 이미 도달한 것처럼 가정하고 행동하는 측면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 또 이를 극복하면 대단히 희망적인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그동안 우리는 발전이라는 개념을

써왔고 또 현실에 투영하기 위해서 대체로 단순한 두 단계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이른바 개발독재라고 불립니다만, 백지상태에서 기초적인 공업화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비교적 단순한 논리에 의한 경제발전 정책을 추구해 왔고, '80년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그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치적 민주화라는 비교적 정치주의적인 단순논리를 역시 채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로 들어가면서 그러한 단순논리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이나 발전을 기하기는 어렵게 되고, 대단히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진국에 이르는 동안에는 소위 모방에 성공하면 됐습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돈을 주면 기술과 특허를 사는데 별로 제약이 없었습니다. 코콤(COCOM)이라든가 몇 개 국방상의 제약을 제외하고는 일반 민생용 기술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진국까지 이르는 길이었고 우리는 모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방에 성공한 것은 우리 민족사로 보면 대단한 하나의 성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방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은 중진국과 선진국에 이르는 단계의 차이거니와 또 하나는 선진국간,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기술질서·기술거래질서 자체가 변질된 것입니다. 즉 SDI와 핵병기 등과 같이 고도의 군사기술이 첨단산업화, 첨단무기화되어 가면서 나타난 현상은 결국 民生用에 있어서의 고도의 첨단기술이나 군사용 첨단무기기술 사이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소위 이중사용성(dual-usage)이라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냉장고·TV·이동통신에 쓰일 뿐아니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스마트 유도탄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반도체칩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군사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소련 같은 체제가 실패한 것은 고도의 기술을 군사용으로만 이용하고 민간용으로는 전혀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경제가 낭비됐고, 결국 그 군사기술 자체도 기반 없는 기술이 되고 낙후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민생기술과 군사기술이 공존해서 넓은 시장과 넓은 제품을 만드는, 말하자면 기초가 넓은 나라는 국민복지도 향상되고 국방기술도 더 첨단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민생기술이건 군사기술이건 간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술은 돈을 주어도 안 팔겠다는 소위 '기술 카르텔리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특히 앞으로 세계화와 기술의 첨단화라는 두 가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데, 이러한 세계화 전략과 기술의 첨단화 전략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국가적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진국에서
 기술을 나눠주지 않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만드는
 모방기술이 아니라
 '우리만' 만드는 창조적 기술,
 창조적 제품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

▲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진국에서 기술을 나눠주지 않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도' 만드는 모방기술이 아니라 '우리만' 만드는 창조적 기술, 창조적 제품으로 나가는 국가적인 전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첨단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규모에 맞으면서도 선진국도 지금 막 시작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기술, 또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범용기술 몇 가지만은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인식에서 科學技術處는 최근 선진 7개국진입을 위한 14개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제품기술에서 7개, 기반기술에서 7개를 선정, 정부·민간·대학·연구소 중심으로 이들 14개 제품기술과 기반기술을 2001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집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겉프전에서 드러난 첨단무기의 위력은 안보·국방도 과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

김장관은 과학기술은 이제 하나의 국지적 과제로부터 민족적 급선무(national priority)가 되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 그러면 우리 정부내에서 이러한 과학화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이랄까, 그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자원배분, 예산책정이나 행정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학기술처를 제외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은 아마 大統領이 아니신가 여겨집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2001년까지의 우리 과학기술 투자목표를 설정하고 2000년대 GNP 5%의 과학기술투자를 달성하여 적어도 2000년대까지는 7대 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거시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실현 가능한 획기적인 청사진을 만들도록 지시하셨고, 정부출연연구소 평가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신국제기술질서와 신국제무역질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 우리나라 행정 분야의 문제점 중 하나가 部署割據主義가 아닌가 합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법률로도 그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科學技術振興法에 의하면,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종합조정을 과학기술처가 하게 되어 있고, 모든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국가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종합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審議會가 오랫동안 유명무실한 채 기능을 못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열렸고, 제가 취임한 후 열심히 주장해서 두번째 회의를 가졌는데 곧 세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또한 이제는 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조정하는 한편 시험적으로 '92년 예산서부터 과학기술 예산도 사전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행정방식입니다.”

• 첨단과학제품은 분야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2001년까지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품으로서 일곱개, 기초기술로서 일곱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의 우선순위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제품으로서는 반도체를 금세기말까지는 1기가디램(G DRAM)까지,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전에 256메가디램(M DRAM)까지는 개발해야 되고, 현재 16메가디램개발에 성공하고 64메가디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반도체



조선일보 논설주간 류근일

1961년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월간부장·논설위원을 거쳐 현재 조선일보 논설위원장으로 재직중이다. 관훈연론상을 수상했고 주요저서로는 『지성이냐 우성이냐』, 『전환기의 모색』 등이 있다.

칩에 있어서만은 아직 선진국과 격차가 있습니다. 이 세기가 가기 전까지는 따라잡아야죠.

또 유전공학과 신물질 개발에 있어서도 몇개는 이미 선진국에 앞서가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렉기가 제4세대 항생제 개발에 성공한 것도 선진국에 앞서가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물질이 수백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개발했다고 해서 신물질 전부를 소유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아직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밖에 기반기술에서는 해양·우주기술·정보기술·센서·컴퓨터기술과 뉴로컴퓨터기술 중에서 몇가지를 정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또 한가지 관심사항이 바로 核廢棄物·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넘비

(NIMBY : Not In My Backyard) 현상이 만연돼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넘비현상은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쓰다가 생긴 우리의 문제이므로 결국은 우리 영토, 우리 주권하의 영토 어딘가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국내의 해안 중 지질적으로 안전한 곳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은 우리 국민들의 에너지원으로서뿐 아니라 암치료라든가 여러가지 실험·연구를 위해 병원이나 연구실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쓰고 나면 폐기물이 생깁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고 설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소위 밀실에서 결정하는 그런 과오는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해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동기를 유발시켜 가면서, 폐기물 부지를 현지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장관은 거듭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국민들을 이해시켜 자발적인 유치지역이 나오도록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도 그런 곳이 없으면 정부기관이 가장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先進科學技術立國의 요람인 과학기술연구원을 나서며, 오랜 언론인 생활을 통해 현실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날카로운 비판력으로 무장된 김장관의 경륜이 '10년후 기술선진 7개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해 본다.



개방·국제화에 따른 巨視經濟政策의 운용방향



이근경
경제기획원 종합기획과장

우리 경제는
특히 앞으로 경제안정기반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여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均衡基調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국제화 추세에 맞게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87~'88년간에 수출이 크게 늘어나 13%에 가까운 高度成長을 보였으며, '89년부터는 수출이 둔화되어 성장세가 다소 낮아졌으나 6차계획기간인 '87~'91년간 전체로 보면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용이 크게 확대되어 失業率은 사상 최저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성장의 내용면에서 볼 때 '87~'88년의 경제체질 개선노력을 통한 輸出主導型 성장에서 '89년 이후부터는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등 內需主導型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수지 균형기조와 內需安定基盤이 흔들리게 되었다.

6차계획기간('87~'91)중의 巨視經濟運用實績

국제수지는 6차계획기간 초반기에는 유리해진 世界經濟環境을 잘 활용함으로써 100억달러 이상의 黑字를 기록하였으나, 노사분규·기술개발 부진 등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걸프전의 발발과 내수증가에 따라 수입수요가 늘어나 경상수지가 '90년에는 적자로 反轉되었다.

물가는 그동안의 높은 성장에 따른 超過需要壓力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노사분규 등의 영향으로 6차계획기간 후반기부터 오름세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다만, 최근 물가오름세가 둔화되는 등 안정의 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아직 인플레이 기대심리가 잠재해 있고 노동시장·자금시장 등에서 人力 및 資金需給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巨視經濟運用의 기본목표는, 인플레이요인을 해소하여 경제안정기반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내실있는 성장을 이룩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7차계획기간('92~'96)중 巨視經濟運用의 기본방향

민간소비·건설투자 등 내수증가가 현재의 추세대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固定投資增加率 15% 내외, 소비지출증가율 8~9% 등 내수 부문이 10~12% 수준의 성장을 보이게 될 것이므로, 수출의 실질증가율을 8~10%로 전제하면 경제성장률은 9%를 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9%를 넘는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물가는 초과수요 압력으로 두자리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의 증가는 輸入需要를 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시킴으로써 國際收支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여 국제화·개방화 추진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금의 수급면에서 보면 總投

資率이 국내저축률을 상회함에 따라 자금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수요가 확대되어 자금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金利도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수급에 있어서도 과거 '베이비붐 세대' 이후 인구증가율이 낮아져 온 것을 반영하여 新規勞動力 공급은 점차 둔화되는 데 반하여 인력수요는 고도성장에 따라 계속 크게 증가하게 됨으로써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實質賃金の 상승을 통한 費用인플레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는 특히 앞으로 경제안정기반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여 국제수지가 지속적으로 均衡基調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국제화 추세에 맞게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물가는 5% 수준에서 안정시켜 나가고 국제수지는 GNP 대비 1~2% 범위의 흑자를 유지하도록 하며, 자금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金利·인력수급 및 임금·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고 산업구조를 高附加價値産業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자금시장 등의 需給與件을 감안하여 경제성장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內需部門을 안정시킴으로

써 7%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安定成長基調의 선택은 경제의 양적 확충보다 질적 내실화를 기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임금·통화량·金利·환율 등 제반 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의 善循環構造를 정착시키는 기초가 될 것이다. 동시에 物價를 5%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국제수지의 균형기조를 유지하며, 나아가 分配構造를 개선시킬 수 있는 根幹이 되는 것이다.

개방·국제화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변수의 변화

이상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특히 통화량·金利·환율 등 거시경제 政策變數의 안정적 운용에 의한 총수요의 관리가 긴요하다. 앞으로 자본시장의 개방, 금융 및 외환시장의 자유화 등 금융부문의 개방·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러한 거시경제 정책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거시경제 정책변수간의 상호연관 증대

金融部門의 국제화 및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국내외 금융·자본시장이 서로 단절되어

통화관리, 金利정책 및 환율정책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즉, 통화량·金利·환율이 政策當局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政策變數 상호간의 연관관계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자본시장의 개방 및 국제화와 자유화가 진전되면, 內外資本去來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거시경제 정책변수에 대한 정책당국의 직접규제의 실효성이 적어지게 되고 金利·통화량 및 환율간의 상호연관도가 크게 증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개방·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에 나타난 바와 같이 金利는 크게 오르는 데도 불구하고 圓화는 오히려 平價切下되는 등 金利와 환율간에 상호 독립적인 정책이 운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부문의 국제화·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 通貨緊縮에 따른 金利상승은 內外金利差에 따른 資本移動을 유발하여 圓화를 절상시키게 됨으로써 통화량·金利·환율 등 거시경제 정책변수는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변동하게 될 것이다.

거시경제정책의 파급경로 변화

국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통화정책이 은행대출에 대한 직접규제 방식에 주로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화정책은 기업의 운영자금의 증감을 통하여 實物部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금융의 국제화·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 통화정책은 우선 금리의 변동을 통하여 實物部門에 파급되며, 금리의 변동은 다시 換率의 변동을 가져오므로써 국제수지와 국내외 자본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등 복잡한 파급경로를 가지게 될 것이다.

통화관리의 어려움 증대

금리의 국제화 및 자유화가 진행되면 금융부문의 경쟁이 촉진되어 새로운 高收益金融商品이 대거 출현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고수익금융자산의 경우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화폐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대됨으로써 종래와 같은 보유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總通貨와 같은 현행 中心通貨指標과 성장·물가와의 상관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총통화 위주의 통화관리방식은 실효성면에서 한계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金利 및 株價의 변동이 빈번해지고 자본의 유·출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외부문의 통화량변동이 계속됨으로써 통화운영상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86~'89년의 경상수지 흑자기에 겪었던 바와 같은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에 따른 통화관리상의 어려움

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당시에는 자본의 해외유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부문에 의한 통화증발요인을 주로 通安證券을 발행하여 흡수함에 따라 오늘날 金利의 부담을 안게 되었고 자금배분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자유화가 진전되면 해외부문에 의한 통화증발문제는 자본의 유출에 의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방·국제화에 따른 거시경제정책의 운용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 국제화·자유화가 실현되면 거시경제정책변수들의 운영메카니즘이 달라지므로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巨視經濟政策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통화량·금리 및 환율간의 상호연관관계가 높아짐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總通貨增加率뿐만 아니라 금리와 환율의 적정수준을 감안하여야 하며, 특히 對內均衡과 對外均衡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운용해 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물가가 급등하고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여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동시에 이탈되어 있을 경우, 국제화·자유화가 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금융긴축과 平價切下를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지만, 개방·국제화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정책

운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대내균형과 대외균형간에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換率 및 通貨政策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정책목표와 대내정책목표가 상충되어 통화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가 어려워질 경우, 예컨대 金融緊縮과 평가절하가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에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대내균형 달성을 위해 긴축적으로 운용하되, 이에 따른 平價切下 압력은 외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완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내균형과 대외균형 중 어느 한쪽에 우선순위를 두어 정책을 수행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금융국제화와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 현행과 같이 은행의 여신규제 등을 통하여 中心通貨指標를 직접관리하는 통화관리방식은 그 유용성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므로, 이를 간접적인 관리방식으로 전환시켜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금융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거래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각종 新種金融商品이 개발되어 기존의 금융자산과 이들 신종 금융상품간의 대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通貨指標를 개선하여 이들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통화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나라경제

農地所有上限制度の改革



안종운
농림수산부 농지관리과장

무역자유화의 물결이 거센
오늘과 같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서는
우리 농업도 농지경영규모가 큰
美國 등 외국의 농업과
경쟁해야 하므로
능력은 專業農民의 경영규모확대를
제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농지소유상한 3ha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물결과 UR 農産物協商의 진전에 따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개선이 우리 農政의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업구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산물 수입개방의 진전이라는 시대의 변천에 부응하는 農地制度의 개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農地所有上限의 대폭 완화, 農業振興地域 제도의 도입, 농지이용규제 완화 및 농지의 종합정비 등을 포함한 농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일련의 농지제도 개선정책 중 農地所有上限 완화시책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 기본취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지소유상한 3ha는 分配衡平 차원에서 결정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은 憲法 제121조 제1항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耕者有田의 원칙'이다. 이러한 기본이념은 현행 헌법에 明記되기 훨씬 전인 1949년의 농지개혁법에 농지소유상한 3ha,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농지소유자격제한 등이 법제화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농지소유상한 3ha는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되던 '49년 농지개혁 당시, 종래의 地主·小作制를 청산하기 위하여 地主의 농지를 정부에서 매수하여 自耕農민에게 고르게 분배하는 기준으로 5인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를 감안하여 정한 기준이다.

농지소유상한을 3ha로 규제한 이유는 농업을 산업으로서의 측면보다는 다른 산업이 발달하기 이전에 과다한 인구의 안정된 고용효과와, 그들의 生計手段으로서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分配의 형평 차원에서 한정된 농지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고르게 분배하는 것이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日本이나 臺灣도 일찍이 農地改革을 하면서 3ha 상한을 채택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보여진다.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농지소유상한제 인식 필요

그러나 현재와 같이 UR 농산물협상 등 농산물수입 개방추세에 직면, 농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농업을 형평의 이념에만 치중하여 생계수단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국가의 중요한 基幹産業으로서 인식하여 自生力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농지소유상한제를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농지개혁사업이 종료되던 1958년부터 인식된 이후 여섯차례에 걸쳐 농지법 제정이 시도되었고, 특히 제3차 農地法 제정 시도 연도인 '67년부터는 企業農에 대한 농지소유상한의 완화문제가 논쟁의 초점이 되었으나, 농지개혁 이전의 寄生地主制의 부활, 비농민의 농지투기 우려 등의 반대주장 때문에 소유상한 완화 정책이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무역자유화의 물결이 거센 오늘과 같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서는 우리 농업도 농지경영규모가 큰 美國 등 외국의 농업과 경쟁해야 하므로, 능력있는 專業農民의 경영규모확대를 제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농지소유상한 3ha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농지에 대한 관념도 생계수단으로서의 농지의 균등분배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발상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가의 중요기간산업으로서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소유상한제를 운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농지소유상한에 대한 폐지론과 완화론

이를 위해 그동안 농지소유상한 완화여부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바('90년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

면 소유상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72%였으며, 금년 7월에 실시한 公聽會에서도 의견발표자의 90%가 농지소유상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였다.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주된 論據는 소유상한을 폐지해도 현재 농가호당 경영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소유지 증가보다는 賃借農地의 증가에 의한 규모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大農에 의한 농지소유가 집중화될 우려가 없다는 점, 現實地價가 收益地價보다 높기 때문에 농업을 목적으로 소유에 의한 농지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농지개혁 당시에는 自家勞動(5인가족 기준)으로 가족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를 3ha로 설정하였으나 機械化營農이 가능한 오늘날에는 기계화 영농에 따른 적정규모가 농기계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농가당 적정규모를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점 등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所有上限을 폐지 하되, 1차적으로 소유상한을 20ha로 완화하자는 주장의 論據는 다음과 같다.

즉, 농촌내부의 경제적인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태에서 소유상한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특히 비농민 또는 기업의 위장매입에 의한 농지소유의 집중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농지

소유의 급격한 집중현상이 올 경우 零細農의 탈농현상을 유도, 농촌사회의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는 현실지가가 수익지가보다 높다고는 하나 아직도 전반적인 地價上昇要因이 있는 한 농지소유 욕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지소유상한 20ha가 보다 현실적

政府에서는 이상과 같은 논거와 자생력 있는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발전가능성, 農業營爲者와 타산업 종사자와의 소득균형, 대형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할 때 논리적으로는 소유상한 폐지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급격한 소유상한의 폐지보다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대폭 완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하였다.

2001년에 專業農家の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는 규모가 7~12ha 수준이고, 트랙터 등 대형기계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20~25ha가 적정규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상한을 1차적으로 20ha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20ha를 초과하여 소유·경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농가의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農地管理委員會의 승인을 받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美國·유럽의 경우는 소유상한이 없으며,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日本의 경우에는 農地改革 당시의 기준이던 소유상한 3ha를 1962년 제1차 농지법 개정때 완화하였고, '70년 제2차 농지법 개정에서는 완전히 폐지하였다. 臺灣의 경우에도 上限制約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농민 투기·영세농문제에 대한 보완대책

한편, 농지소유상한의 완화 또는

폐지주장이 지배적이기는 하나, 현행 소유상한 3ha를 유지해야 한다는 아주 소수에 해당하는 일부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의 주된 論據는 소유상한 완화로 인한 비농민의 농지투기확산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농지의 집중으로 인한 小作制 확대, 영세농문제 등의 피해가 더 크다는 데 있다. 다만, 이런 주장 중에는 농민만의 농지소유가 철저하게 지켜진다면 농지소유상한 3ha의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소유상한완화 반대론자가 주장하는 비농민의 농지투기, 농지집중으로 인한

영세농 문제는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각종 言論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89년 農漁村發展 綜合對策을 수립하면서부터 영세농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즉, 영세농들이 協業에 의하여 營農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營農組合法人 설립 지원·農工團地 등 농외소득원의 확대 조성·정부부담으로 농외 취업훈련 실시·취업 알선·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日本의 경우에서와 같이 영세농들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여 자기소유 농지를 지키면서 소득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非農民의 농지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90년부터 시행한 종합토지세·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제 등土地公概念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부동산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투기목적의 미등기전매를 규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농지매매증명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가격상승의 기대심리가 존재하는 振興地域 밖의 농지소유상한을 현대대로 3ha로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기를 강력히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과 같은 농지소유상한 완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병행, 착실히 추진한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부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참고로 日本에서도 농지소유상한 폐지에 따른 영세농문제와 僞裝買入에 의한 농지집중화를 우려하였으나, 엄격한 소유자격의 제한, 賃借料 규제 등으로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농지소유상한 완화 대상지역도 향후 우리 농업의 生産基地化될 농업진흥지

역에 한하고 대상자도 自耕 및 자영농가와 自耕하고자 하는 者에 한정하면서, 아울러 農業構造改善對策을 착실히 추진하면, 별 부작용 없이 우리 농업이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갖춘 능률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전업농민도 높은 소득을 올리고 궁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농업도 후손에게 家業으로 당당히 계승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言論에서도 농지소유상한 완화정책이 '제2의 농지개혁으로 1949년 이후 우리 농업의 가장 광범위한 구조전환을 촉진할 것'이며, '국내외의 거센 逆風으로 위기에 빠진 농업문제에 대처하려는 농정의 일대전환'이라는 등의 論調로 평가하면서 농지소유상한 완화정책이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해 필요하고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이상에서 언급한 농지소유상한 완화조치만으로 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의 경쟁력은 농업경영규모·농업인력·농업생산기반·농업기술 등 종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농업경영규모 확대는 농지소유상한 완화 등 소유에 의한 규모확대 방안 이외에 賃借借에 의한 방법, 委託經營 및 영농조합법인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농지소유상한 완화조치가 바로 우리 농업의 전반적

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같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農地所有上限 완화정책은 '49년 이래 40여년간 유지되어 오면서 농지 구입능력과 경영능력이 있고 규모확대에 의욕이 있는 발전지향적인 專業農이 토지이용형 농업을 영위하는데 제도적 제약이 되고 있는 소유상한 3ha를 풀어주는 데 주목적 있다. 소유규모를 확대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자 하는 선도적인 전업농가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농업도 발전 가능성 있는 능률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들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정부에서 매입자금을 長期低利로 지원하여 규모확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앞으로 농지소유상한 완화조치를 포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農業構造改善對策이 실효성있게 추진된다면 우리 농촌에서도 도시의 중소기업인 못지않은 소득과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농가가 탄생될 것이다. 그래야 후계자도 나타나고 도시에 실증난 사람들의 農村復歸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40여년 만의 농지소유상한 완화정책은 우리 農政史에서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농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국산화시책



장기중
상공부 산업기획과장

최근 貿易收支赤字가 100억달러에 근접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장·단기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기 시작한 무역수지 적자폭은 날을 거듭할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나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 '86년 건국 이래 최초로 달성했던 무역수지흑자시대는 4년 만인 '89년에 막을 내리고 금년에는 적자폭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무역적자의 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輸入開放化에 따른 소비재의 수입증가, 건설경기 과열로 인한 건설기자재 수입증가,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設備投資, 換率의 切上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무역적자의 내용을 품목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응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기계류수입, 貿易收支赤字의 主因

금년 7월까지의 수입실적 누계를 살펴보면 총수입액 중 原資材가 253

억3,200만달러를 수입하여 전체의 53.2%를 점유하고 있고, 資本財가 177억900만달러를 수입하여 37.2%를 차지하며 그 나머지는 消費財가 차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원유 등 원자재는 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불가피한 수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재 수입 중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기계류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수입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이다.

기계류의 수입은 금년 7월말 현재 115억달러로서 총수입의 2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총무역수지적자 75억달러 중 기계류 무역수지적자는 60억달러로서 우리나라 무역수지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日本이 전체의 38.6% 차지

지역별로 기계류 수입을 살펴보면 日本이 전체의 38.6%, 美國이 28.7%, EC 24.1%로 규모면에서는 일본이 가장 크며, 이는 첨단전자기술을 응용한 기계·공장자동화 설비 등과 기술 도입에 따른 부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기계류의

기계류의 수입은
금년 7월말 현재
115억달러로서 총수입의 2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총무역수지적자 75억달러 중
기계류 무역수지적자는
60억달러로서
우리나라 무역수지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 무역수지추이

(단위 : 억달러)

	'87	'88	'89	'90	'91.1~7
수 출	473	597	624	650	396
수 입	410	518	615	698	471
무역수지	63	89	9	-48	-75

對日逆調 규모의 폭은 '90년 한해만도 56억5,400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7월 현재 수출증가율이 29.6%인데 비하여 수입증가율은 39.4%로서 對日貿易 적자폭이 41억2,9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처 국내개발생산이 뒤따르지 못한 NC공작기계·로봇·유공압기기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개발 및 제품수명의 단축 등으로 半導體裝備 등 새로운 설비소요가 늘어나고 있고 제품생산용 부품의

현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섬유기계 산업보다 섬유제품산업을 택한 전략에서 적어도 섬유기계산업과 섬유제품산업의 병존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 하겠다.

기계류 수입대체와 수출확대 施策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기계류의 수입증가를 줄여가기 위해서 政府에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자체개발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기계류의 輸入代替와 수출확대를 위한 여러가지 施策을 펴나가고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류부품국산화 5개년계획의 추진이다. 지난 '86년부터 기계류의 對日 의존도를 낮추고 對日貿易逆調를 개선하기 위하여 對日 수입비중이 크고 연간수입규모가 50만달러 이상인 품목과 개발시 관련산업에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 등을 대상으로 매년 800개씩 5년간 4천개 품목의 발굴을 목표로 하여 국산화 대상품목으로 고시하고, 국산화를 추진하여 왔다. 동 계획은, 시제품 개발을 위한 長期低利의 자금지원과 개발된 품목의 양산을 위한 설비금융의 지원 등으로 그동안 일본으로부터의 輸入依存度を '86년의 56.1%에서 '90년 38.2%로 낮추고, 65억3천만달러의 국제수지

〈표 2〉 기계류 수입추이

(단위 : 억달러, %)

	'87	'88	'89	'90	'91.1~7
총수입	410	518	615	698	471
(증가율)	(29.7)	(26.3)	(18.7)	(13.5)	(25.5)
기계류 수입	87	111	137	161	115
(증가율)	(31.8)	(27.6)	(23.4)	(17.1)	(29.6)
(기계류수입 비중)	(21.2)	(21.4)	(22.3)	(23.1)	(24.4)
총무역수지	63	89	9	-48	-75
기계류 무역수지	-25	-22	-64	-75	-60

註 : 1) 기계류=일반기계+수송기계+항공기+조선
2) 수출입실적은 통관기준임.

기계류는 일반기계·수송기계·선박 및 항공기로 크게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일반 기계류의 수입규모가 제일 크고 수입증가율도 높아서 무역적자의 규모도 크다. 이는 製造業競爭力 강화대책의 추진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16.3%)로 施設財 수입이 증가되고, 건설경기의 호황에 따른 건설장비의 수입, 석유화학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設備投資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사분규와 인력난,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성향상 방안의 하나인 공장자동화, 省力化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계류 수입의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자본재로서 국가 산업의 기반이 되고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기계류의 對外依存도가 커지게 되면 국가의 基幹産業 전체가 대외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발전 전략을 加工·組立産業 위주로 선택해 온 우리로서는 기계류 수입이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선진국 문턱에 있는 지금은 이러한

시제품 개발을 위한 長期低利의 자금지원과
개발된 품목의 양산을 위한 설비금융의 지원 등으로
그동안 일본으로부터의 輸入依存度를
'86년의 56.1%에서 '90년 38.2%로 낮추고,
65억3천만달러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가져왔다.

개선효과를 가져왔다.

기술개발은 투자위험도가 크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여 利潤追求가 최우선
목표인 기업에만 맡길 수가 없으므로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욕을
높이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長期低利의 試作品

개발자금이 많이 지원되어 왔다. 앞으
로도 이러한 국산화 정책의 성공여부
는 장기저리의 기술개발자금의 지원에
달려 있다는 전제하에 자금확보에 총
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계류부품 국산화 5개년계획'의
추진

한편 1차 국산화 5개년계획이 성공
적으로 추진되어 '91년 말에 종료되지
만,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계류
의 수입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시설장비의 개발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국산화 개발정책을 추진하여
對日依存型的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
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
이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92년도부터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5개년계
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계획
을 마련중이다.

이 계획은 그동안 국산화 추진과정
에서 야기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면
서 추진할 예정인데, 국산화가 시급한
주요핵심부품 및 기술을 중점발굴하여
개발하고 발굴된 품목에 대하여는
공업발전기금 및 중소기업 構造調整基
金,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의
장기저리의 기술개발자금을 집중지원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금융지원 외에 기술지원
을 확대하기 위하여 生産技術研究院내
에 기계·전자 및 소재 실용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국산개발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구축하고, 국산개발과 관련
된 설계·제조·품질관리 및 측정기술
에 대한 현장지도사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표 3〉 국산화 품목

(단위 : 건)

	'86	'87	'88	'89	'90	'91.7	계
고시품목	704	851	808	694	757	728	4,542
개발완료 품목	314	337	363	365	358	150	1,887

〈표 4〉 개발업체 자금지원 실적

(단위 : 억원)

	'86	'87	'88	'89	'90	계
산업기술향상자금	314	543	459	181	-	1,497
공업발전기금	195	269	514	645	400	2,023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	-	121	840	961
소 계	509	812	973	947	1,240	4,481

〈표 5〉 국산기계 구입자금 지원 금융

(단위 : 억원)

	'90	'91	1~6	
국민투자기금	1,676	1,050	600	
산업은행	4,192	7,000	1,400	
중소기업은행	2,060	4,500	950	
국민은행	-	1,500	585	
장기신용은행	-	1,000	350	
리스자금	18,398	23,300	14,350	
계	26,326	38,350	18,235	

국산개발된 제품에 대한 수요창출을 위하여 국산기계의 신규개발품목에 대한 종합캐털로그를 제작배포하고, 국산기계와 수입기계에 대한 성능비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國產需給協議會를 통하여 개발완료품의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계공제조합의 기계류 하자보증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품질보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기계납품시 하자보증예치금을 면제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동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에 기계류 자금도는 '89년 67%에서 '96년 80%로 향상되고 기계류의 對日 수입의존도는 '90년 38.2%에서 '96년 25%로 낮아져 貿易收支改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지원

둘째, 기계류의 국산화에 절대적 關鍵이 되는 것은 국산화된 기계류의 국내시장확보이다. 즉, 기술이 고도화되고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는 국내시장에서 販路가 확보되어 기업의 투자의욕과 생산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러나 기계류는 제조용 설비로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일시에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外部金融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매년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증액시켜 국산화된 기계의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內資에 의한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경우에는 通貨管理·財源造成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무한정한 증가는 어려워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수요('91년의 경우 9조8천억원)에 비해 공급규모('91년의 경우 3조 8,350억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의 경제여건하에서는 해외로부터의 投資財源의 借入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해외설비의 도입시 외화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외화대출자금은 金利面에서 리보(Libor) 금리를 기준으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실수요자 부담금리는 8~9%로 국내 일반금융자금보다 훨씬 유리하고, 대출기간면에서도 최장 10년으로 국내은행의 일반대출자금의 융자기간인 3년보다 훨씬 유리하다. 또한 자금지원 규모면에서도 실제적으로 한도 없이 운용되고 있으므로 緊縮金融基調下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업체에서는 동 자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게다가 韓·美通商摩擦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동 자금의 사용추천시 작년 부터 실시하여 오던 國產代替 가능여부제도를 '91년 7월 5일을 기하여 폐지

하였다. 이럴 경우 外產 못지않은 기술수준과 저렴한 가격의 국산기계가 있는 경우에도 금융조건의 유리함과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외산기계의 수입을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정책의 선택은 자본재인 기계류 수요구조를 왜곡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政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와 형평성을 잃은 금융정책의 시정을 위하여 국산기계 구입에도 外貨貸出資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關係部處와 협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바, 향후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輸入先 다변화제도의 효율적 운영

셋째는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대일무역역조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輸入先多邊化制度의 효율적인 운영이다. 제조업 경쟁력 제고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입이 급증되는 품목이나 국내에서 신기술이 개발된 품목으로 일정기간 보호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 한하여 수입선 다변화 대상품목의 재검토 등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남양재

國內 가스産業 現況과 政策方向



권태운
동력자원부 가스관리과장

정부에서는 淸淨便宜燃料인 LNG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LNG 전국공급배관망 건설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는바, 제1단계로 '96년까지 직할시 및 도청소재지급 도시를 주배관망으로 동시 연결하고, 제2단계로 '99년까지 주배관이 통과하는 인접주변도시에 供給支管을 건설하여 2000년에는 전국에 LNG에 의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역사는 꽤 오래되어 이미 1909년도에 경성전기에서 석탄가스를 제조, 취사용연료로 공급·사용하였다는 事實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6·25동란을 거치면서 당시 경제·사회적인 혼란기를 맞아 가스사용이 중단되었다가 '6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함께 정유공장의 준공으로 LPG가 생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스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60년대초에는 LPG가 충전된 容器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여 극히 제한된 일부 소비자만 취사용연료로서 사용하였으나, '64년도에 유공 울산정유공장의 가동과 함께 原油精製産物로서 LPG가 대량 생산되면서 汎用燃料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70년대초까지는 주로 산업용 및 취사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사용량이 적어 국내소비 후 남은 물량은 해외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容器 LPG를 중심으로 이어져 오던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72년에 서울시가 나프타分解 가스 및 LPG를 配管을 통하여 가정에 공급하면서 도시가스 산업이 출범하였으며, '74년에는 택시에 LPG사용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가스수요의 기반이 대폭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70년대 후반부터는 가스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생산분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어 '80년대에 들어서는 가스 수입을 전담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한편, 가스수요 증가와 함께 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환경보전대책의 필요에 따라 必須民生燃料로서 가스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LNG공급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 장기 LNG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평택에 LNG 인수기지를 건설함에 따라 '87년부터는 국내에도 天然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가스의 보급이 단기간에 급격히 확대되어 왔으며, 그 수요가 '70년도에 겨우 3만7천t 에 불과하던 것이 '80년도 39만2천t, '90년도에는 LPG 303만4천t, LNG 229만4천t 합계 532만8천t 으로 '70~'80년대에 걸쳐 연평균 약 28%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국내 가스 수급현황 및 전망

가스 수급현황

'70~'8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수준 향상과 환경오염 개선대책의 추진으로 가스수요는

급증하였으며, 총에너지 소비 중 가스의 비중도 '80년대에 겨우 1%이던 것이 '90년에는 7%로 증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總家口數 對比 가스보급률도 '80년에 8.6%에 불과하던 것이 '90년에는 87.0%로서 급격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 LPG수요 연평균 20% 이상 증가

LPG수요는 '80년대에는 '70년대에 비하여 그 증가추세가 다소 둔화하였으나, 이는 '87년부터 국내에 LNG도시가스가 보급됨에 따른 것이며,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LPG 수요증가의 주요내용을 보면, '70년대초 정유공장의 증설로 LPG 생산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74년 택시의 LPG(부탄)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82년에는 이를 전면 허용하였으며, '80년대에 들어서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활발한 연탄대체로, 특히 취사용과 난방용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요증가에 따라 공급면에서는 국내 原油精製 LPG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여 '82년 LPG수입 전문회사 설립과 함께 부족량을 본격 수입하게 되었으며, 매년 수입비율이 증가하여 '90년에는 68%에 달하고 있다.

■ LNG, 도시가스용으로 보급확대

LNG는 지난 '83년에 인도네시아와 20년간(1987~2006)의 장기도입계약을 체결, '87년부터 연간 2백만t 규모를

도입하기로 하고 '86년말에 평택인수기지 완공과 함께 도입을 개시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發電用으로 사용하다가 점차 수도권 지역의 도시가스용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보급확대시책과 연료로서의 편의성 때문에 도시가스용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시가스, 전국 주요도시에 공급

우리나라의 도시가스산업은 '72년에 서울시영도시가스가 공급을 개시한 이래 '82년부터는 부산도시가스를 시발로 지방도시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82년에는 서울 및 부산지역의 3개 도시가스회사가 2,600만 m³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불과하였으나 '90년에는 수도권지역 7개사, 기타지역 17개사 등 모두 24개 도시가스회사가 전국 대부분의 주요도시에 9억6,400만 m³의 도시가스를 공급하였다.

가스수요 전망

우리나라의 가스수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90년대에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스소비형태는

〈표 1〉 가스수요 추이

(단위 : 천t, %)

	'70	'80	'89	'90	연평균 증가율	
					'71~'80	'81~'90
수요	37	392	4,589	5,328	26.6	29.8
보급률	2.4	8.6	77.6	87.0	0.62P	7.84P

〈표 2〉 총에너지소비 중 가스의 비중

(단위 : 천TOE, %)

	'80	'89	'90
총에너지소비	43,911	81,659	93,191
가스 수요	458	5,704	6,601
가스의 구성비	1.0	7.0	7.1

〈표 3〉 LPG 수요 추이

(단위 : 천t, %)

	'70	'80	'89	'90	연평균 증가율		
					'71~'80	'81~'90	'71~'90
수요	37	392	2,571	3,034	26.6	22.7	24.6

〈표 4〉 LPG 공급 추이

(단위 : 천t, %)

	'70	'78	'80	'82	'89	'90
공급	43	291	396	658	2,648	3,069
생산	43	288	337	438	976	983
수입	-	3	59	220	1,672	2,086
수입비율	-	1.0	14.9	33.4	63.1	68.0

日本·유럽 등과는 달리 주로 취사용에 국한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전력수급 안정 및 환경보전을 위한 LNG발전 수요와 석유화학원료 多元化 측면에서 공업용 LPG사용의 급속한 증가로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가스의 역할도 한층 증대될 전망이다.

국내 가스산업정책의 추진현황 및 방향

가스수급의 안전성 제고

국내 LNG 도시가스 보급은 '86년 12월 평택LNG인수기지 건설로 '87년 2월부터 수도권지역에 공급한 이

래, '90년에는 57만5천t이 되어 4년 동안에 무려 7.7배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 가스공급 기반시설 확충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淸淨便宜燃料인 LNG를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LNG 전국공급배관망 건설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는바, 제1단계로 '96년까지 직할시 및 도청소재지급 도시를 주배관망으로 동시 연결하고, 제2단계로 '99년까지 주배관이 통과하는 인접주변도시에 供給支管을 건설하여 2000년에는 전국에 LNG에 의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NG인수기지 처리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현 평택인수기지를 2차에 걸쳐 확장하고, 제2인수기지를 인천지역에 건설함으로써 처리능력을 현재의 연간 200만t에서 900만t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지난 '90년에는 기존의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總延長 955km의 배관망을 확충하고, 신규지역에 공급하기 위하여 183km의 공급배관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91년에도 도시가스의 수요신장 및 보급필요성을 감안하여 총연장 1,086km의 供給配管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오염방지 시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있는 가스 사용 의무화지역의 점진적 확대와 아울러 배관망확충 원활화를 위한

〈표 5〉 LNG 수요 추이

(단위 : 천t, %)

	'86	'87	'88	'89	'90
발전용	45	1,537	1,905	1,669	1,719
도시가스용 (비율)	—	76 (4.7)	184 (8.8)	349 (17.3)	575 (25.1)
계	45	1,613	2,089	2,018	2,294

〈표 6〉 도시가스 보급 추이

	'82	'87	'88	'89	'90
수요(백만 m ³)	26	189	308	590	964
보급가구(천세대)	164	576	730	946	1,211
보급률(%)	1.9	5.8	7.2	8.6	10.8
도시가스 회사 수	3	17	19	21	24

〈표 7〉 가스 수요 전망

(단위 : 천t, %)

	'90	'91	'93	'96	'92~'96 연평균증가율
L P G	3,034	3,924	6,091	7,223	13.0
L N G	2,294 (575)	2,576 (752)	3,000 (859)	4,500 (1,543)	11.8 (15.5)
합계	5,328 (3,609)	6,500 (4,676)	9,091 (6,950)	11,723 (8,766)	12.5 (13.4)

註 : 괄호 안은 發電用 LNG수요를 제외한 수치임.

〈'90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시설〉

- 기존공급지역 배관망 확충 : 955km('89년말 3,408→'90년말 4,363km)
- 신규공급지역 배관망 건설 : 183km
 - 수도권(106km) : 성남(분당)·의정부·구리 등 11개시 및 김포·고양군 등 4개郡
 - 지방(77km) : 청주·포항·경산·광양市 및 달성·울주郡

행정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 LPG 저장기지 확충

'80년대에 들어 필수 民生燃料로 정착된 LPG의 수요증가에 따른 국내 수급안정과 유사시 원활한 공급기능의 확보를 위해 LPG 비축을 추진하고 있다.

비축목표는 국내 수입소요의 45일분으로서 政府部門 30일분, 民間部門 15일분에 이르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LPG 수입회사의 운영재고로서 그 목표치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부문으로는 '89년말 저장능력 16만t 규모의 LPG비축기지(총투자비 564억원)를 완공, 현재 총 11만2천t(프로판 8만9천t, 부탄 2만3천t)의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LPG수입소요의 증가에 대처 '95년까지 16만t 규모의 정부비축시설을 추가건설하는 한편 수도권지역의 수급실정을 감안, 中部圈에 신규수입기지건설과 아울러 적정수준의 민간비축의무화 추진으로 비축확대를 통한 LPG 공급의 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도입선 다변화 추진

LPG도입계약 기간은 5년 내외로서 LNG(보통 20년)에 비해 비교적 短期인바, 輸入先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어 그동안 정부의 도입선다변화 정책에 부응한 LPG수입전문회사(여수 에너지·유공가스)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도입계약국 수가 점차 증대하여 왔다.

그러나 LPG의 경우 세계적으로 수출여력 및 가격조건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국내 도입에 적합한 導入先은 대부분 사우디 등 中東國家들이어서 현재 중동의존도가 90%를 상회, 공급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도입선 다변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LNG는 인도네시아와 기존 장기도입 200만t /년 이외에 신규로 '94년부터 연간 200만t의 도입계약을 체결하였고, 말레이시아와는 '95년부터 연간 200만t 도입을 위하여 협상을 진행중이다. 앞으로 추가소요물량의 도입선은 LNG 전국공급사업과 연계하여 국제 LNG 市況을 면밀히 검토,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국내외 가스개발사업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스가격 관리

국내 가스가격 관리정책의 주된 과제는, 자원의 효율적 配分利用이라는 기본전제 아래 가스의 안정공급과 보급확대를 위해 다른 에너지와의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제고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내 가스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도입가격이 가장 큰 變數로 작용되나, 이는 에너지수급환경 및 국제정세 등의 대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여기서는 국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LNG 도시가스 가격은 '87년 공급개시 이후 8차에 걸친 가격인하로 어느 정도 가격경쟁력은 갖추었다고 판단되나, '90년부터 수도권 지역 아파트 등에 대한 연료규제로 난방비용

〈표 8〉 국내 LPG 도입 추이

	'87	'88	'89	'91
• 도입량(천t)	843	1,245	1,672	2,791
• 도입계약국수	2 (사우디, 아부다비)	3 (쿠웨이트 추가)	4 (인도네시아 추가)	5 (카타르 추가)

〈표 9〉 LNG 도시가스가격 인하 추이(평균소비자 가격) (단위 : %)

'87.5	'87.12	'88.6	'88.12	'89.1	'89.6	'90.5	'91.7
-8.7	-10.0	-16.1	-4.1	-2.2	-11.6	-6.1	-1.2

〈표 10〉 원인별 사고건수

구 분	'80~'88	'89	'90	합계	구성비(%)
취급 부주의	99	16	39	154	59
시설 미비	30	5	18	53	21
불량제품사용	28	-	4	32	12
기 타	16	2	3	21	8
합 계	173	23	64	260	100

추가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연료규제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이들 부담의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할 계획이다.

국내 LPG 가격은 지난 '88~'89년 중 국제유가, 환율 등의 변동요인이 있을 때마다 3차에 걸쳐 총 21%가 인하여 취사용 연료로서는 그 편의성을 감안할 때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91년 5월에는 人件費 등을 감안, 유통마진을 일부 현실화하고 일반용과 도시가스용의 가격격차를 줄이는 가격구조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가스용 LPG 가격은 일반용 대비 78%, LNG대비 87%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도시가스원료간의 가격균형 유지 및 도시가스용 LPG의 공급안정측면에서 적정수준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83년 이후 가정용 고급연료의 과소비 억제와 차량연료간의 형평측면에서 부과해온 LPG 특별소비세는 LPG가 이미 대중연료로 정착된 현시점에서 더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으며, 특히 경쟁연료인 LNG와의 형평유지를 위해 서도, LPG 特別消費稅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LPG 수요 중 수입공급 비중이 65% 이상이고 LPG 도입가격이 원유의 85~90%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타연료와의 가격 경쟁면에서 탄력적인 가격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국내 LPG가격이 국제가격에 직접 連動하는 새로운 가격조정체계의 정립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對國民 서비스 강화

가스안전관리는 가스사용의 증대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과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스는 순간적인 관리 소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관련제도의 마련과 이의 운용, 그리고 안전관리의 실행에 추호의 미비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및 관계기관, 유관업체들의 부단한 노력과 사용자들의 의식 제고로 가스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스사고는 사용량에 비하여 그리 많은 수준이 아니어서 꽤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고원인의 많은 부분이 사용자들의 취급부주의(59%)와 시설미비 및 불량제품사용(33%)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가스안전 관련제도의 정비

가스사용량의 급증 및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등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가스안전의 과학적인 관리와 사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관련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갈 것이다.

■ 점검·교육·홍보의 강화

가스사고의 원인별 분석에 의한 대책으로서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점검, 취급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불량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수집검

사를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사용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부탄가스의 활용 확대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가스난방기기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프로판에 편중된 가정용 LPG 수급구조의 개선도모 등을 위하여 '89년에 부탄가스를 연료로 하는 容器 내장형 난방기기인 캐비넷히터의 국내 보급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캐비넷히터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미 널리 보급·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유통체제, 비용 및 안전성·편리성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어 '91년 冬節期에는 10만대 이상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스공급 등에 있어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유럽지역에서 공급하고 있는 가정취사용 소형용기를 이용한 부탄가스 사용방안도 아울러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 LPG 容器 보증금제도의 정착

LPG 용기보증금제도는 용기 소유관리방식의 개선을 통한 가스안전 확보와 가스유통구조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가스사용자의 편의증진과 LPG 유통업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施行上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현행 용기관리상의 제반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당략

經濟正義 확립을 위한 地價公示制度



추규선

건설부 지가조사과장

地價公示制度는 정부가 標準地를 정하고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행정목적으로 地價를 산정하거나, 鑑定評價業者가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의미와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유사한 제도로써 국토이용관리법상의 基準地價制度가 있었으며, 기준지가 이외에도 內務部가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산정한 課稅時價標準額, 국세청이 특정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등 國稅의 부과를 위하여 산정한 기준시가가 있었다.

地價公示制度의 意義 및 도입배경

이들 地價는 사용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하여 조사·평가됨으로써 상호간 연계성이 결여되어 인력 및 재정의 낭비가 초래되고 公的地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각 地價 모두 객관적인 지가수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政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地價體系 개선에 관한 사항을 '81년 7월 성장발전저해제도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가졌고, '89년 4월 1일 '地價

公示 및 土地 등의 평가에 관한 法律'(이하 '지가공시법'이라 약칭함)이 제정됨으로써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지가조사 체계

전국의 지가조사 체계는 二元化되어 있다. 먼저 地價公示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표준지를 선정하여 표준지에 대한 지가(公示地價)를 공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 외의 토지가격(個別土地價格)을 조사·산정한다.

'公示地價'는 건설부장관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鑑定評價士에게 의뢰하여 조사·평가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단위면적(m^2)당 가격이다. 여기서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個別土地價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당해토지와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공급한 土地價格比準表에 의거, 토지특성차에 따른

地價公示制度는

정부가 標準地를 정하고 그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행정목적으로 地價를 산정하거나 鑑定評價業者가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價格倍率을 추출하고,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주민의 의견수렴과 地方土地評價委員會의 심의 등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고하는 가격이다.

개별토지가격은 약 2,500만 筆地의 가격을 조사하는 방대한 작업이어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하고 있다. 즉, 건설부에 中央統制部, 市·道에는 통제반, 시·군·구에는 점검반과 조사반을 두고 있다. 중앙통제부는 내무부·건설부 및 국세청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각 시·도 統制班을 지휘·총괄·지원하고, 통제반은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중앙통제부로부터 受命한 사항을 이행하고 점검반에 대한 지원 및 시·도 단위의 관련임무를 총괄한다. 점검반은 시·군·구의 공무원과 중앙통제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한국감정원 직원 등으로 구성하며, 토지가격의 조사·산정을 점검하고 諮問에 응하는 등 조사반의 업무를 점검·지원한다. 조사반은 시·군·구 및 읍·면·동의 공무원으로 편성하며, 개별토지의 특성 및 지가의 조사·산정업무를 수행한다.

地價公示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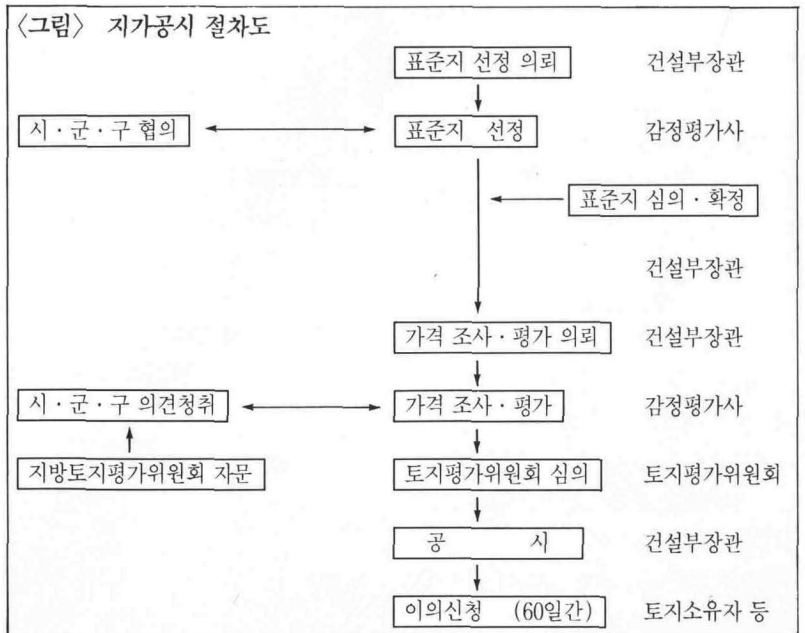
地價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지를 선정하게 된다. 표준지는

건설부장관이 전국의 토지 중 과세대상토지와 國公有的雜種財産을 대상으로 30만 필지를 선정하는데, △ 代表性(표준지 선정대상지역의 지가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 中庸性(토지의 이용상황·형상·면적 등이 표준적인 토지) △ 安定性(표준지선정 대상지역의 일반적인 용도에 적합한 토지로서 그 이용상태가 일시적이 아닌 토지) △ 確定性(다른 토지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토지) 있는 토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표준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조사·평가(복수평가)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賃料 및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며 표준지에 건물, 기타의 定着物이 있거나 地上權 기타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設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과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시장·군수·구청장은 地方土地評價委員會의 자문을 받아 의견 제시)하며,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가격은 학계전문가·법률가·부동산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공무원으로 구성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공시한다.

건설부장관이 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은 당해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公示日로부터 60일 이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건설부장관은 이의신청 표준지에 대하여 재조사·평가를 한 후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고한다.

공시지가의 효력 및 적용범위

공시지가의 효력

지가가 공시되면 다음과 같은 세가의 효력이 발생한다.

첫째, 公示地價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指標가 된다. 토지의 거래자는 거래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지는 공시지가를 지표로 하여 거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둘째, 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할 경우 그 기준이 된다. 행정목적을 위하여 전문평가인으로 하여금 個別筆地를 정밀평가하도록 하거나, 專門評價인이 아닌 행정공무원이 직접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 전자에 해당되는

예는 행정기관이 토지의 관리 및 매입(취득)·매도(처분)·경매·재평가 또는 분양 등의 이유로 토지를 평가하는 것 등이고, 후자의 예는 국세·지방세의 과세를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이나 토지거래허가 심사기준가격 산정을 위하여 공무원이 土地價格比準表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鑑定評價士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토지와 類似한 이용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地形·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標準地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지가의 적용범위

공시지가의 적용범위는 광범위하다. 공시지가 이전의 公的地價는 특정

목적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었으나, 공시지가는 모든 공적지가의 산정·평가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각종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特例法'에 의한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사용시 보상금의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租稅賦課의 기준이 되는 개별 토지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법상의 課稅時價標準額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고, 상속세·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 또는 贈與財産을 평가함에 있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들 조세의 과표가 모두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바뀌었다. 특히, 최근 국민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비롯하여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도 개별토지가

〈표〉 주요제도의 공시지가 적용시기

	적용범위	적용시기
조세	토지초과이득세	'90. 1. 1
	증여세	'90. 5. 1
	양도소득세·법인세특별부가세	'90. 9. 1
	상속세·종합토지세	'91. 1. 1
	개발부담금	'90. 3. 2
기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92. 3. 2
	토지거래허가심사기준	'89.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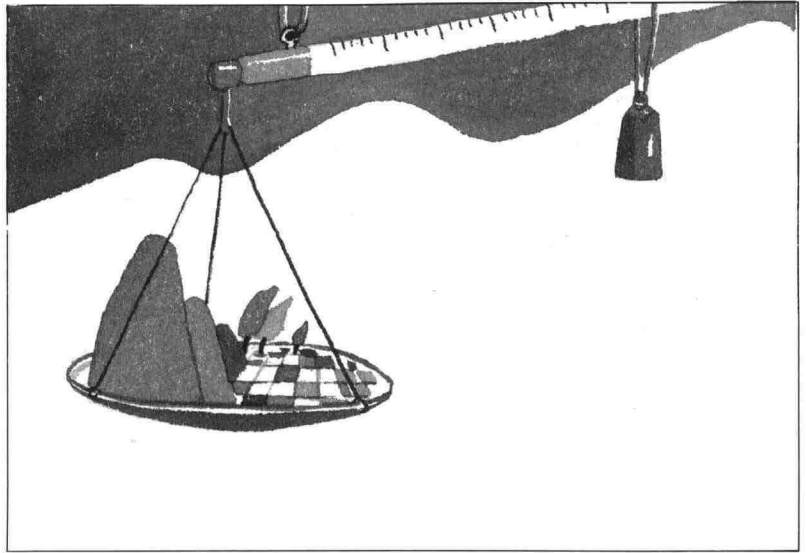
격을 기준으로 課標를 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토지가격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셋째, 개발부담금의 산정 등 기타 행정목적에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는 조세 이외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宅地超過所有負擔金,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지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지의 취득 또는 處分價額 및 도시계획법 등 기타 法令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가격의 산정기준이 된다.

지가공시제도의 운용

'89년 4월 1일 地價公示法 제정 이후 세차례에 걸쳐 지가를 공시하였다. '89년에 15만 標準地를 '89년 7월 1일을 基準日로 하여 '89년 12월 30일에 공시하였고, '90년과 '91년에는 30만 標準지를 各年度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각 '90년 4월 30일과 '91년 2월 28일에 지가를 공시하였다.

이와 같이 공시된 지가는 보상금산정의 기준 및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특히 '89년에 새로 도입된 택지소유상환제·개발이익환수제·토지초과이익세제 등 소위 土地公概念 관련제도들도 모두 공시지



가를 그 시행의 礎石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제도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地價가 정확히 조사·평가되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가가 공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가공시제도의 운용은 정확한 지가를 조사·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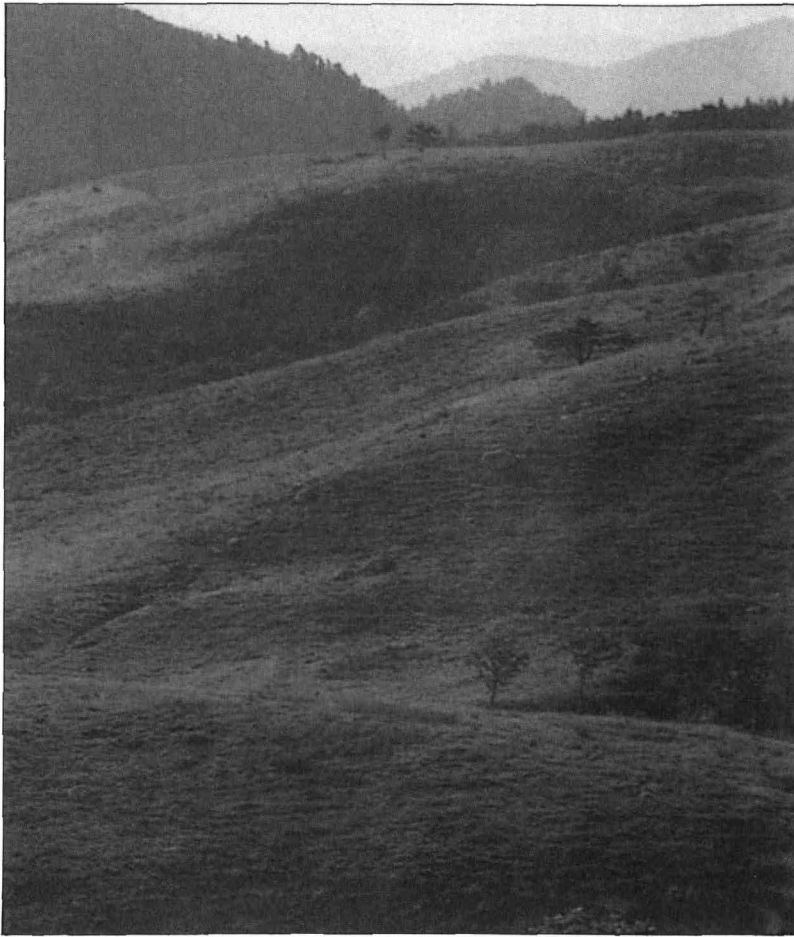
공시지가 標準지의 합리적 분포

표준지는 시·군·구별로 토지의 筆地數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토지의 특성별로 고루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91년부터는 표준지 선정시 지역특성과 현지역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의 조사·산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표준지의 빈번한 교체는 地價算定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동일 표준지

를 계속적으로 조사·평가하되 標準地數의 조성, 토지의 合併 또는 분할 등으로 표준지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지를 교체하고 있다.

공시지가 조사·평가의 정확성 제고 공시지가의 조사·평가는 토지의 감정·평가 전문가자격자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므로 적정가격이 조사·평가된다고 볼 수 있으나, 감정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誤差 및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따른 차이점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격판단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시지가 조사·평가 담당자는 當該地域에서 감정평가 경험이 있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감정평가사를 배정하여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조사·평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부동산 관계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



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간 가격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군·구간 또는 시·도간 가격균형에 관한 협의를 하고, 조사·평가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投機的 가수요 억제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지가공시제도의 정착은 토지 관련 제반제도들이 지향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투기적 假需要의 억제와 토지공급 확대유인에 의한 소득분배의 개선 및 資源配分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公的地價는 時價와 괴리되어 정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負擔金을 부과하게 되면 토지를 보유하는 데 따른 비용이 편익을 相殺시키거나 초과할지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키고, 토지과다보유 욕구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로 금년 7월에 地價急騰地域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예정부과되면서 토지를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하강국면의 여파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와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시지가제도 도입시에 의도된 정책효과는 地價制度 하나만의 독립적인 운용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토지와 관련된 각종 法制를 신중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公的地價制度和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들을 능률적이고도 민주적으로 운용하여 公益과 私益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아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經濟正義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인 동시에 임무라 할 것이다. 나라
중진

장애인의 再活과 사회참여를 위한 福祉施策



김지영
보건사회부 재활과장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실현 즉,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보다 앞당겨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의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의 자활·자립의지와 참여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장애인복지는 '肢體·시각·청각·언어장애 또는 精神遲滯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들'(장애인 복지법 제2조 규정의 장애인)이 모든 생활에서 곤란을 받지 않도록 국가나 민간 사회기관 등이 교육·직업·의료·심리·사회적 제문제에 걸쳐 도와주는 제도적·정책적인 제반 활동과 노력을 말하며, 그 목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장애인으로 하여금 완전한 社會參與와 평등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은 '85년도에 韓國人口保健研究院에서 실시한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전체인구의 2.22%로 나타났으며, 금년도 전체인구수 기준시 현재의 장애인수는 약 96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障礙人登錄事業을 추진하고 있는데, '91년 6월말 현재 추정장애인수의 약 27%인 26만명의 장애인이 등록을 하였다.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81년 이후 체계적 복지정책 시행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을 보면 '80년과 '88년을 기준으로 정책내용이 크게 변화하였는데, 제1단계라

할 수 있는 '80년 이전에는 6·25 전쟁 및 각종 질병으로 발생한 장애아동의 收容保護事業이 주된 내용이었다.

'81년의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장애인 복지의 基本法인 心身障礙者福祉法을 제정·시행하고 보건사회부에 전담부서인 再活課를 설치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81~'88년간은 제2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3단계라 할 수 있는 '89년 이후에는 '88년의 제8회 세계장애인올림픽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증대된 장애인복지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전면개정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障礙人義務雇傭制를 도입하는 등 그간의 施設保護 위주의 사업에서 집에 있는 모든 장애인의 복지를 확충해 나가는 데 注力하고 있다.

10여개 정부부처에서 장애인복지업무 分擔

장애인복지업무의 복잡한 특성에 따라 현재 主務部處인 보건사회부를 비롯한 10여개의 정부부처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保健社會部에서는 장애발생의 예방·장애인의 수용보호·장애인 의료재활과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教育部는 장애인의 특수교육업무를, 勞動部는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 및 산업안전대책을, 治安本部 및 交通部에서는 交通安全대책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有機的인 협조가 必要하다고 하겠다.

추진중인 장애인복지사업의 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重症障碍人을 수용보호하기 위해 요양시설을 설치하고, 輕症障碍人의 생활훈련·의료 및 職業再活을 위해 각종 재활시설

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집에 있는 모든 장애인의 상담·취업안내·의료·직업재활서비스를 위해 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 이 외에도 장애인근로시설과 再活病院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1〉 장애인복지시설 현황('91)

(단위 : 개소, 명)

구분	총계	재 활 (수용) 시 설					요양	근로	복 지 관 기 타				
		소계	지체	정신 지체	시각	청각			소 계	지 중 합	관 중 별	기 체 육 관	타 재 활 병 원
시설수	164	96	34	38	11	13	28	6	22	12	10	7	5
수용인원	12,883	11,405	3,317	5,900	944	1,244	1,238	240					

■ 장애발생 예방사업

선천성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嬰·乳兒와 임산부의 검진 및 각종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91년도에는 精神遲滯人의 발생예방을 위해 신생아에 대한 先天性代謝異狀검사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발생의 80%가 넘는 후천성 장애발생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및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장애인 의료 및 교육재활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補裝具 무료교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의료를 전담하는 6개 재활병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다 전문적인 장애인의료서비스를 위해 200병상 규모의 국립재활의료센터를 건립중에 있다.

장애인의 교육재활을 위해 102개소의 특수학교(1만9,947명 교육)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학교에 3,181개의 특수학급(2,989명)을 설치·운영하여 약 2만3천여명의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각종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을 통한 직업재활사업과 就業斡旋事業을 실시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위주의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月 2만원의 生計補助手當을 지급하고 상속세 및 소득세·보철용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전화요금·공공시설 이용료 및 교통요금을 감면 또는 할인해주고 있으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LPG 연료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再活意志를 고취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국·내외 행사를 개최·지원하고, 장애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각종 국제교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장애인복지는 제도와 사업의 내용 및 규모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나 아직도 개선·보완할 점이 많을 뿐 아니라, 급증한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감안할 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90년대에는 개개 장애인별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단계적으로 개발·확충해 나감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각종 보호 및 재활시설과 복지관 등 장애인복지 시설 중 기본적으로 부족되는 시설은 地方化時代에 걸맞게 지역별로 적정수의 시설이 배치되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실현 즉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보다 앞당겨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의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의 자활·자립의지와 참여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보람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료·직업적 재활서비스를 통해 개인적 장애를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생활상의 장애를 극복하여야 하는바, 정부에서는 이를 제약하는 각종 제도·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장애자를 위한 각종 편의 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필리

‘社內勤勞福祉基金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박길상
노동부 임금복지과장

‘91년 8월 10일 ‘社內勤勞福祉基金法’이 제정·公布되어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은 이 법은 벌써부터 勞·使 양측으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社內勤勞福祉基金’은 기업내 복지후생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과 勞使共同體意識을 고취할 목적으로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出捐하여 근로자에게 영속적이고도 독립적인 복지후생혜택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이다.

法制定의 배경 및 의의

이러한 제도는 ‘84년 2월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운영준칙’을 제정함으로써 그 출발을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政府에서는 勞使協議會가 구성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를 권장하여 왔다. 그 결과 일부 사업체에서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그간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즉 ① 基金出捐에 대한 損費 또는 필요경비 인정의 한계로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기금출연을 유도하는 데 미흡하였고 ② 기금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③

기금이 개인자격으로 설치됨으로써 대표자의 변경시 相續·贈與稅 납부문제가 대두되었고 ④ 기금의 수익금보다 기금 자체를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정적인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기존 社內勤勞福祉基金制度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를 한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의 法制化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社內勤勞福祉基金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정된 법의 주요내용

기금출연 재원 및 수준

기금출연수준은 근로자들이 현재에 만족하는 수준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84년부터 當期純利益의 5%를 기준으로 勞使가 결정한 금액을 출연토록 행정지도했다. 이 결과 平均出捐率이 3.9%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差減前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업실정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5% 이상이나 이하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社內勤勞福祉基金’은 기업내 복지후생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과 勞使共同體意識을 고취할 목적으로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出捐하여 근로자에게 영속적이고도 독립적인 복지후생혜택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이다.

기금 출연방법

기금출연은 법에 의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任意的인 사항으로 되어 있다. 立法過程에서 소득분배기능의 제고와 근로자복지증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완수 차원에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基金을 출연케 하자는 견해도 강력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금의 財源이 자본가에게 배분될 當期純利益이며, 기업내 복지는 가능한 한 법정복지보다 기업의 자율결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義務的 출연으로 할 경우 지나친 기업부담이 우려된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임의적 출연으로 하게 되었다.

기금의 운영

근로자에게 독립적이고 영속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한다는 立法趣旨에 따라 기금을 별도의 非營利法人으로 하여 해당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독립하여 운영케 하였다.

또 이러한 기금법인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운영하게 된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同數(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 '社內勤勞福祉基金協議會'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理事 및 監事의 선임과 해임, 定款의 변경 등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금의 용도

기금의 수익금으로는 ① 근로자주택 자금의 보조·우리 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②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③ 장학금·災難救護金の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수익금만으로 근로자 복지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기금의

출연금규모로 보아 시행초기에 다수 근로자가 혜택을 받기 곤란하므로 기금의 元金を 처음부터 사용하지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는 기금제도의 특성인 근로복지의 永續性과 漸增性에 배치되므로 수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基金總額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일정률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금은 그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게 하였는데, 이는 기금이 업무수행상 필요없는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유지·운영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의 增殖

기금은 ①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金錢信託 ②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債務履行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등에 의하여 증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기금이 그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안정적인 방법으로 增殖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상품 구입 등은 사고발생시 기금이 잠식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외되었다.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사용자는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社內勤勞福祉制度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금설치 당시에 이 법에 규정된 복지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勞使間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법의 제정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복지제도를 기금에 통합함으로써 여러가지 사내근로복지제도가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기금으로 통일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세제지원

사용자의 기금출연이 任意的이므로 기금제도가 그 성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해서는 稅制支援이 필수적이다. 세제 지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기금의 出捐金·增殖金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폭넓은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하여 금년 하반기중에 관련세법 및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확정할 계획이나,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전액을

損金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各界의 의견 수렴하여 施行令 제정

'社內勤勞福祉基金法'이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금년중에 施行令과 施行規則이 制定·公布되어야 한다. '84년부터 설치·운영되어 온 기금제도나 기타 사내복지제도가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한 기금제도에 원만하게 연결·接木될 수 있고 그 立法趣旨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충실하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정법의 내용을 노·사 양측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를 지난 8월중에 전국적으로 가진 바 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학계 등의 견해를 충분히 수렴하면서 시행령 제정에 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社內勤勞福祉施行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새로운 기금제도가 ① 근로자들의 점증하는 복지수요를 적절히 충족시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향상에 기여하고 ② 복지비 지출과 생산성 향상간의 연계강화로 成果配分制度가 정착되는 데 기여하며 ③ 근로자의 이윤분배 참여 제도로 발전되어 감으로써 우리나라 勞使關係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론]

鐵道公社의 설립

— 財政自立과 鐵道の 현대화 —



최현호

교통부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 사무국
파견 / 철도청 서기관

정부는 순수정부기업 형태로 운영되어 온 철도사업의 公社化를 推進하고 있다. 이는 철도가 政府企業이기 때문에 갖는 운영상의 경직성, 경영합리화에 대한 제약,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투자부담 등으로 인하여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鐵道經營上の 애로사항

政府企業으로서의 경직성

첫째는 정부기업으로서의 硬直性이다. 우선 조직 및 인사면에 있어 政府組織法에 의한 철도조직과 國家公務員法에 의한 인사관리로는 변화하는 기업환경조건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彈力性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豫算에 있어서도 그 편성이 경제기획원의 심의조정과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立法科目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移用 또는 轉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豫備費의 지출과 수입금 마련 지출도 大統領의 裁可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여 신속한 豫算執行에 의한 수익증대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부처로부터 각종 행정적 규제를 받고 있는바, 이러한 정부의 규제는 기업적 經營自律性 발휘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철도는 정치적 측면에서

公共性만 강조되었지 生産性이라든지 효율성의 측면은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표 1〉 각부처의 規制事項

규제사항	규제부처
인사관리 · 교육훈련	總務處
에 산	經濟企劃院
운임 · 요금	經濟企劃院
장기계획	經濟企劃院
공공차관	財務部
국유재산 관리	財務部
물자구매 및 건설공사	調達廳
감 사	監査院
행정업무 개선	總務處

기업성보다 공공성에 치중한 열차운행으로 총 26개노선 중 京釜 · 中央 · 京仁線을 제외한 23개노선이 적자를 보이고 있고 이 중 營業係數 200이상인 노선이 13개나 되고 있다.

經營合理化에 대한 제약

둘째로 경영합리화에 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公企業은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경영체로서의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하여 公企業의 책임자에게 독립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나 철도청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경영합리화를 제약받고 있다.

정부는 순수정부기업 형태로 운영되어 온 철도사업의 公社化를 推進하고 있다.

이는 철도가 政府企業이기 때문에 갖는 운영상의 경직성, 경영합리화에 대한 제약,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투자부담 등으로 인하여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赤字線 및 赤字驛의 정비곤란

營業採算성이 극히 나쁜 노선(예컨대 현재 營業係數 400이상인 6개선)과 驛운영에 따른 인건비 수입도 올리지 못하는 旅客取扱驛 및 화물취급량이 극히 적은 貨物取扱驛 등은 經營合理化의 측면에서 당연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 物資의 적자운송

수송화물 중 약40%를 차지하는 무연탄의 경우 運賃이 수송원가의 약90%선이며 그외 비료·시멘트·양곡·유류와 수출화물인 鑛石類 등도 輸送原價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 약 94% 수준에서 運送하고 있다. 이는 서민생활보호와 수출진흥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른 조치이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적자의 대부분을 補填해 주고 있다.

■ 赤字列車의 운행

근거리여객을 수송하거나 통근·통학을 위해 운행되는 비둘기호 열차는 시외버스 運賃의 약40% 수준으로서 열차운행 자체가 적자요인을 안고 있다. '89년 1년간의 적자가 76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서민생활의 안정이라는 사회정책적 차원과 대중교통 측면에서 적자운행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 公共負擔의 과중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社會福祉나 국가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비유인 공공서비스義務負擔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지 않고 철도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적자운영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 國家政策 수행에 따른 負擔

셋째, 국가정책수행에 의한 부담을 들 수 있다.

■ 정책사업의 투자부담

철도는 공기업으로서 투자효과분석에 의한 選別投資가 이루어져야 하나 국토개발·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에 의한 투자가 우선하므로 投資效率이 낮다. 이용률로 보아 투자가치가 없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이라는 명분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투자부담

철도는 지방도시의 발전을 위해 도시근교로 역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시설의 폐기는 물론 신규시설에 대한 투자부담과 함께 청주·전주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통편의상의 문제 등으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공업단지 引入線의 건설과 유지에 따른 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다.

鐵道公社化의 필요성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철도사업은 철도청이 국가예산과 조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 종사원 3만7천여명과 資産規模 4조3천여억원 및 연간예산 1조4,800여억원('90년)으로 主要幹線 4개선과 支線 22개선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산업 발전에 寄與하고 있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정부기업이기 때문에 겪는 애로점 특히 공공성

<표 2> 공공부담(할인 및 경영외적 경비)

(단위 : 백만원)

	'84	'85	'86	'87	'88
할인수송	15,345	16,808	19,914	20,448	26,414
통학·통근	8,205	9,915	13,039	13,339	18,959
경로우대	4,292	4,284	4,046	4,158	4,303
신문·잡지	531	779	881	994	986
우편물	2,023	1,520	1,556	1,486	1,744
수출화물	294	310	338	417	422
경영외적 경비	9,825	9,920	11,055	11,663	14,572
건널목시설 경비	5,140	5,160	5,638	6,305	6,806
청원경찰 운영	4,685	4,757	5,417	5,385	7,766
합 계	25,170	26,728	30,969	32,111	40,986

철도운영에 기업방식을 도입하여
철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철도수송과 관련한 수익성있는
附帶事業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철도경영의
재정자립을 이룩하고 철도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에 기인한 운임인상의 억제와 기타 여러 制度的 要因 등으로 영업수입은 저조한 반면에, 철도시설·장비의 유지와 건설투자 등과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탓으로 '90년말 현재 부채총액이 1조3천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현재 飽和狀態에 이르고 있는 수도권전철, 경부선 수송애로 타개와 '90년대초부터 건설될 高速鐵道建設과 수송능력증강에 막대한 投資財源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정부기업형태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철도운영에 기업방식을 도입하여 철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철도수송과 관련한 수익성있는 附帶事業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철도경영의 재정자립을 이룩하고 철도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철도는 철도현대화를 위한 고속열차의 개발과 高速鐵道網의 건설 등으로 과거 在來式 철도경영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철도경영개념으로 그 본질을 전환하고 있어서 정부기업 형태로는 경영상 彈性性和 創意性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신축성을 가질 수 있는 공사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철도공사화 추진상황

정부는 철도공사화를 추진함에 있어 △ 철도경영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 철도수송 관련 附帶事業 개발 △ 정책투자 및 공공서비스 부담분 補填과 租稅減免 등 정부재정지원의 지속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추진일정을 보면, '89년 12월 30일 '韓國鐵道公社法'을 제정·공포하였고, '90년 3월에 교통부차관을 비롯한 관련전문가 14명을 韓國鐵道公社設立委員會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90년 9월에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 사무국이 발족하였다.

이어 '91년 1월 8일 '韓國鐵道公社法 施行令'이 공포됨으로써 그에 따른 실무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 및 인사제도 改編과 회계제도 개편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해 놓고 있다. 조직 및 인사제도 부문은 올해 11월중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기초로 금년말까지 공사조직을 확정하고 인원과 인사제도 및 현업근무체제를 내년 4월까지 확정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다. 會計制度 개편문제는 금년 12월중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기초로 公社豫算會計制度를 내년 5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定款 및 各種社規도 현재 草案을 작성중에 있다.

또한 國有財產現物出資를 위해 관리재산의 확인정리로 재산목록을 작성중인데 내년초 財務部와의 共同實査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현물출자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자본금이 出資되는데로 공사설립등기와 설립공고를 하여 '93년 1월 1일부터 韓國鐵道公社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본금(7조원) 전액 政府出資의 한국철도공사가 발족하더라도 명실상부한 자율적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經營外的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기업형태의 애로사항들이 해소되어 적정운임 및 효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지고 철도수송 관련 附帶事業을 적극적으로 개발 시행하여 수익증대에 힘쓴다면, 철도경영의 財政自立과 한국철도의 현대화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글

〈표 3〉 수송수단별 분담률

(단위 : %)

	철도		公路		해운		항공	
	여객	화물	여객	화물	여객	화물	여객	화물
'61	53.0	88.2	45.5	8.2	1.3	3.6	0.2	—
'71	27.1	49.2	71.1	20.9	0.8	29.5	1.0	—
'81	25.0	45.8	73.0	20.5	0.5	33.6	0.5	—
'89	29.0	33.6	67.9	22.1	0.4	44.1	2.5	0.2

註 : 여객은 人 / km 기준, 화물은 t / km 기준임.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그 추진 현황과 계획



조영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장

現代社會에 있어서 한 국가의 생산 활동은 科學技術의 발전과 그 발전된 기술의 획득 및 반영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한 나라의 경제발전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현재의 과학기술수준과 정보전달체제를 중시하게 되었다.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과학기술은 특정인이나 단체에서 독점하여 소유할 수 없고 여러 곳에 나뉘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분산된 기술·지식을 수집하여 통합함으로써 필요한 기술정보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국가의 생산활동은 보다活性化되고 경제발전의 잠재력은 점차 커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의 공급은 대부분의 과학기술 선진국의 경우 情報流通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를 수집 및 전달하는 형태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외국으로의 기술노출 보호에 직접 정부가 관여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과학기술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선도하고, 자체신기술 개발의 역량을 축적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보공급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부의 주도하에 情報流通體制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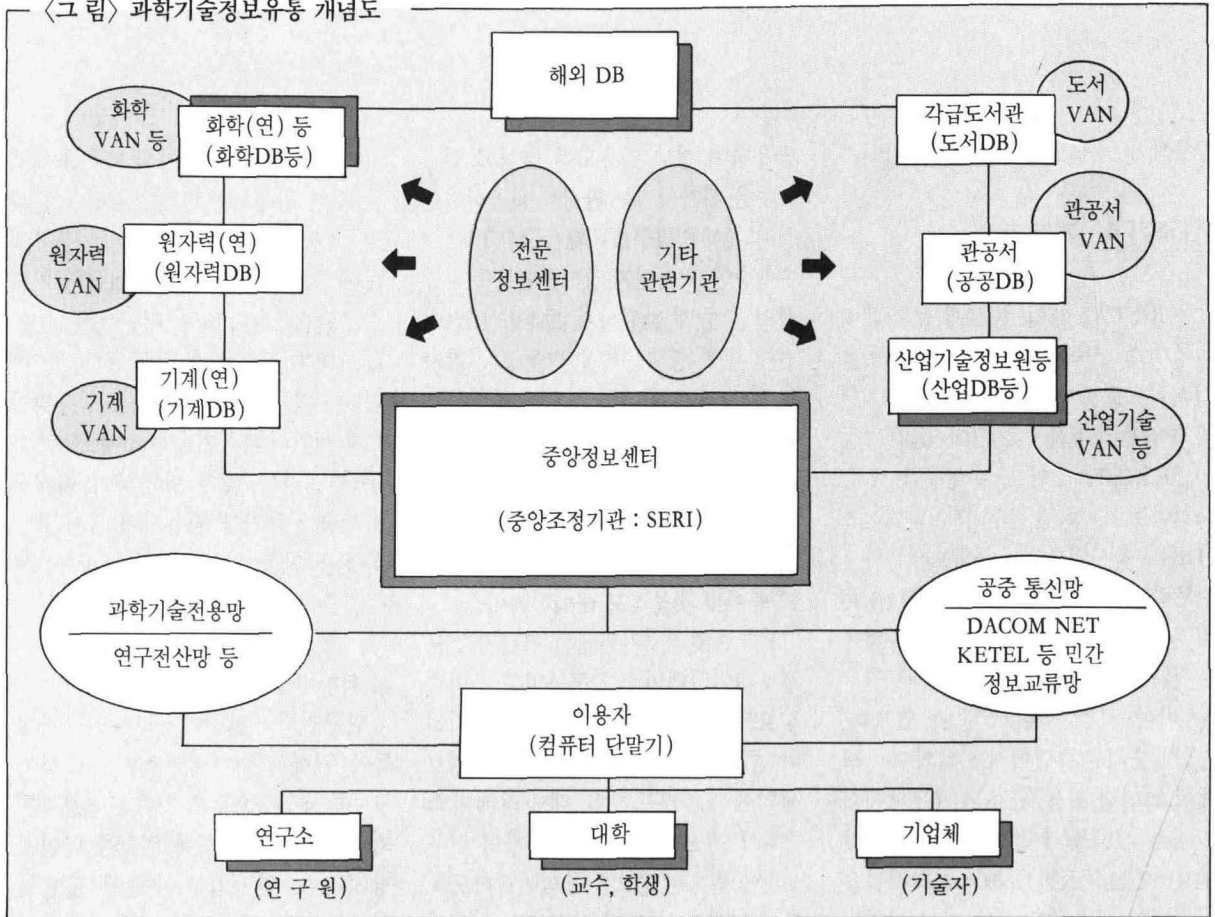
이러한 國家科學技術情報 유통체제의 구축 사업은 그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보수집과 축적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과학기술정보 전용 네트워크의 형성과 이를 지원하는 능력을 보유한 政府出捐研究機關들을 중심으로 전담 기구를 지정하여 출범하게 되었다.

새로운 정보유통체제의 출발

科學技術處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공학연구소를 주축으로 하여 과학기술분야의 政府出捐研究機關들이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 과학기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학기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情報流通體制 구축 사업의 1차연도인 금년도에는 10개의 출연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한국기계연구소·한국동력자원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전기연구소·한국표준연구소·한국화학연구소·한국해양연구소·해사기술연구소)이 전담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축적되는 정보를 'KRISTAL(Korea Research Inform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Access Line)'이라고 하여 하반기부터 참여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과학기술경쟁력 향상을 선도하고, 자체신기술개발의 역량을 축적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보공급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부의 주도하에 情報流通體制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림〉 과학기술정보유통 개념도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다.

‘KRISTAL’이 국내에 정착되면 科學技術處 산하의 出捐研究機關이 보유한 각 전문분야의 모든 심층 과학기술정보가 과학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국가연구전산망이나 公衆情報通信網을 통해 정보이용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게 된다.

기본 추진 방향

시스템공학연구소는 ‘KRISTAL’과 연구전산망을 연계하여 국가적 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하는 ‘중앙정보센터’의 기능을 맡고, 참여하는 출연연구

기관은 전문과학기술 정보의 수집 및 가공을 책임지는 ‘전문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分散型 체제로 구축되며, 이들 兩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중앙정보센터’는, △ 중앙조정기관으로서 전문정보센터의 지원 및 종합조정 △ 정보유통체제 구축에 필요한 標準化政策 수립 업무 및 정보검색시스템 개발 △ 종합 데이터베이스·국가 공용 데이터베이스·科學技術用語 데이터베이스 구축 △ 온라인 정보유통망의 지속적 확장과 정보 서비스의

질적 개선 △ 지역정보센터의 설치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 최신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 주요 정보 서비스기관과 상호 정보교환망 구축 등을 맡게 된다.

‘전문정보센터’는 △ 전문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운영 △ 전문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標準化作業 지원 △ 전문 분야별 상세정보 보유 및 유지관리 △ 전문 분야별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가공 △ 전문 분야별 해외 심층기술 정보 현황 및 관련기관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책임진다.

이러한 ‘KRISTAL’의 기본방향을 요약하면 〈그림1〉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체계 개념도로 나타낼 수 있다.

'KRISTAL 계획'의 내용

'KRISTAL 계획'은 크게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부문과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종합 기술지원 및 운영관리 부문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KRISTAL'의 진행내용을 주요 사업별로 요약하면, 전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으로서 종합도서목록·전문정보·과학기술용어·科學技術共用 등 네종류의 큰 분야로 분류하여 추진하는 데이터베이스 사업 중 일부는 이미 시범 서비스 중에 있으며, 종합기술지원 측면에서도 해외 데이터베이스 연결 활용, 표준 소프트웨어의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여 지난 6월말 'KRISTAL' 示範公開時 진척사항을 발표하고 관련세미나 및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 종합도서목록 데이터베이스

이는 15개 출연연구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제이다. 각 연구기관에서 자체 도서정보를 분산하여 제작하고 이 분산정보로부터 중앙정보센터에서는 종합목록(union catalog)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 기관의 도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계시켜 필요한 도서의 相互貸借(inter-library loan)를 실현함으로써 연구활동에 필요한 도서정보를

공유하여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연구 효율을 배가시키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韓國科學技術院(KAIST)에서 수행중인 '과학단지 장서종합목록 구축사업'을 승계 발전시켜 西洋書 15만여 권에 대한 종합목록을 만들고 신착자료 및 東洋書에 대한 정보를 종합목록에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2만5천건의 종합도서목록이 작성되어 있다.

■ 분야별 전문정보 데이터베이스

8개 출연연구기관에서 기관별 전문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야별 정보를 수집·분류·가공 및 관리하며, 종합정보서비스를 위하여 중앙정보센터에 요약된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료수집을 용이하게 하고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여 국가적 연구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제작중인 전문분야는 정보산업·신소재·항공재료·에너지 자원·전기·원자력·해양환경·海事技術의 8개 분야로 약 7천건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 과학기술용어 데이터베이스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시소러스(thesaurus) 작성과 용어관리를 추진하여 과학기술 전문용어를 표준화함으로써 용어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정보의 체계적인 가공을 지원하여 정보의 질을 높이고 축적을 촉진시

키기 위한 것이다. 국가 정보유통 체제를 보다 활성화하고 정보처리 표준화와 과학기술용어 시소러스 구축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지난 6월 10일 業務協力合意書에 공동 서명한 바 있다. 우선 시소러스의 공동 활용방안으로 해외의 과학기술용어 시소러스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이것을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가 표준화案을 만들기 위한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다.

■ 과학기술 공용 데이터베이스

연구인력·연구기자재·연구과제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연구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 연구를 미연에 방지하며, 연구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기자재를 공동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자료 수집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련 기관들과 상호 협조하여 공동으로 구축하고 정보의 활용범위는 자료의 성격 및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기자재는, 과학기술처 훈령 제309호(科學機資材 도입 및 공동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美貨 3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표준연구소 및 대덕관리사무소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현재 약 1,200건의 정보를 갖고 있다.

인력은, 국내 출연연구기관·대학·기업연구소 및 관련기관의 전문 과학

科學技術處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시스템공학연구소를 주축으로 하여 분야별 전문 과학기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인력과 해외주요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소 및 韓國科學財團에서 수집 대상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는데, 현재 1만5천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구과제 관련 數值資料(codata)는, 연구결과로 생성된 실험 관측 데이터·정량적 데이터 등의 수치자료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과학정보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향후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온라인으로 국내외의 수치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다.

종합기술 지원 및 운영 관리

■ 해외정보 활용

해외의 技術動向 파악과 과학기술 선진국의 정보 획득을 위해 해외 정보

서비스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각종 서비스에 가입하여 국내 이용자를 지원하고, 자동번역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등 정보 습득에 취약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협력 및 해외과학기술정보 수집망을 가동하여 높아가는 기술보호장벽에 대비하고자 한다.

<표> 제1단계 세부 추진 계획

주요사업내용	'91년	'92년	'93년
데이터베이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정보 데이터베이스(5만건) 10개 출연연구소 종합도서정보 데이터베이스(10만건) 인력 데이터베이스(2만명) 기자재 데이터베이스(1천건) 엔지니어링 기술정보(2만건) 등록 프로그램 정보(5천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20만건) 10개기관 → 15개 기관 종합도서 정보(22만건) 산업계 인력 데이터베이스 확대(3만명) 연구과제 정보 추가(4천건) 엔지니어링기술 종합정보(5만건) 과학기술용어 데이터베이스(1만5천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개 이상 출연연구소로 전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50만건 이상) 종합도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대학으로 확대(35만건 이상) 인력, 연구과제 종합 정보 데이터베이스 과학기술용어(3만2천용어 이상)
표준화 및 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 검색 및 입력 시스템 개발 및 활용 내부 표준화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온라인 검색 및 입력 시스템 설계 과학기술용어 표준화 표준화안 실무 적용 및 검토 광디스크 활용 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온라인 검색 및 입력 시스템 개발(Ver.1) 표준 도서 관리 시스템 개발 표준화 시안 완성
정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研) 및 관련기관에 연구전산망을 통한 정보 서비스 상공회의소(지역 상의 포함)를 통한 산업계 정보 제공 관련부처(과기처 등)에 정보제공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공단 등에 과학기술정보 서비스센터 운영 해외 데이터베이스(일본 JOIS)를 자동번역 시스템을 통한 국내 시범서비스 공중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DACOM-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정보 서비스 체제(6대 도시 중심)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자동번역 시스템을 통한 국내서비스 확대(JOIS) 타 정보 제공 기관과 연결(KINITI, NACSIS) 온라인 원문 제공 시범 서비스

■ 표준 소프트웨어 개발

효율적인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연구기관별 중복 개발을 방지하며 소프트웨어의 互換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초기의 시범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스템뿐만 아니라 장기적 표준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스템 및 'KRISTAL' 전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등을 국내 기술에 의해 공동 개발하여 표준화된 소프트웨어로 공급할 방침이다.

■ 교육 및 홍보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KRISTAL'의 과학기술정보를 쉽게 이용하고 국내외 정보서비스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檢索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 스스로 다양하게 접근하여 찾도록 도와주며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용자 지원임무를 전담할 인력을 적극 양성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모든 국민에게 정보사회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弘報戰略을 수립하여 정보의 중요성을 선전하는 定期刊行物을 발간하고, 'KRISTAL'의 최신 기능 및 정보를 광범위하게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나갈 것이다.

3단계에 걸쳐 '99년까지 완성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는 총 3단계에

걸쳐 '99년까지 완성될 계획이다.

1단계인 금년부터 '93년도까지는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유통체제를 정착시키게 된다. 이 기간중 △출연연구기관별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학기술 기자재·인력·프로젝트·수치자료 등 과학기술 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서관리 시스템 개발 및 종합도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종합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시스템 개발(버전 1) △부산·대구·광주에 연구전산망과 연계된 대도시 중심 지역정보센터 설립 △한국과 미국간의 專用回線 설치로 해외 전산망 서비스 강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대한상공회의소 지소를 통한 홍보 및 서비스 등을 추진하게 된다.

2단계는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년간으로 출연연구기관·학계·산업계를 연결한 전국적인 온라인 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이 기간중에는 △출연연구기관별 전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 및 활성화 △교육 전산망과 연계하여 통합 구축 및 서비스 △종합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시스템 기능 확장(버전 2) △과학용어 시소러스 구축 △해외 데이터베이스의 자동번역 시스템 구축 △인천·춘천·전주·구미·창원 등으로 지역정보센터 확대 설치 운영 △구주지역까지 해외 전산망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인 '97년도부터 '99년도

까지 3년간은 국내 데이터베이스와 해외 데이터베이스의 연계활용을 통한 종합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하여 이 사업의 최종 목표인 선진국과 동등한 流通體制를 정착시키는 기간이다. 이 기간중 △해외 정보서비스와의 통합관리체제 구축 △과학기술종합 데이터베이스의 산업계 연계 △전국의 각 기관이 연결되어 운영되는 종합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多國語 시소러스 완성 및 자동번역체제 운영 △자료의 광디스크화로 온라인 자료제공 서비스 △전국적 온라인 정보 入出力 體制 구축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정보유통체제를 조성하는 등 장기종합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어 초기 사업은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만 간다면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정보 축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렇게 축적된 기술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하고 현 수준의 정보 보유 및 활용 초기 상태를 벗어나 先進科學技術情報 보유국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큰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립



內需過熱 속에 국제수지·물가 불안 재현

김대기

경제기획원 자금계획과 사무관

2/4분기중 우리 경제는 內需好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현저히 늘어남으로써 9.2%에 달하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성장내용면에서도 '90년이후 과열된 建設投資가 14%대로 진정된 반면, 수출은 물량기준으로 두자리수의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그동안 진정추세를 보여왔던 民間消費가 2/4분기 들어 다시 전체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수입이 계속 높은 증가세를 보여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건전한 성장기반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7월 들어서도 산업생산이 8%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都小賣 판매지수·건축허가 면적 등 실물 경제지표가 높은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우리 경제의 양적확대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반기까지 호조를 보이던 수출이 7, 8월 들어 부진세를 보인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확대됨으로써 그동안 꾸준한 회복세를 보인 國際收支가 다시 악화되었으며, 지난 4월이후 안정추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도 8월 들어 농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임으로써 그동안 다져온 안정기조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7~8월중 계속 0.4%씩 하락하여 부동산 투기는 현저히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후 人力難·資材難 등 경제왜곡요인으로 작용한 過熱 建設景氣는 건축허가면적이 지난 3월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7월 들어 주택건축허가 면적이 53.7%나 상승함으로써 다시 과열의 우려를 보였다. 그러나 기초적으로 보면 건설경기는 진정추세에 들어갔다고 판단된다.

한편 실물경제의 거울이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은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수출회복에 따른 經常收支의 개선으로 7월 들어 회복세가 이루어지다가 7월말 이후 8월초까지 폭등장세로까지 연결되어 綜合株價指數가 단숨에 760선까지 도달하였으나, 그 이후 국제수지적자 확대에 의한 불안심리가 가중되어 8월말에는 다시 700선 이하로 떨어지는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국제수지 적자는 수출부진보다는 수입확대가 主因

상반기중 꾸준히 개선추세를 보임으로써 1월중 13억5천만달러 赤字에서 6월중 3억8천만달러 수준까지 축소되어 온 국제수지 적자가

〈표 1〉 경제성장 내역

(단위 : %, 불변 증가율)

	'89	'90		'91		
		上	연간	1/4	2/4	上
경제성장	6.8	10.2	9.0	8.9	9.2	9.1
민간소비	10.9	11.5	10.4	8.8	9.3	9.1
고정투자	16.9	27.6	23.4	20.9	14.8	17.5
(건설)	(18.5)	(34.6)	(27.9)	(24.4)	(14.4)	(18.5)
(설비)	(15.2)	(20.1)	(18.4)	(17.3)	(15.5)	(16.3)
상품수출	-5.0	2.5	4.6	9.2	14.3	11.8
상품수입	14.2	15.4	13.2	19.6	15.9	17.7

7월 들어 다시 11억9천만달러 수준으로 확대됨으로써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그림)

그러나 7월중 적자폭이 커진 것은 상당부분 異例의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 사실이다. 먼저 수출면에서 선박수출이 저조(5~6월 : 평균 4억1천만달러→7월 : 7천만달러) 하였고, 자동차 수출이 노사분규에 따라 차질을 빚어 수출증가율이 2/4분기 17.6%에서 2.4%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수입면에서는 増設된 石油精製會社 가동에 따른 원유도입 증가(215.5%)와 항공기 도입(7천만달러) 등 일시적 요인으로 증가율이 무려 33.1%에 이르렀던 것이다.

다만 8월 들어서는 수출증가율이 8%대로 회복되고 수입증가율도 16% 수준으로 둔화되어 국제수지 적자도 약7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수지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금액이 相異하게 발표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通關上의 수출입차와 국제수지상의 貿易收支를 혼동하는 데 기인한다. 통관상의 수출입은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計上되는데 비해, 무역수지개념은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는 상품의 재수출과 재수입 등은 통관기준에는 잡히지만 국제수지기준에는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통관 기준의 경우 수출은 FOB, 수입은 FOB 이외에 운임·보험료까지도 포함한 CIF금액으로 계상되지만 국제수지기준은 수출입 모두 FO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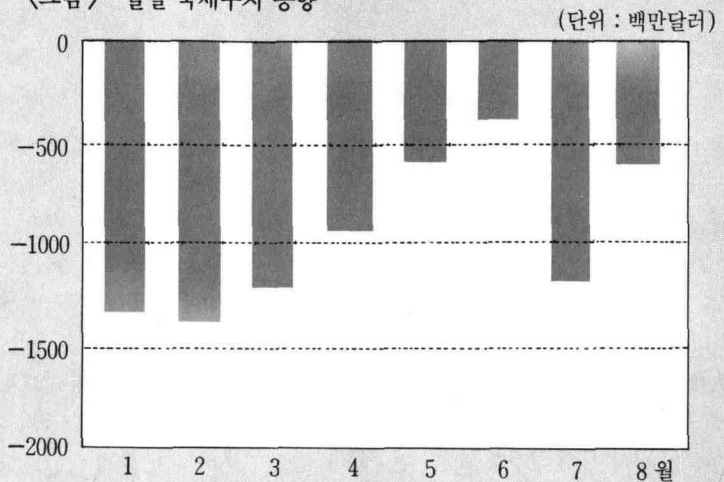
금액으로 계상되므로 이에 따른 차이도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보면 국제수지상의 수출은 통관수출의 98% 수준, 수입은 통관수입의 93~94% 수준에 이른다.

금년들어 국제수지 적자는 1~8월동안 약77억달러로 사상 최대규모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적자규모가 늘어난 것은 과거

와는 달리 수출부진보다는 수입의 급증에 있다. 수출의 경우 지난해 4.2%의 부진에서 벗어나 금년 1~8월중에는 11.8%의 健實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바, 현재 우리 경제 규모로 볼 때 앞으로 수출증가율이 과거와 같이 20%를 넘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11.8%의 증가율은 상당한 好調로 볼 수 있다.

〈그림〉 월별 국제수지 동향



〈표 2〉 수출입 및 경상수지 동향

(단위: 백만달러)

	'91. 1/4	2/4	7월	8월
통관수출	15,348	18,636	5,622	5,760
(증가율, %)	(10.3)	(17.6)	(2.4)	(8.2)
통관수입	19,764	20,633	7,206	6,542
(증가율, %)	(24.9)	(23.5)	(33.1)	(16.1)
수출입차	-4,416	-1,997	-1,584	-782
무역수지	-3,569	-1,560	-947	-
무역외 및 이전수지	-369	-357	-238	-
경상수지	-3,938	-1,917	-1,185	-

〈표 3〉 8월중 물가동향

(단위: %)

	소 비 자			도 매		
	비 전 월	비전년말	비 1 년전	비 전 월	비전년말	비 1 년전
'90.8월	0.3	8.2	9.5	0.8	4.1	4.7
'91.8월	1.3	8.3	9.5	0.8	2.1	5.4

그런데 문제는 수입증가이다. 금년 1~8월중 수입증가율은 24.3%로서 수출증가율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內需用 수입이 30%를 넘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내수용 수입의 확대는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과열에 주원인이 있겠으나 설비투자 호조에 따른 기계류 수입의 증가와 석유화학업종 증설에 따른 원유도입물량의 증가도 크게 기여하였다.

소비자물가는 상승,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 지속

1/4분기중 매월 평균 1.6%씩

급등하던 소비자물가가 4월 이후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나 8월들어 다시 1.3% 오름으로써 安定基調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8월중 물가오름세가 다시 확대된 것은 7월중순 이후 계속된 긴장마와 여름휴가철의 수송애로, 그리고 8월 하순의 태풍 및 수해의 영향으로 야채류 등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기상여건의 호조와 함께 9월에는 다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수산물의 물가기여도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전체 상승률이 1.3% 중 1.04%를 차지하였고, 도매물가의 경우 전체 상승률 0.8% 중

0.7%를 차지하였다. (<표3> 참조).

한편 주택가격과 집세는 지난 5월이후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 및 전세가격은 모두 8월중 0.4%가 하락하여 금년 8월까지 상승률은 각각 4.3%, 2.9%에 머물러 '90년중 상승률 21.0%, 16.7%에 비해 현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표4> 참조). 이와 같은 안정세는 주택 200만호 추진계획의 초과달성에 따른 주택건설물량의 증가와 債券入札制 실시확대, 주택전산화 등 假需要 억제시책을 강화하여 온 데 기인한다.

산업생산 호조속에 완전고용상태 지속

7월중 산업생산은 內需出荷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8.5%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90년 이후의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업체가 조업정상화로 생산이 늘어나고 식료품·전자제품 등이 추석수요대비와 해외주문증가로 12%대의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생산의 호조로 제조업 평균 稼動率도 79.5%로 6월에 비해 3.8% 높아졌다.

한편 景氣好況이 지속됨에 따라 실업률도 2%대의 완전고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일부 산업체에서는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競爭力 弱化的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늘어나는 취업자가 대부분 건설업·서비스업 등을 선호하고 있는데 반해 제조업 분야는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 주택 및 전세가격 동향

(단위 : %, 비전년말)

	'90년	'91 4월	5월	6월	7월	8월
주택가격	21.0	5.7	5.6	5.1	4.7	4.3
전세가격	16.7	6.8	6.0	4.3	3.3	2.9

<표 5> 산업생산동향

(단위 : %, 전년동기대비)

	'90	'91. 1/4	2/4	6월	7월
산업생산	8.9	8.3	8.1	2.8	8.5
출 하	11.3	10.4	11.5	7.3	9.3
내수	15.3	12.4	13.1	9.1	11.6
수출	-1.3	3.0	5.4	0.6	1.4
재 고	17.4	14.3	12.2	9.0	11.0
제조업 가동률	79.6	80.8	79.3	75.7	79.5

<표 6> 취업동향

(단위 : 천명, %)

	'90		'91	
	6월	7월	6월	7월
취업자	18,686	18,614	19,172	19,063
광공업	4,973	4,978	4,974	4,978
건설업	1,372	1,394	1,609	1,606
서비스	2,629	2,650	2,803	2,810
실업률	2.0	2.2	2.0	2.2

반짝 증시회복에 시중자금사정 개선기미는 안보여

7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던 주식시장은 7월말이후 폭등장세로까지 이어져 종합주가지수가 6월22일 590.6을 底點으로 시작하여 8월6일에는 763.1까지 단숨에 올라갔고 고객預託金도 8,800억원대에서 2조7천억원대로 급증하였다. 주식시장이 이처럼 주식상승세를 보인 것은 證市沈滯의 장기화로 주가가격이 바닥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물가와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國際收支가 개선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들의 實物經濟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8월중순 들어 株價는 소련사태 등 일시적 요인이외에 국제수지 적자폭의 확대와 물가불안 등의 영향으로 통화긴축우려가 확산되면서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8월말에는 종합주가지수 683.1로 마감되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가장 밀접한 경제변수는 국제수지로 분석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국제수지와 株價는 약 80%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면 심리적으로 불안요인을 줄 뿐만 아니라 총투자율이 총저축률을 상회,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보다 더 많은 投資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만큼 자금사정이 어렵게되므로 증시에 惡材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4/4분기이후 국제수지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초의 자본시장 개방 등을 감안하면 향후 證市展望이 그리 어둡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주식시장의 호조로 자금이 제도권으로 크게 流入됨에 따라 시중금리도 7월 중순이후 하향세로 反戰되었으나, 이후 국제수지적자 확대와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로 8월 들어 다시 오름세를 지속하여 9월초에는 會社債 유통수익률이 19%를 넘는 高金利현상이 심화되었다(〈표7〉 참조).

市中金利가 거의 1년 가까이 18%를 넘는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건설·설비 등 投資需要가 높은 데다가 증시침체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1~8월중 기업공개 혹은 有價增資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자금규모를 보면 '89년에는 9조5천억원에 달하던 것이 '90년 2조2천억원, 금년에는 1조4천억원대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資金調達이 제2금융권 및 회사채시장에 의존이 심화되고 있어 시중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금수급상의 불균형 이외에도 구조적 요인으로 물가가 연율 10%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高金利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內需管理과 정책의 한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최대과제는 국제수지와 물가를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민은 과거에도 우리 경제를 괴롭혀 온 것으로서 새로운 것이 없겠으나, 그 원인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특성이 있다. 과거 국제수지적자는 輸出不振이 주요인이었으나 지금은 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문제이고, 과거 물가불안은 오일쇼크와 같이 對外的 요인에 의해 일어났으나 지금은 賃金, 내수과열 등 내부적요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경제정책운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의 대응자세에 있어서도 새로운 차원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직까지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고 이것이 정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내수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하에서는 미시적 정책수단이 가장 有效하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각론에 가서는 通貨緊縮·금리자유화·재정긴축·수입억제·환율정책 등 어느하나 무리없이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제는 확대팽창시키는 일보다 긴축하는 것이 더 어렵다. 긴축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 고통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가 향후 우리 경제의 진로를 좌우할 것이다. 내림

〈표 7〉 시중금리 동향 (유통수익률)

(단위 : %)

	'90. 6월	12월	'91.3월	6월	7월	8월
통안증권	16.1	16.8	16.1	18.5	18.4	18.2
회사채	16.1	18.5	18.5	19.1	18.9	18.8



최근의 국제금리 및 환율동향과 전망

안중조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전세계 금융·자본·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소련 쿠데타가 불발로 끝난 가운데 독일금리를 제외한 미국 등 주요선진국들의 금리는 줄곧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화 가치는 걸프전쟁의 早期終熄 이후 급등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미국경기 회복이 당초 기대보다 遲延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달러당 135~140엔, 1.7~1.75마르크대에서 騰落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일본·영국금리는 하락, 독일금리는 상승

작년 하반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는 國別로 크게 다른 경제여건을 반영해 상이한 움직임을 보였다. 먼저 미국금리 변동을 보면 '89년초부터 7%에서 유지되었던 공정할인율은 경기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작년말 이후 세차례 인하되어 8월말 현재 5.5%를 기록하였다. 聯邦資金金리는 물가상승률 둔화와 금융시장 梗塞 등에 따라 작년 9월말 이래로 2%이상 인하되어 현재는 공정할인율과 비슷한

5.5%대에 머물러 있다. 프라임레이트 역시 상업은행들의 收支惡化로 인해 작년중 10%에서 변동이 없다가 올해 들어서는 8.5%로까지 떨어졌다.

'87년부터 대폭 인상되어온 일본의 공정할인율은 작년 4.5월에 연율 13%를 상회하던 통화량(M₂+CD) 증가율이 금년 상반기중에는 5%를 밑도는 등 과열경기가 진정되고 물가불안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자 7월초 6%에서 5.5%로 인하되었다. 콜금리(익일물)도 일본중앙은행이 민간은행들에 대한 與信管理과 公開市場操作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림으로써 작년말의 8.3%에서 8월말 현재 7.5%로 하락하였다. 또 작년 10월 유가폭등에 의한 채권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8.9%까지 치솟은 바 있는 장기프라임레이트는 민간은행들의 주요 資金調達源인 금융채 발행비용이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감소된 데 힘입어 현재는 7.7%로 운용되고 있다. 지난해에 독일 공정할인율은 동·서독 통일로 비롯된 통화팽창과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6%에서 아무런 조정없이 유지되었으나, 금년에는 임금상승 및 세금인

상과 마르크貨 약세 등으로 물가안정 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되면서 7.5%로까지 인상되었다. 연방은행의 민간은행들에 대한 긴급자금貸出金率인 롬바르트금리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자금수요 증대를 반영, 작년 11월 이후 1.25% 포인트 인상되어 현재는 9.25%에 달하고 있다.

독일금리 상승이 유럽금리의 同伴上昇을 몰고올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영국과 프랑스의 금융완화 노력은 계속되었다. 즉 영국 基準金리는 경기부진과 함께 물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함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에만 4% 포인트 인하되었고, 프랑스 市場介入金리도 금년 3월 소폭 인하조정되었다.

달러화는 강세 지속

미국의 경기침체와 美·日間 단기금리 역전 등의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대폭 하락했던 달러화 가치는 걸프전쟁 이후 오름세로 전환되었다. 달러화의 換率變動을 통화별로 보면 금년 8월말 현재 일본 엔貨와 독일 마르크貨에 대해 달러당 137.5엔, 1.75마르크를 기

록, 달러貨 가치가 폭락하였던 금년 2월 12일의 달러당 127.7엔, 1.45 마르크에 비해서 각각 7.1%, 17.1%나 切上되었다. 또 작년말에 비해서는 현재까지 일본 엔貨에 대해 1.5% 절상되는 데 그쳤으나, 독일 마르크貨·영국 파운드貨·프랑스 프랑貨 등 유럽통화에 대해서는 13% 이상 절상되었고, 實効換率 기준으로는 8월말까지 8.2%의 切上率을 기록하고 있다.

달러貨가 이처럼 주요통화에 대해 강세로 돌아선 것은 미국경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침체국면에서 차츰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폭넓게 형성되어온 데다가, 일본·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이 잇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투자심리가 호전되어 온 때문이다. 더구나 독일경제의 成長鈍化 및 무역수지 惡化展望과 더불어 소련, 동구권의 정치·경제적 불안이 심화됨으로써 달러화의 마르크화에 대한 切上幅은 확대되었고, 결국 이와 같은 마르크화 약세는 마르크화 영향권하에 있는 영국 파운드화·프랑스 프랑화 등 유럽통화제도(EMS)加盟通貨들이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띠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금리는 금년말 이후에나 소폭 상승할 듯

내년말까지 國際金리는 대체로 현재보다 다소 낮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금리는 물가상승세 둔화에 힘입어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변동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금년 하반기까지도 경기회복조짐이 可視化되지 않는다면 주요금리는 약 0.25~0.5% 포인트 추가인하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美聯邦準備銀行(FRB)의 금융정책 방향이 안정 성장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미국금리는 소폭이나마 다시 오를 것으로 분석되며, 내년말에 연방자금금리를 비롯한 주요 미국금리와 리보레이트(3개월물)는 금년말 대비 약 0.5% 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일본 공정할인율은 빠르면 금년 말 이전에 다시 인하될 공산이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최근의 證市沈滯와 민간은행들의 대출기준 강화가 설비투자위축 등 實物經濟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총재도 成長減速, 物價不安 완화에 따라 금리가 점차적으로 인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할인율은 내년말에 약 4.75~5%로, 콜금리(익일물)는 6.75~7%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高金利基調는 내년중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마르크貨약세가 계속될 경우 롬바르트金리는 금년말을 전후해 약 0.25~0.5% 포인트 인상될 가능성마저 있다. 하지만 구동독지역에서의 雇傭事情 惡化와 함께 물가상승률, 통화량(M₃) 증가율 등이 연방은행의 抑制目標 근처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 내년 하반기중에는 독일금리가 지난 '87년 이후 처음으로 引下調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국 기준금리는 영국중앙은행이 물가하락속도에 맞춰 금융정책을 조절해 나갈 방침임을 밝히고 있고, 또 總選에 앞서 金利引下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독일의 金融緊縮基調 지속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폭은 금년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프랑스 市場介入金利는 내년말까지 약 0.25~0.5% 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독일 롬바르트금리가 한차례 더 인상될 경우에는 金利引下 시기가 금년말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달러화 強勢基調는 내년중에도 이어질 듯

내년중에도 달러貨의 일본 엔貨 등 대부분의 통화에 대한 강세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는 첫째, 미국경제가 작년 하반기 이후의 金利引下와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차츰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본 및 독일경제는 高金利의 여파로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을 드러내고 있고 둘째, 미국물가의 안정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의 금융완화에 의해 미국과 여타 선진국들간의 실질금리 격차가 다시 달러화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장기적인 換率變動 推移를 비교적 잘 반영해 온 購買力平價(PPP) 환율로 보더라도 기준시점이 '86년(G7의 플라자합의로 달러화 가치 폭락) 이후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달러화의 均衡換率이 달러당 160~200엔, 1.8~2.0마르크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달러화 회복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舊東獨地域에서의 소비지출 억제와 貯蓄率 提高 등을 위해서도 금융긴축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으나, 外換投資者들은 독일경제의 성장둔화 및 무역수지 악화전망 등 마르크貨 약세요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마르크貨와 마르크貨에 실질적으로 連動되어 있는 다른

유럽통화제도(EMS) 加盟通貨들의 달러화에 대한 회복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물론 달러화환율이 달러당 140엔, 1.8마르크를 상회할 경우에는 일본과 독일 주도로 달러화 약세유도를 위한 G7시장개입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주요 國際外換市場에서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이 5천억~7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G7의 1일 최대 시장개입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 이어서 심리적인 영향 이외의 개입 효과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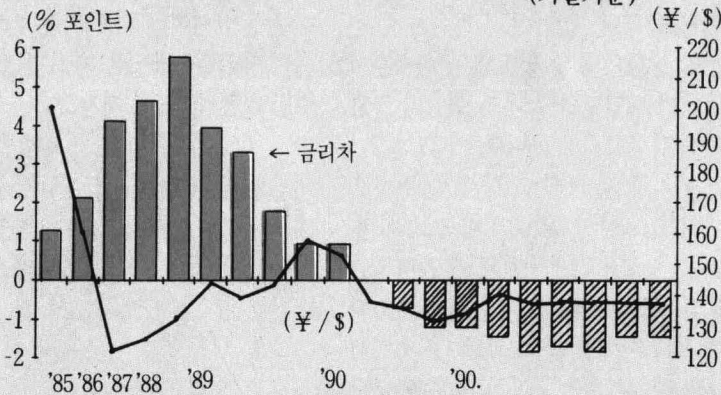
이로써 달러화 환율은 내년중 대략 달러당 140~145엔, 1.7~1.8마르크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며, 日本金利 인하, 소련 및 동구권의 정세악화 등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40엔대 후반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건실한 성장세 지속과 더불어 무역흑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달러화의 엔화에 대한 切上幅은 비교적 작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말에는 달러당 140엔대에 머무를 전망이다.

〈표〉 주요국 금리변동 추이

		'89	'90				'91			
			1/4	2/4	3/4	4/4	2월	4월	6월	8월
미	공정할인율	7.00	7.00	7.00	7.00	6.50	6.00	5.50	5.50	5.50
	연방자금금리	8.45	8.28	8.29	8.20	7.25	6.25	6.00	6.00	5.50
	프라임레이트	10.50	10.00	10.00	10.00	10.00	9.00	9.00	8.50	8.50
국	리보레이트 (3개월물)	8.38	8.50	8.31	8.31	7.56	6.94	6.19	6.01	5.81
	공정할인율	4.75	5.25	5.25	6.00	6.00	6.00	6.00	6.00	5.50
본	장기프라임레이트	6.50	7.50	7.60	8.50	8.10	7.80	7.70	7.70	7.70
	공정할인율	6.00	6.00	6.00	6.00	6.00	6.50	6.50	6.50	7.50
독	롬바르트금리	8.00	8.00	8.00	8.00	8.50	9.00	9.00	9.00	9.25
	기준금리	15.00	15.00	15.00	15.00	14.00	13.50	12.00	11.50	11.00

자료 : AP-DJ

〈그림〉 유로커런시 금리 및 미달러화의 대엔화환율 변동추이 (기말기준)



자료 : AP-DJ

원화의 對엔貨 換率은 안정세 예상

한편 한국 원貨의 對日本 엔화환율은 원화의 對美 달러환율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달러당 730~740원대에서 변동할 것으로 가정해 보면 약 500~530원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 원화의 독일 마르크貨, 영국 파운드貨 등 유럽통화들에 대한 切上趨勢는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이들 통화들에 대한 강세로 인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환리스크(risk) 관리 및 가격경쟁력 강화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외자도입시에는 해당통화의 금리·환율전망과 국내·외에서의 자금수급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는 한편, 金利 下落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자지급 등을 고정금리화해서 변동금리조건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문]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야

방민준

한국일보 기자 / 상공부

취 미삼아 운동을 하는 아마츄어 선수들은 승패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재미를 느끼면 그만이다. 그러나 프로 선수에게는 운동이 곧 밥줄이라 취미 삼아, 재미로 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勝과 敗는 곧 生存의 갈림길이나 다를 바 없다.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들린다. 실제로 여러 가지 불길한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9년부터 나타난 수입증가율

의 수출증가율 상회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90년부터는 무역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다. 올들어서 8월말 현재 무역수지 적자폭은 이미 90억달러 선에 육박해 무역적자가 고질병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도 저하된 근로분위기는 살아날 기색이 없고, 과소비에 바탕을 둔 내수경기는 과열양상을 보여 물가불안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관리는 물론 기업인들까지 하반기에는 수출이 되살아나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네마리 龍에서 탈락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죽을 쫓을 때 외국언론들은 우리 경제를 두고 '아시아의 龍이 지렁이로 추락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는데, 이 같은 비아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 대부분이 위기의식을 갖게끔 현실이 돌아가고 있다.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은 위기를 타개할 대책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가 너무 안이하게 비치고 있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시장에서 외면당하고 대신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정부관련부처의 대응태도를 보면 더이상 손을 쓸 수 없음을 자인한 듯 무력감까지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이 짙게 깔려 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다.

경제관료는 운동선수로 치면 프로다. 승리에 도전하려 하지 않는 선수는 더이상 프로일 자격이 없다. 경제관료가 경제분야의 프로라면 프로根性을 보여야 한다. 요즘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나라경제가 이 모양이 된 데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기가 나서서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의지도 안 보인다.

물론 타할 대상은 많을 것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 권력욕에 눈이 먼 정치인, 철 모르고(?) 데모나 하는 학생들, 일은 제대로 안고 돈만 많이 받으려는 근로자들, 기술개발에 바탕을 둔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손쉽게 돈을 벌겠다는 일부기업인들, 또 있다. 求心點을 찾을 수 없는 정부의 경제정책추진구조이다.

상공부 관리는 경제기획원·재무부 등과 함께 국가경제의 프로페셔널이다. 프로라면 이 같은 악조건을 타개할 실력과 근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경제에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이때에 상공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위기의식을 최대한 활용, 대세를 자기쪽으로 기울게 하는 것이다. '차차 좋아질 것이다'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등 대범한 척하다간 정말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 경제위기의식을 확산시키는 일이 왜 정부를 궁지에 몰다고만 생각하는가. 위기의식을 잘만 활용하면 政爭에 매달린 정치인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각정부부처도 한곳에 힘을 모을 수가 있다. 기업은 기술개발에 진력하게,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몰두하게, 일반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수세에 몰렸을 때 역공으로 '뒤집기'를 시도하는 프로근성을 商工部에 기대해 본다. 나라경제



철도의 是와 非를 말하자

임 철

매일경제신문 기자 / 교통부

驛前. 이 단어가 풍기는 느낌은 무궁하다. '낮선 곳'이나 '그리운 고향'으로 떠난다는 전혀 이질적인 감정이 교차하고, '새로움'과 '낯은 것'이驛前에서 만난다. 번듯한 고층건물이驛을 휘감아 돌며 포진하고 있는 듯 하면서도 아바위꾼들이 서성대는 풍경도 옛모습 그대로이다. 서울역과 맞대고 있는 철도청에서도 '是'와 '非'

의 기묘한 만남은 자주 목격된다. 철도청의 현재像과 미래의 모습을 대조해보면 기묘함은 더욱 증폭된다.

철도청은 公社로의 전환이 확정돼 있다. 이미 관련법규까지 마련돼 있는 상태이다. 물론 公社로 체제가 바뀐다고 철도청이 民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절반쯤은 여전히 官의 모습이 남겨진다. 官의 모습은 공익성과 대중성을 강조하고 이윤추구를 제약한다. 民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결부돼 이상향을 그리지만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公社化로 가는 철도청의 길이 險路이기에 앞서 현재 철도청이 안고 있는 숙제는 차라리 숙명적이다.

한동안 철도는 한반도의 간선도로망을 지배했지만 철도의 영광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끝났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는 도로에 집중됐고, 철도에 돌아온 몫은 적었다. 이는 숫자가 소상히 말해준다. '80년부터 '89년까지 10년간 도로에 투자한 예산은 '89년에 설립된 도로건설 특별회계까지 합쳐 8조 8,070억원, 철도와 지하철·공항 및 항만을 합쳐야 5조 8,870억원이 같은 기간 동안 투자된 액수이니 도로의 우선순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철도분야 투자액은 2조원 정도. 이같이 총애를 받은 도로이지만 자동차 증가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추석과 휴가철에는 늘상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승객과 화물은 다시 철도로 몰렸지만 철도의 수용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철도에 대한 투자부진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서둘러 철도에 대한 집중투자를 공약했다. 京釜고속전철과 湖南 및 東西고속전철이 언론에 집중 보도됐고, 고속전철 완공전에는 열차를 長大化시켜 승객증가를 감당하겠다는 복안도 발표됐다. 수원-천안간 전철과

수도권전철망의 보완대책으로 교통난에 대한 국민들의 짜증을 덜려고 애쓴 흔적도 보인다.

국토개발계획에서도 앞으로의 교통軸은 도로보다는 철도를 중심으로 짜겠다는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이 그 실행과정에서 국민들의 시선에 차츰 다르게 비쳐진다. 장기계획에서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가 철도부문을 앞서고 있는 점은 논의로 치더라도 우선 내년 예산부터 도로가 철도를 앞선다. 철도청은 열차장대화를 위하여 3,190억원, 그리고 수원-천안간 북복선전철을 위하여 40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으나 예산당국에서 잠정적으로 조정해 놓은 '92년도 예산을 보면, 2개사업을 모두 합쳐도 500억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이고 보니 철도의 수송능력 확충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역을 근대화시키겠다는 民資驛舍 건립도 지역이기주의와 재벌특혜시비로 주춤해진 상태이다. 철도에 대한 정부의 각종공약과 철도청의 자구책, 公社化로 대표되는 경영합리화계획이 과연 성공을 거둘 것인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철도청이 공사화 이전에 해결해야 할 1조 3천억원의 對政府 부채 등 철도의 앞길에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철도 스스로 이를 해결할 능력은 없고 관련되는 정부당국에서도 누구나 이야기하기를 피하는 것 같다. 당면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량·장거리 수송에 유리한 철도중심의 수송체계를 세우고 이에 도로·항만·지하철 등을 상호 보완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제부터라도 철도가 기적소리를 크게 낼 수 있도록 是와 非를 가림으로써 교통정책의 근본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나라경제



이희범¹⁾
상공부 서기관

1) 필자는 1988년 4월부터 1991년 7월까지 워싱턴소재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상무관으로 근무하였음

美國의 통상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美國은 제2차世界大戰 이후 '60년대까지만 해도 전세계의 GNP 및 무역규모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계속해서 연간 1천억달러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86년부터는 세계 최대 債權國에서 최대 債務國으로 전락하였고, 이에 따라 對外通商政策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강경일변도의 미국 통상정책은 '88년도에 절정을 이루었고 소위 슈퍼(Super)와 스페셜(Special) 301이라는 형태로 綜合通商法에 반영되었다. '90년 이후 新國際規範 제정을 위한 UR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기 위해 다소 진정국면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가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 한 미국의 통상정책은 強性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 수출상품의 3분의 1을 팔고 있고 '89년까지만 해도 연간 50억달러 가까운 흑자를 유지했던 미국시장을 잘 관리하고 미국의 통상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安保側面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貿易動向

미국은 '68년(국제수지기준으로는 '71년) 첫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70년대 두차례의 오일쇼크를 맞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71년 닉슨大統領의 新經濟政策에 이어 '73년 스미소니언(Smithsonian)체제를 통해 金兌換을 정지하는 등 재정·금융정책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79년 제2차 오일쇼크와 카터行政府의 방만한 경제정책은 '80년대초 두자리수의 물가상승률을 유산으로 남겼다. 따라서 레이진行政府의 최대과제는 대내균형의 달성에

있었고, 이를 위해 이자율 인상을 통한 인플레이제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公開金融市場에서 이자율 인상의 부수적 효과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해외자본유입으로 資本收支의 흑자와 外換保有額 증가를 통해 달러화의 切上을 가져왔고 이는 수출억제와 수입증가의 공식에 따라 무역수지의 악화로 연결되었다.

즉,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액은 '82년 384억달러에서 '84년 1,224억달러로 드디어 1천억달러대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86년에는 기록적인 1,551억달러에 이르렀다(국제수지기준). 對內均衡의 대가는 엄청난 對外不均衡의 희생위에 이루어지게 됨을 뒤늦게 안 美行政府는 '85년 9월 '플라자(Plaza)선언'으로 달러貨를 切下하기 시작했으나, 그간의 모순된 재정·금융정책은 이미 제조업을 空洞化로 이끌었고 외양간을 나간 소는 찾을 길이 없었다.

<표 1> 미국의 연도별 무역적자

(단위 : 억달러)

	'82	'84	'86	'88	'90
금 액	384	1,224	1,551	1,185	1,017

미국의 貿易赤字 개선노력

'80년대 후반부터 미국 언론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財政 및 貿易 적자로 이 쌍둥이 적자는 마침내 정치적 이슈가 되었고 오늘날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난제로 대두되었다. '88년 이후 쌍둥이 적자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百家爭鳴을 이루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는 서서히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고, 무역적자도 금년부터는 1천억달러대 이하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적자 시정노력 중 가장 중요한 시책은 前述한 달러貨의平價切下 노력이다. '플라자 協定' 이후 약2년간 美달러貨는 일본의 엔貨와 독일의 마르크貨에 대비하여 각각 65% 및 60% 가까이 切下되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산업의 空洞化와 日本의 원가절감노력으로 미국시장에서 일본제품을 압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단적인 예로 지난 2~3년간 일본 혼다의 '아코드(Accord)'는 미국에서 단일 차종으로는 연속 수위의 판매고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미국내 자동차 3사는 10여개의 공장을 폐쇄시켰다.

두번째 노력은 財政赤字의 축소를 통한 무역수지의 개선이다. 미국은 당초 Gramm-Rudman法을 통해 '91년까지 균형예산을 이루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2차에 걸쳐 목표 연도를 연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말에는 부시大統領이 '내 말을 믿어주오(Read My Lips)'라는 選舉公約을 깨면서까지 향후 5년간 5천억달러의 財政赤字 절감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늘어나는 福祉需要로 '90년대 중반까지 균형예산이 달성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세번째 정책수단은 美産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美행정부는 민간업계로 구성된 경쟁력향상대책위원회 이외에 '88년부터 副統領을 위원장으로 하고 商務長官 등 관계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美議會도 게파르트 民主黨 원내총무를 위원장으로 경쟁력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밖에도 미의회는 철강·섬유 등 주요 업종별로 특별위원회(Caucus)를 구성하여 산업별 경쟁력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美의회는 그밖에도 경쟁력향상을 위해 商務部를 商務·技術部로 개편하거나 일본의 通産省과 같이 通商·産業部로 개편하는 案을 검토하는 등 경쟁력향상을 위한 여론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네번째의 노력은 보다 현실적이고 절박한 수단이다. 미국은 농산물을 포함하여 항공기·철강·조선·전자 등 주요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 支援施策을 축소하고 있으나, EC 및 여타 開途國은 산업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시정키 위해 多者間協商을 추진하는 것이다. UR협상 외에 鐵鋼·造船協商도 그 예에 해당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등한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을 이루기 위한 것이나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엄청난 산업 정책의 변경이므로 현재까지 어느 하나도 만족스런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美行政府의 이 같은 소극적인 문제 시정노력에 불만을 품은 美議會는 '88년 GATT 위반의 시비 속에서도 소위 수퍼 및 스페셜 301條를 제정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對美 수출국들에게 공포의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수퍼 및 스페셜 301條

背景 및 기본구상

'88년 美大統領 및 의원 선거의 주요 쟁점은 천문학적 숫자로 늘고 있는 미국의 貿易赤字 해소방안이었으며, 주요 大統領 후보들은 韓國을 포함한 주요 對美 輸出國들이 시장개방을 지연시키고 미국 상품을 자국상품과 차별대우하는 것이 미국의 대외 수출에 가장 큰 제약요인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민주당의 게파르트 후보는 한국의 자동차 수입규제를 예로 들면서 나라별로 강제적인 무역적자 감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무역적자 감축방안에 관한 百家爭鳴이 일고 있을 때 上院의 돌 공화당 원내총무·버어드 민주당 원내총무·덴포오스 상원 무역소위원회장 및 리글 상원 금융위원장은 별도 회의를 통해 하룻밤 사이에 다음과 같은 3단계 무역장벽 제거방안을 창안하였다.

첫째, 각 무역장벽별로 그 장벽이 해소될 경우 국별로 수출증대 예상치를 나타내는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 NTE보고서)를 매년 발간한다.

둘째,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별로 주요 貿易不公正慣行(Priority Foreign Practices ; PFP)을 찾아낸다.

셋째, 이 PFP가 많은 나라를 優先協商對象國(Priority Foreign Countries ; PFC)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복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었다.

협상과정

미국의 무역적자 중 40%는 對日交易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수퍼 301 법안을 제정할 때 議會에서의 1차적인 대상은 물론 일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분위기는 '89년 2월까지만 해도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단연코 優先協商對象國으로 지정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美國貿易代表部(USTR)가 美업체·단체로부터 미국의 무역대상국 중 不公正한 국가 및 불공정한 행위를 접수한 바, 총 39건의 의견서 중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20건이 접수되어 단연 수위를 기록했다.

한편, 미국내 200여 주요기업 대표로 구성된 美通商政策諮問委員會(ACTN)는 일본과는 업계간 산업협력논의가 진행중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본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1년간 보류해 줄 것을 美行政府에 공식 요청하였다. 이는 물론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일본의 로비 활동의 결과였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볼 때 '89년 5월 17일 제6차 회담에서 한국을 優先協商對象國에서 제외시키는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智慧가 동원되었으며 숨가쁜 순간의 연속이었다. 당시 우리는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되었다는 일부 批判論도 있었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開放日程 속에 가장 적은 희생으로 타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韓國은 워싱턴의 여론과는 정반대의 協商을 성공시킴으로써 여타 수출국과는 달리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국가의 이미지를 심게 된 것이다.

문제점과 전망

수퍼 및 스페셜 301은 당초부터 GATT위반 등 여러 시비 속에 출발되었으며 國際規範上 그 정당성도 또한 찾기 어렵다. 2년간에 걸쳐 不公正貿易國으로 지정된 바

미국 경제가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 한 미국의 통상정책은 強性を 유지할 것이다. 우리 수출상품의 3분의 1을 팔고 있고 '89년까지만 해도 연간 50억달러 가까운 흑자를 유지했던 미국시장을 잘 관리하고 미국의 통상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安保側面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있는 일본의 駐美經濟公使는 미국의 수퍼 301을 권투시합 시 링 위에서 두 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갑자기 한 선수가 심판의 자격으로 상대선수를 불공정 선수로 몰아붙이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겠다고 몰아세우는 데 비유했다. 그러나 美國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개방한 만큼 상대국도 동일한 수준의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시장도 그만큼 폐쇄하겠다는 相互主義에 기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수퍼 301은 결국 2년의 時限附 기간을 넘기고 일본과의 構造調整(SII)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사실상 종료되었다. 다만, 스페셜 301은 知的所有權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監視對象國(watch list)으로 남아있고 통신분야에서도 협상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美議會에서는 지금도 수퍼 301보다 더 강한 法案을 만들자는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고, UR협상이 타결되건 실패하건 간에 내년도 미국 선거에서 다시 통상문제가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항상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시장의 重要성과 한·미무역

미국의 通商政策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對美 무역확대는 우리 무역정책의 要害를 수 없는 핵심분야이다. 실제로 '86년에는 40%의 우리 수출품이 미국시장에서 팔렸고 '87년에는 96억달러의 對美 貿易黑字를 이룩한 것이 우리 무역흑자의 주요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최근 對美 貿易依存度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어도 아직도 우리 수출의 3분의 1은 미국시장에 팔리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 중 컴퓨터는 55%, 자동차 및 신발류는 60%, 완구류는 45% 등 우리의 수출 주종품은 미국을 주요 據點으로 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미국 언론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財政 및 貿易 적자로 이 쌍둥이 적자는 마침내 정치적 이슈가 되었고 오늘날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난제로 대두되었다. '88년 이후 쌍둥이 적자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들이 百家爭鳴을 이루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는 서서히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다.

더구나 '65년 國交正常化 이후 만성적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對日貿易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 흑자를 내지 않는 한 전체적으로 흑자 또는 收支均衡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아직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되어 있고 世界貿易의 5분의 1을 흡수하고 있는 美國市場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무역정책의 근본이요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대응방안

韓·美間 통상관계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양국간 주요 관심사는 '60년~'70년대에 미국의 對韓 기술 원조와 借款 확대, GSP受惠 및 섬유쿼터확대 등 미국의 일방적 지원에서부터 '80년대에는 산업 및 기술협력의 확대로 상호 보완적 차원으로 확대·발전되어 왔다. 통상 이슈 또한 '70년대의 개별상품에 대한 輸入規制에서 출발하여 '80년대초에는 工產品 중심의 시장개방으로 발전되었고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농산물·서비스·금융 및 자본 시장 개방 등으로 그 대상분야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知的所有權 보호와 標準化 및 기술장벽 제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개별기업간 상업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국가간의 무역에서 항상 균형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나 그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 이를 시정기 위한 通商當局의 노력은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흑자는 애국심 외에 모든 사안이 통상현안의 대상이 된다고까지 말한다. 多元化된 통상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록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매우 명백하다.

첫째로 한·미간 무역은 장기적으로 균형이 이룩되도록 상호 이해와 협력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聯邦政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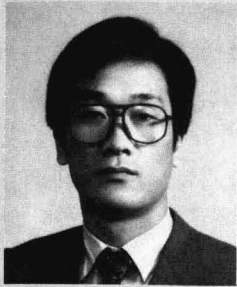
나 각 州別로 정부 또는 민간업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력사업을 보다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양국간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산업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USX와 우리의 포항제철이 합작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한 UPI社가 생산한 冷鉛鋼板을 금년초 처음으로 제3국인 일본에 수출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미국의 기술과 한국의 기능 또는 미국의 자원과 한국의 재능이 합쳐진다면 몇배의 乘數效果를 통해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이러한 분야는 무수히 많다고 본다.

셋째로 미국은 UR 등 다자간협정의 추진과 병행하여 北美 自由貿易地帶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태평양연안 국가간 무역이 大西洋國家와의 무역을 훨씬 능가한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과 東·亞太地域間 경제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太平洋時代'의 개막은 모든 참여 국가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넷째로 한·미양국은 보다 실리추구의 방향에서 통상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간무역도 개인기업간 거래와 같이 상호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양보를 통해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미국도 301條와 같은 일방적이고 위협적인 수단보다는 양국업계의 협력을 통한 실리추구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도 개방정책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최대시장인 미국경제의 안정과 번영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한다는 인식 아래 미국이 지속적으로 우리 상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인생활과 마찬가지로 국가간 무역에서도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 등 先進國의 값진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경제발전의 과정은 농업에서 製造業으로, 이것은 다시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으나 제조업이 없이는 換率調整 등 巨視的 경제정책만으로 무역수지 흑자실현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았다. 궁극적인 복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할 터전을 넓히고 융성하게 함으로써 세계로 뻗는 한국·한국기업·한국인을 만드는 것이다. 농림



김영동

경제기획원 자금계획과 사무관

경상수지적자 70억달러, 크게 우려할 수준인가

걸프전 終戰 이후 지난 3월부터 매월 개선 추세를 보이던 經常收支赤字가 7월에 이례적으로 11억8천만달러로 확대됨에 따라 1~7월간 경상수지적자 累計는 70억4천만 달러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적자규모를 두고 우리 경제의 對外交易 '손익계산서'인 국제수지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일부 성급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外債亡國論이 제기되던 6~7년전의 경제상황을 떠올리면서 '史上最大'라는 용어가 주는 상징성에 보다 강한 위기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사상최대'라는 단어가 주는 위력에 압도당하기보다는 '경상수지적자 70억달러'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 보다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선 경상수지적자 70억달러의 의미를 살펴보기 이전에 국제수지와 관련된 몇가지 概念들을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경제를 전공으로 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은 매월초에 關稅廳이 발표하는 무역수지규모와 월말경에 韓國銀行이 발표하는 무역수지적자 규모간에 큰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적잖은 혼선과 자칫 오해를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선은 일부 매스컴 보드나 심지어는 경제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게서조차도 왕왕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각 가정의 家計簿를 쓰듯 한 나라 경제가 대외거래에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규모를 항목별로 적어 놓은 것이 國際收支表인데 이 중 상품수출대금과 상품수입대금만을 비교해 놓은 것이 무역수지이고, 건설·운임·보험·관광 등 상품 이외의 분야에서의 수지를 적어놓은 것이

貿易外收支이며, 교포송금이나 대외원조와 같이 거래없이 거저 주고 받는 돈의 입출금을 따져 계산해 놓은 것이 移轉收支이다. 이 같은 무역수지·무역외수지·이전수지를 합쳐 經常收支라 부른다.

貿易收支에 대한 概念上的 혼선

그런데 개념상의 혼선이 있는 부분은 상품거래의 수지를 정리한 '무역수지'인데, 그 이유는 무역수지에는 通關基準 貿易收支와 國際收支基準 貿易收支라는 두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통관기준 무역수지란 상품이 우리나라 국경을 통관하는 시점에서 통관수속을 마친 수출입금액을 단순 집계한 것으로서 수출은 물건값만 반영(FOB 기준이라고 함)하고 있는 반면 輸入은 물건값과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상품가격(CIF 기준이라고 함)을 반영함으로써 운임·보험료만큼 수입은 과대계상된다. 또한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상품을 일단 수출한 후 반품되어 再輸入한 경우라든지, 再輸出을 하기 위하여 수입한 상품의 경우에도 수입에 잡거나, 선박이 통관만 되고 수입업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통계에 잡는 등 실제 그 상품의 소유권 변동과는 관계없이 일단 국경을 넘어 통관만 되면 수출입 통계에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통계의 速報性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한 나라의 對外 債權·債務關係를 정확히 나타내주지 못한다. 따라서 통관된 수출입 상품 중 소유권이전 여부를 가려서 이를

조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제수지 기준 무역수지이며, 국가경제정책이나 국민경제 분석에 널리 이용되는 指標은 국제수지 기준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統計作成基準上的 차이로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국제수지기준 무역수지보다 크게 나타나며 금년 1~7월 기준으로 볼 때 前者는 80억달러, 後者는 61억달러를 기록하여 약20억달러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국제수지기준 무역수지에 貿易外收支 및 移轉收支를 더하면 경상수지가 되는데, 7월말까지 경상수지 적자는 70억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경상수지적자 70억달러의 의미

그러면 금년들어 확대된 '경상수지적자 70억달러'가 갖는 경제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번째 의미는 적자규모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나, 아니면 우리 경제규모에 비추어 위험한 수준이나의 '국제수지 均衡論爭'과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올해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예상보다 늘어나고 있다거나 사상최대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현재의 국제수지 규모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근거한 視角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숫자의 魔力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따져 본다면 금년도 경상수지 적자규모 그 자체만으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적자규모 자체로는 크게 우려할 수준 못돼

家計나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적자나 흑자의 규모는 커지게 마련이듯이 國民總生産이나 교역규모가 커지면 흑자나 적자의 규모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국민총생산 등 경제규모에 대비한 경상수지적자의 비중인데(통상 GNP의 2%, 교역규모의 5% 수준 이내를 균형기조로 판단하고 있음), 금년도 경상수지적자가 정부가 당초 전망한 30억달러를 상회하더라도 그 규모가 GNP의 2% 수준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닌 것이다. 가령 월봉급 100만원 소득자가 한달간의 가계부를 결산한 결과 지출이 수입을 2만원 정도 초과했다고 해서 그 가계를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참고로 '80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의 對 GNP 비중을 보면 제2차 석유파동의 여파와 10.26사태후 정치·사회

중요한 것은 국민총생산 등 경제규모에 대비한 경상수지적자의 비중인데(통상 GNP의 2%, 교역규모의 5% 수준 이내를 균형기조로 판단하고 있음), 금년도 경상수지적자가 정부가 당초 전망한 30억달러를 상회하더라도 그 규모가 GNP의 2% 수준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닌 것이다.

불안정이 겹쳐 5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80년에는 -8.7%에 이르렀으며, 한편 올림픽이 치러진 '88년에는 소위 3低의 영향으로 큰 폭의 흑자를 냄으로써 경상수지 / GNP 비율이 플러스 8.2%에 이르렀다. '80년의 경우와 같이 경상수지가 균형기조를 벗어나 과도한 적자를 내는 것은 外債累增 등으로 경제운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반감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으나, '88년과 같이 과도한 경상수지흑자도 通商摩擦을 야기하고 海外部門의 통화팽창이 부동산투기로 연결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경상수지는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완전균형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실제로 실천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통상 $\pm 2\%$ 수준을 均衡基調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시적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혼재한 결과

두번째 의미는 적자요인이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構造的인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만약 현재의 국제수지 적자가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앞으로 국제수지가 均衡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고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면 우리 경제는 당분간 국제수지 적자가 불가피하여 과거와 같은 만성적인 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모든 사물이나 현상을 일도양단식으로 결론내리기 어렵듯이 최근의 국제수지 적자도 어느 한 요인으로 돌리기는 어려우나 상반기중 적자요인을 분석해 본 바로는 '一時的 要因이 강하게 나타난 가운데 構造的 要因이 혼재'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대답이 될 것이다.

금년 상반기까지 경상수지적자 70억달러 중 연초 국제

국제수지의 구조적 개선 추진 필요

세번째 '경상수지적자 70억달러'가 주는 의미(여기서는 教訓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할 것임)는 우리 경제에 자리 잡고 있는 일부 구조적 적자요인을 구조적 흑자요인으로 하루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소비자가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로서는 금년들어 무역적자폭이 커진 것이 '3低現象' 때의 黑字管理 실패와 內需景氣의 과열에 큰 원인이 있는만큼, 당장의 무역수지를 줄이려는 응급처방보다는 총수요관리 등을 통한 수입수요안정, 수출경쟁력 강화시책의 꾸준한 추진 등 중·장기적 측면에서 정책의 줄기를 바로잡아 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4일 정부가 마련한 국제수지대책과 관련하여 그 대응방안이 미흡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對症的이고 개별적인 대책은 대외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總需要管理의 철저, 건설경기진정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에너지 절약과 이용합리화의 추진, 기계국산화 촉진의 애로요인 타개 등 중장기적 대책에 중점을 둔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 또한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국제수지 관리요구나 보도경쟁 분위기에 젖어 정부의 정책방향감각을 誤導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기업·가계의 노력 긴요

기업은 두가지 측면에서 국제수지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최근 石油化學業種의 과잉투자가 자본재 수입의 급증요인으로 직결되고, 나프타 등 석유류제품 수입급증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간의 경쟁에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도모하기 보다는 선별투자로 輸入의 적정관리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의 이익추구를 위해 수입에 나서기보다는 힘겹더라도 외제상품에 맞설 수 있는 품질경쟁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경제가 명실공히 수입이 구조적으로 안정되는 선진경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과 合理的 소비가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소비재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의 국제수지 적자도

어느 한 요인으로 돌리기는 어려우나
상반기중 적자요인을 분석해 본 바로는
'一時的 要因이 강하게 나타난 가운데
構造的 要因이 존재'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대답이 될 것이다.

9.7%에 불과하고 품목별로도 바나나 등 일부 수입개방품목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절대금액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외국상품이 품질과 가격면에서 우리 상품보다 낫다면 단지 애국심에 호소하여 우리 상품을 쓰도록 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개방화 과정에서 결코 용인될 수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전반적인 消費過熱現象이 직접적인 소비재 수입급증에 주는 영향은 물론이려니와 內需用 原資材와 자본재의 수입에 주는 간접적 영향이 오히려 국제수지적자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다. 금년 1~7월중 수출용 수입이 15% 늘어난 반면 내수용 수입이 30.8%나 늘어나 내수용 수입이 77억달러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민이 소비하는 모든 제품 속에는 에너지·원재료 및 자본재의 형태로 수입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産業關聯分析表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100원을 소비할 때 그 중 29원은 수입품 구입에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소비가 국제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통계로써 입증해 주고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올해의 경상수지적자가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전망이나 실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構造'와 '趨勢'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그에 따른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일이라 하겠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의 경상수지 규모가 70억달러에 이르렀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앞의 현상에 조급해 하기보다는 정부·기업·가계 등 각 經濟主體가 소득 6천달러에 걸맞는 경제정책·경영행태·소비패턴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구조적으로 덜 쓰고, 더 많이 생산하는 경제구조를 이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본지



김남석
과학기술처 인력정책관실 사무관

‘과학꿈나무’ 육성과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확보

우리는 '80년대를 맞으면서부터 '구직난 속의 구인난' 또는 '高學歷 속의 실업난'이라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60~'70년대부터 구축하기 시작한 과학기술의 발전기반과 '80년대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각계의 기술개발 활동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전반이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산업구조와 사회 각기능이 연계된 조화로운 균형발전은 이룩하지 못했던 것이다.

교육의 근본기능이 인간다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국가사회의 균형발전을 주도할 인재의 양성과 그 시대가 요구하는 産業役軍을 길러내는 기능이 함께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을 소홀히 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구직난 속의 구인난과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 창조적 기술개발

우리는 빠르고 폭넓은 세기적 변화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終焉과 더불어 세계질서도 변하고 국가나 산업의 생존수단마저도 변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정보의 교류가 동시다발화되고 창의와 지식의 가치가 앞서서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요, 이제는 정치의 우방은 있어도 기술의 우방은 없으며, 돈이 있어도 핵심기술은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은 국제적으로 개방하되 기술만은 '知的所有權'으로 독점하겠다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선진국들 속셈에서 드러났듯이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 기술을 창조해야 한다.

오늘날은 기술주권시대, 技術霸權時代이며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군사력·경제력·외교력도 실속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경제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산업으로 移行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이 당면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필수불가결의 요소라 할 것이다.

탐구학습의 중요성과 열악한 과학교육 환경개선

한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은 몇사람의 과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온국민들 속에 과학하는 마음이 뿌리내려야 한다. 이러한 과학적 素養과 과학하는 풍토조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릴적부터 과학에 대한 흥미와 소질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길러주는 탐구교육과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국제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고 21세기에 과학기술 선진 7개국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미래의 꿈나무인 과학도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국제과학학력평가연구회 보고서('89)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의 실력을 세계각국과 비교할 때 국민학생은 上位, 중학생은 中位, 고등학생은 下位圈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결과는, 한국인이 근본적으로는 우수한데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능력이 저하됨으로써 사회구조와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일찍이 고려자기·금속활자의 발명 등

세계적 수준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겨 과학적 소질이 우수한 민족임을 입증한 바 있다.

오늘날 과학발달의 저해요인이 儒敎的 因習인 '土農工商'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입시교육에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들 수 있다.

얼마전 한 세미나에서 일선 과학교사들이 '19세기의 환경과 시설 속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고 자조적 푸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과학교육 환경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원인을 살펴보면, 실험실 습공간과 기자재의 부족·과학교사 경시풍조·과학담당교사의 자질문제 등 여러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다.

탐구학습 여건

초·중등학교의 과학실험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실습실, 둘째 실습기자재, 셋째 실습재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물론 지도교사나 교육과정 등 기타 여건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각급학교의 기자재 및 시설현황에 대한 조사자료를 보면 <표 1>과 같다. 그러나 본 조사표는 教育部가 '64년도에

<표 1> 과학실험실습 기자재 보유현황

구분	학교수	실험 실습 기자재(천점)			소요 금액(억원)		
		기준	보유	비율	기준액	확보액	부족액
국민학교	6,335	15,128 (115중)	11,500	76%	1,112.28	647.3 (58%)	464.98
중학교	2,479	7,499 (172중)	5,599	74.7%	691.63	388.33 (56%)	303.3
고등학교	1,693	7,415 (338중)	4,484	60.5%	854.06	428.05 (50%)	426.01
계	10,507	30,042	21,583	71.8%	2,657.97	1,463.68 (55%)	1,194.29

註: 초·중·고 평균 보유율 72%, 부족금액 1,200억원 상당
자료: 교육부 과학기술과, '91. 5.

<표 2> 과학실험실습공간(실습교실)

학교별	확보율	설치기준	비고
국민학교	79%	• 48학급당 1실	기준외 24학급
중학교	71%	• 15학급당 1실	초과시는 1실추가
고등학교	59%	• 9학급당 1실	가능
평균	70%		

자료: 교육부 과학기술과, '91. 5.

오늘날은 기술주권시대, 技術霸權時代이다.

우리 경제가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산업으로 移行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발전이 당면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필수불가결의 요소라 할 것이다.

제정된 學校敎具設備基準令에 의거 각급학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종류와 수량만을 정한 것으로 여건이 달라진 오늘날은 이 기준 자체도 미흡하며, 실제로 여기에 나타난 확보율도 남아 못 쓰거나 고장난 기자재와 부서진 것까지 합치면 3분의 1수준도 못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열가지 기구 중 한가지만 없어도 실험이 안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확보율 70%와 실제 실험가능한 학교 70%라는 말은 의미가 서로 다르다 할 수 있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들은 실험기자재의 확보율이 100%를 넘어 150%~200%에 달하고 예비기자재까지

<표 3> 연간과학실험비: 소요재료비

학교별	학급당	1인/1일	적정확보액	비고
국민학교	2만원	400원/2원	25만원	· 1학급 50명 기준
중학교	10만원	2,000원/10원	45만원	· 연 200일 기준
고등학교	12만원	2,400원/12원	60만원	

자료: 교육부 과학기술과, '91. 5.

<표 4> '과학꿈나무'육성 주요회원 가입현황
('91년 8월 31일 현재)

(단위: 만원)

구분	회원수	금액	비고
정부기관	114	21,150	※100만원이상 가입
정당	12	1,500	"
정부투자기관	55	43,817	"
기업체	106	70,899	"
금융기관	46	33,200	"
연구기관	29	4,862	"
공공단체	42	16,114	"
일반인	29,446	54,171	일반회원가입
계	29,850	245,713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의 실력을
세계각국과 비교할 때
국민학생은 上位, 중학생은 中位,
고등학생은 下位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결과는 한국인이 근본적으로는 우수한데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능력이 저하됨으로써
사회구조와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비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며, 실험과정을 위해 셋트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 교사는 준비과정이 필요없이 지도에 전념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교생의 실습재료비는 1인당 1월 2원 꼴이며 50여명이 한 방에서 실험을 해야 하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대학입시제도에 있어서도 科學科目配點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 학과가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어 학교·학생·학부모 모두 과학을 소홀히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학은 다른 학문과는 달리 실험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학문이며 실험교육이 곧 과학교육의 성과를 좌우한다. 실험교육이란 관찰하고 측정하고 실험하는 활동이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시설과 충분한 실험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과학꿈나무 육성운동

최근 이와 같이 열악한 과학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사회일각에서 일고 있음은 참으로 희망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한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KBS·중앙일보사 등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 '꿈나무과학도 육성을 위한 초중등 과학실습 교육 기자재 보내기 후원회원모집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 운동은 '91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 동안 회원 50만명 모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회원·단체회원·특별회원으로 나누어 誠金을 받고 있다. 이 운동이 시작된 이후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취지에 호응하여 동참함으로써 8월말 현재 3만여명의 일반인

과 404개의 기관 및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총 24억 6천여만원의 금액이 모금되었다.

한편 본 운동의 목표기간을 '91년 12월말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가입회원의 회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과학교육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으나 다만, 이러한 운동이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과학하는 마음을 심고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과학꿈나무' 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면 큰 수확이라고 생각된다.

정부와 국민의 역할

기초과학교육환경의 개선은 당연히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이의 기초가 되는 초·중·고에서의 과학교육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도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지난해 기초과학교육비는 教育部 전체 예산의 0.29%이며 이는 전체교부금의 0.3%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래서 2000년대 기초과학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교육부는 5천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해 科學技術處에서는 대학에 우수연구집단을 설치운영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확충 등 기초과학 진흥에 주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財政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私教育費의 公教育費化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며 때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제부터라도 국민 하나 하나가 뭉치고 힘을 합하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제는 꿈나무 과학도 양성을 위해서, 과학기술교육 진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계를 비롯 사회인·기업인·학부모 등 모든 국민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함께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10년 후 21세기에 서서 지금의 과학교육을 되돌아 보았을 때 우리는 남부끄럽지 않게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민의 성원과 호응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남리
동지



최형규
농림수산부 농촌소득과 사무관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치가 및 관료의 관계

—日本の 경우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정책결정과정에는 여러 그룹이 참여한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정책은 이들간의 力學作用의 산물이다. 이 중에서도 官僚의 합리적 정책지향성과 정치가의 선거를 의식한 정치지향성은 갈등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나라의 정책결정에 커다란 變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型 정책결정모델에는 여러 學說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알려진 것은 보통 '철의 삼각관계'라고 불리는 엘리트 모델이다. 이는 自民黨·官僚·財界의 긴밀한 협력과 견제 관계에 의해 일본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모델이다. 혹자는 이것을 '日本株式會社(Japan Incorporated)'라고도 부른다.

이를 뒷받침하듯 '90년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日本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있는 그룹으로 31%가 대기업, 27%가 정당, 9%가 관료, 8%가 여론, 6%가 외부압력, 4%가 압력단체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는 10년전의 조사결과와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다.

明治時代 및 경제부흥기(1868~1955)

오늘날 일본 관료제의 형성은 明治維新(186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명치유신을 주도했던 하위계급 무사들에게 있어 관료주도형 국가건설은 그 당시 일본내외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天皇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관료들은 대내외 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다. 그후 명치유신의 주역들이 정치무대에서 사라져가면서 전문적인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 1877년 설립된

東京帝國大學의 졸업생들이 이를 매꾸어 나갔으며 1890년에는 國會가 탄생하였다.

제2차대전 직후 美軍政 당국은 신헌법에 의해 議會民主主義를 도입하였으나 미군정 당국은 舊軍閥 및 정치가 숙청, 재벌해체를 단행하면서 전후 일본의 사회개혁을 관료제에 의해 행한다고 하는 간접통치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관료는 온전하게 남은 유일한 그룹으로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었고, 전후 經濟復興이라는 지상목표달성을 위해 국가경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그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수 있었다.

1955년에는 자유당과 민주당의 兩保守政黨이 결합하여 자민당이 탄생하였다. 합당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自民黨내의 파벌정치는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일본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가 관료제를 존속시키는 동안 지방정부에서는 知事 선출과 같은 미국식 정치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일본 地方自治制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고도성장기(1955~1973)

자민당이 탄생한 1955년 이래 경제성장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 관료제는 팽창예산에 대한 통제권과 전문성 및 정보에 대한 독점으로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관료의 정당에 대한 우위현상은,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 合意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정당의 조직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정당의 가장 비중있는 리더가 관료출신으로 채워지던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성립되었다.

**日本型 정책결정모델에는
여러 學說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알려진 것은
보통 '철의 삼각관계'라고 불리는 엘리트 모델이다.
이는 自民黨·官僚·財界의 긴밀한 협력과
건제관계에 의해 일본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혹자는 이것을
'日本株式會社'라고도 부른다.**

前總理大臣 요시다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요시다스쿨'이라고 불리는 많은 전직 관료가 자민당에 스카우트되었다.

한편 1960년에는 야당인 사회당을 탈퇴한 40명의 의원이 민사당을 결성하였으며 1964년에는 創價學會가 공명당을 결성했다.

고도성장 이후 (1973~ 현재)

'73년 오일쇼크에 의한 일본경제의 저성장은 관료우위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72년에 성립된 다나카 내각은 관료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민당의 관료제에 대한 우위현상은 '黨高政低' 현상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관료제의 영향력 후퇴를 초래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오일쇼크에 의한 경제성장의 침체는 팽창예산에 종지부를 가져왔고, 이는 관료가 예산을 그 영향력 행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가 수월치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성장을 이룩한 후에 분배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였는데, 이는 관료가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로 폭넓은 조정능력과 정치력을 가진 自民黨의 결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셋째, 대외적인 경제개방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정치적인 감성과 결단을 요구하면서 관료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복잡한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서 自民黨의 개입을 자연스럽게 강화시켰다.

넷째, 정책결정에 있어서 自民黨의 적극적 개입동기는 자민당 내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민당내의 관료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민당 정치가가 당내부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책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黨運營 또는 政治資金 처리에 능력을 보여 주어야 했다.

그리하여 자민당의 政務調査會가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정무조사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17개의 部會와 장기정책 및 여러 부서에 관련된 정책을 심의·검토하는 調査會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제조사회·경제물가문제조사회·총합농정조사회 등이 유명하다. 자민당 政綱에 의하면 정책에 관한 모든 사항은 먼저 政務調査會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정무조사회에서 결정된 정책은 총무회의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넘겨진다. 관료들에 의해 입안된 정책은 보통 정무조사회의 部會에 상정되고 여기에서 관료들은 部會 소속 정치가들에게 정책설명을 하고 함께 토론도 한다. 자민당 국회의원들은 2~3개 부회 및 조사회에 소속될 수 있으며 해당분야 관료를 초청하여 연구회를 갖는 등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지식을 오랫동안 쌓아 가면서 그 분야 정책결정에 깊숙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소위 건설족·상공족·농림족 하는 '족(族)의 원'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族議員들은 단순히 정책통만은 아니다. 各部處 및 業界 등 특정집단의 개별이익을 옹호·추구하는 동시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특히 조사회의 正副會長을 비롯한 '族'보스들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왜냐하면 직업관료는 1년 또는 2년에 한번 자리를 바꾸지만 '족'보스는 10년 내지 20년 이상을 특정 행정분야에 관계하여 해당분야의 人脈과 실정에 정통해 있기 때문이다. 관료를 능가하는 법률지식과 노하우에다 정치력을 갖고 있는 '족'보스가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前總理大臣 다나카, 다케시다와 자민당내의 유력인사인 가네마루는 유명한 건설족들이고 와타나베派(전 나카소네派)의 보스인 와타나베는 농림족 보스이다.

예를 들면 농림분야에서는 '팔인방'이라고 불리는 농림족 보스의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이들은 쌀 收買價 결정시 農林水産省 간부와 농업단체 간부를 초빙, 각각의 입장을 듣고 자민당내 의원들과 의견교환을 한다. 또한 黨3役(간사장·정무조사회장·총무회장)·관방장관·재정당국과도 접촉하여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쌀 수매가 결정의 大綱을 결정해 나간다. 물론 정부내에서도 농림수산성과 예산권을 갖고 있는 大藏省과의 타협과 절충도 중요한 과정이다.

소비세·리쿠르트사건·농산물개방이 3대 이슈가 되었던 '90년 2월 衆議員選舉에서 소비세 도입 결정 당시의

세계조사회장 및 유력한 농림측 의원이 주부 및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낙선하여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이렇게 관료에 대한 자민당 우위현상이 나타나면서 '행정개혁'은 自民黨이 국가관료제의 팽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은행법 개정('81)이나 그린카드法('82)도입을 둘러싼 논의들이 자민당의 관료에 대한 우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고 있다.

'黨高政低' 현상에 대해 『아사히 신문』이 발행하는 주간지 『AERA』('90.3)가 大藏省·外務省·自治省·通産省 과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54%가 자민당이 관료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특히 36%는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답변), 이 중 거의 모든 自治省 과장들이 자민당 우위를 인정한 반면, 많은 대장성 관료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점이 특이하다.

일본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또하나의 특징으로는 비공식적인 절충이나 회의의 중요성을 꼽는다. 하나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각단계마다 행하여지는 비공식회의나 절충으로 정책의 큰 틀이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권의 최종적인 권한은 首相에 귀속되어 있어 수상이 각료나 黨3役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수상의 권한은 사실상 모든 정책결정에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수상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부는 輿論과 당내에서의 지지 정도에 달려있다.

일본의 이익단체

정책결정에 있어서 하나의 직접적인 참여그룹이며 정치가와 관료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한 나라의 利益團體는 보통 경제단체·노동단체·농민단체·시민단체로 대별된다.

일본의 경제단체로는 經濟團體連合會(經團連)·日本商工會議所·經濟同友會·日本經營者團體連盟(日經連)이 있다.

經團連은 대표적인 경제단체로서 자민당의 주요 政治資金源 역할을 하고 있으며, 日本商工會議所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표하고, 經濟同友會는 서비스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日經連은 노사관계(임금교섭 등)를 주로 다룬다.

노동단체로는 공무원노조 주축의 日本勞動者總評議會·私企業 노조 주축의 全日本勞動者總連盟 그밖에 中立勞動

組合連給會議·全國産業別勞動組合連合 등이 있었는데, 總評을 제외한 3단체가 '87년 日本勞動者總連合會를 구성하였고, '89년 連合에 總評 및 기타 公私 노조가 가세하여 조합원 880만명의 新連合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新連合을 필두로 全勞連·全勞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민단체로는 연합단체로서 조합원 834만의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全中)가 있으며 시민단체로는 주부연합과 같은 소비자단체가 대표적이다.

이익단체의 역할과 힘의 원천을 全中의 例에서 살펴보면, 全中은 쌀 수매가나 농업보조금 결정 등 주요 農政에 강력한 압력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국농민의 거의 100%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발군의 조직력과 전국市·町·村마다 설치되어 있는 7,785개에 이르는 단위농협의 농가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농민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1표의 차가 當落을 가르는 선거에서는 정치가는 표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보수지향이 강하고 유동적 요소가 적은 농민표는 보수여당(자민당)의 정치가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표밭이다.

이러한 점에서 농민과 결합하여 농촌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농협이 강력한 압력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89년 참의원선거시 종래 자민당의 절대안정기반이었던 東北·四國·北陸·九州의 1인선거구에서 농정에 대한 不信으로 농민들이 대거 기권함으로써 자민당에 커다란 타격을 준 적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금의 쌀 수입개방에 농림측을 비롯한 자민당은 표면적으로나마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나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압력단체간의 견해차(과위게임)도 흥미롭다. 예를 들면 경제단체인 經濟同友會는 그간 꾸준히 쌀 收買價 인하와 쌀 유통에 있어서 경쟁요소의 도입을 주장해 왔고, 經團連 쌀部會는 부분적인 쌀 개방은 불가피하며 식량관리법에 의한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제단체의 이러한 견해가 발표될 때마다 全中을 비롯한 농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해 왔고 경제단체 소속기업의 공산품 불매운동을 펴기도 했다.

따라서 경제단체의 部會 운영에 있어서 농림수산 관련 부회에 소속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 존립 필요성도 내부적으로 문제시되고 있기도 하나, 국가경제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결국 한 나라의 기초경제인 농업을 무시해서는 국가경제 전체에 관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존립이유일

것이다.

관료의 역할

정당의 優位體制에도 불구하고 관료제는 그룹간의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면서 합리적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주체로서 이익정치에서는 독립적일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며 결정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裁量을 갖고 있다. 이는 비단 일본만의 현상은 아니다. 민간부문이 팽창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가가 정부에 의해 '임명된' 관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더라도 관료제가 종래에 갖고 있던 힘의 원천인 예산, 認·許可에 의한 규제 등은 그 立地가 약해지고 있으나 관료제는 그 조직력과 더불어 특정분야에 항상 접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전문성 및 독점적 정보라는 자원을 여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어느 그룹보다도 특정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제시나 민간부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관료의 영역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의 산업정책에 있어서 通産省(MITI)의 행정지도는 유명헌데 차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에 의하면 외환관리에 대한 업무가 통산성에서 大藏省으로 넘어가면서 행정지도는 통산성의 산업정책 전개를 위한 주요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물론 최근에는 각 기업이 직접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관료가 갖고 있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아도 좋은 분야가 있다. 美國 워싱턴에 직접 사무소를 차리고 현지 로비스트를 고용하여 스스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美國 通商法 수퍼 301條의 발동으로 일본기업은 워싱턴 로비스트에게 2천만 달러를 지불했다는 설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이 관료제의 정보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관료의 정보는 민간의 정보수집능력이 없는 분야나 민간에서 지불하지 않는 분야에서 아직도 그 가치가 크다.

따라서 정보 수집능력이 약한 민간고객을 상대하고 있는 일본의 農林水産省이 담당분야의 정보소유와 문제해결책 제시라는 측면에서 通産省보다 그 고객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통산성 내에서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담당부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73년 오일쇼크에 의한
일본경제의 저성장은 관료우위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72년에 성립된 다나카 내각은
관료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민당의
관료제에 대한 우위현상은
'黨高政低' 현상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UR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私的部門이 발전해 있는 분야는 정부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정보망과 전문성에 의해 대응책을 마련해 가고 있지만, 농림수산업이나 각 교섭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은 고객 스스로에 의한 自救策보다는 관료의 전문성과 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정치가의 지원이나 결단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관료에 의해 정책결정이 주도되어 왔던 '60~'70년대의 開發經濟時代를 거쳐 앞서 언급한 日本의 정당우위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근래 들어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를 지향하자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3당 통합 후에는 민자당 내에 政策委員會를 위시하여 각종 정책개발기획단이 속속 발족되어 분야별 정책결정에 정치력과 전문성을 함께 발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 합당 후 개발한 최고의 정책상품이라고 하는 '농어촌구조개선 종합대책'은 제2정책조정실장을 반장으로 16명의 작업반이 정책토론회 4회·농어민간담회 16차례·농어촌 현장 답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에 소요된 경비는 5천만원이라고 한다(중앙일보, '91년 9월 1일 字 보도). 야당도 정책개발에 상당액의 경비를 투자하고 정책관계자들을 다른 부문 당직자보다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등 政綱政策 표방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정당과 관료들이 선의의 경쟁과 상호보완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이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